

2007

China

Japan

세계경제

Southeast Asia

India

지역별

Middle East / Africa

North America

10대 이슈

Latin America

Europe

Russia / CIS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 국 팀 hjpark@kiep.go.kr
일 본 팀 hkleee@kiep.go.kr
유 럽 팀 ktkim@kiep.go.kr
미 주 팀 kskwon@kiep.go.kr
동서남아팀 jwcheong@kiep.go.kr

연구자료 07-01

■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인쇄일 | 2007년 2월 28일

발행일 | 2007년 3월 12일

발행인 | 李 景 奭

발행처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9 FAX: 3460-1144

인 쇄 | 오름시스템(주) Tel: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 록 |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109-0 94320
978-89-322-2064-2(세트)

값 10,000 원

머리말

세계경제는 2006년 들어 4년째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일반적으로 급속한 기술혁신과 전세계적인 경제통합의 가속화가 밑받침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부문도 리스크 관리의 혁신 등을 통하여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되고 있어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4년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견실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전개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에도 세계경제는 이같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향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7년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경제성장 감속과 이에 따른 다른 국가들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부동산경기 of 급랭, 유가의 고공행진 등에 대한 당초의 우려와 달리, 올해도 미국경제는 3%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경제의 감속은 완만할 전망이고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지역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성장감속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 유로지역이 지난 6년 이래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최근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희소식 중 하나였습니다. 유로지역은 역내의존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미국경제의 감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은 2.2~2.4% 수준으로 약간 낮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상황도 유로지역과 유사한데, 성장률은 다소간 낮아질 전망이고, 향후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 이외에도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소비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 세계경제에서 고속성장세를 지속할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권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투자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률은 다소간 낮아진 9%대로 감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과 달리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인도는 급속한 물가상승 등의 불안요인에 의해 2006년의 8% 수준보다는 약간 낮은 7%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막대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동과 아프리카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문제, 이라크의 치안문제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이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CIS(독립국가연합)의 핵심 이슈도 에너지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가 의존도가 과도한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유가는 이들 지역의 경제안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를 축으로 남미 에너지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남미국가간의 경제적 결속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막대한 자원조달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권의 향방도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선 미국은 2008년 대선을 앞두고 2007년부터 대선레이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통상마찰이 세계경제의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고, 주요 통상국에 대한 통상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로지역은 국가별로 비준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EU 헌법 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고, 프랑스와 영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총리 교체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EU 및 유로존이 계속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이민정책의 조율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리더십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2007년은 덩샤오핑의 사망 10주년, 홍콩반환 10주년, 제17차 공산당대회 등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해입니다. 특히,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제 17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후진타오의 제2기 집권이 시작되며, 계층·지역·산

업간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도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가두마 선거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어, 2008년 3월에 있을 포스트 푸틴 정부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러시아의 WTO 가입, 러시아 및 CIS 국가간의 에너지 공급가격 분쟁 등이 이 지역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중남미에서는 좌파정부의 확산이 정치·사회의 변혁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1년간의 장기집권 이후 실권한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분열, 1959년 혁명 이후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집권하고 있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의 권력 이양은 중남미 전체구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경제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변동의 영향을 받아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의 FTAA 협상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대신 중남미국가와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화, 경제통합화 과정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자료는 일반 독자들이 2007년 세계경제의 향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집필되었습니다. 복잡다기한 세계 각 지역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별 이슈를 망라하여 주요 지역·국가별로 10대 중점 이슈를 선정하였고, 평이한 서술을 통해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유사한 출판물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각종 표와 그림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이 부담 없이 세계경제 이슈들에 접근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집필하는 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에 소속된 중국팀, 일본팀, 동서남아팀, 유럽팀 및 미주팀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 대부분이 참가하는 팀별 토론회 및 센터 토론회를 수차례 거치고 수정·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가 일반 독자들이 2007년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2월
원장 李景台

차례

머리말	3
-----------	---

중국

01. 2007년 중국 수출 1조 달러 진입	12
02.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중국의 금융개혁	14
03. 2007년 위안화 환율 전망	16
04. 중국 외환보유 1조억 달러의 의미와 시사점	18
05. 중국 1인당 GDP 2,000달러 시대 진입	20
06. 중국 친(親)노동정책 강화 예상	22
07. 중국 17차 당대회와 후진타오 2기 지도부 출범	24
08. 2008 북경 올림픽 개최 준비	26
09. 내외자기업 동등대우 시대의 도래	28
10. 홍콩 반환 10주년	30

일본

01. 일본경제 2007년 경기 전망	34
02. 소비세율 인상 논쟁	36
03. 금리인상 가능성	38
04. 엔화 환율 전망	40
05. 경기확대 지속을 위한 설비투자의 역할	42
06. GDP 2% 성장을 견인하는 개인소비의 향방	44
07. 새로운 경제성장 로드맵 추진	46
08. 고령화와 고용 연장	48
09. 양극화와 재도전 지원	50
10. 아베정부의 지지율	52

동남아 · 오세아니아

01. ASEAN 공동체 노력 가속화 및 동아시아 통합 논의 혼란	56
--	----

02.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및 서비스·투자협상 진행	58
03. ASEAN,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가속화	60
04. 자연재해와 동남아시아경제	62
05. 인도네시아 경기 전망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64
06. 베트남경제, 고도성장과 외국인투자 붐 지속 전망	66
07. 2007년 싱가포르경제, 성장 둔화 전망	68
08.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경제 현황 및 전망	70
09. 미국·말레이시아 FTA 협상	72
10. 호주의 대(對)동아시아 정책 강화	74

인도

01. 인도경제의 안정적 고도성장 가능성	78
02. 조정국면이 예상되는 인도 자본시장	80
03. 경제 고성장을 위한 FTA 추진 확대	82
04. 인도의 소비문화 변화와 소비확대	84
05.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86
06.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개시	88
07.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제조업 육성 확대	90
08. 인도 경제특구(SEZ) 신청 열기 가속화	92
09. 인도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 및 합병(M&A) 본격화	94
10. 확대되는 인도 식품산업	96

중동·아프리카

01. 국제유가와 중동경제 전망	100
02.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	102
03. 혼돈과 분열로 치달는 이라크	104
04. 중동 건설·플랜트시장 활황 지속	106
05. GCC,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 파급효과	108
06. GCC의 다각적 FTA 추진	110
07. 중동에 적극 다가서는 중국과 인도	112
08. 남아프리카공화국, Post-BRICs 신흥시장으로 부상	114
09. 리비아의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개혁	116
10.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118

북미

01.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증가	122
02. 달러화의 제한적 약세	124
03. 미국의 대(對)중 경제정책	126
04. 지정학적 변수	128
05. 미국 2008년 대선레이스 시작	130
06. 미국 금리정책의 향방	132
07. 미국 쌍둥이(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이슈	134
08. 미국 무역정책 변화	136
09. 미국 에너지 및 IT산업 정책 변화	138
10. 캐나다 보수당정부 집권 정책 변화	140

중남미

01. 중남미 좌파정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144
02. 미주자유무역지대(FTTA) 협상과 MERCOSUR·EU FTA 협상 전망	146
03. 남미 에너지통합 가속화 전망	148
04. 중남미 고성장 지속문제	150
05. 중남미·아시아 FTA 현황	152
06. 브라질 경제성장정책의 성공 가능성 및 경제회복 전망	154
07.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위기와 향후 전망	156
08. NAFTA 농업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멕시코 농업정책	158
09. 멕시코 제도혁명당 분열에 따른 정치변동 가능성	160
10. '포스트 카스트로' 쿠바의 정치·경제 전망	162

유럽

01. 2007년 EU 경제 전망	166
02. EU 헌법 비준문제로 양분된 유럽	168
03. 신 리스본 전략 이행과 성과	170
04. 주요국 대선 및 정치 현황과 전망	172
05. 유연안전성 정책 강화	174
06. 이민정책의 재정립	176
07. EU 가입 이후 신규회원국의 경제변화 추이	178
08.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확대 추이 및 전망	180

09. EU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한·EU FTA	182
10. EU의 새 에너지정책과 전망	184

러시아/CIS

01. 국제유가 변동과 러시아경제	188
02. 다가오는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190
03. 러시아, WTO 연내 가입	192
04. 러시아정부, 환율 절상과 인플레이션 해결 노력	194
05. 러시아의 자원민주주의 강화와 국영기업의 에너지자산 독점	196
06. 러시아/CIS 천연가스 공급가격 갈등	198
07. 중앙아시아, New Great Game 증폭	200
08. 아제르바이잔, 신(新) 실크로드 물류 허브로 부상	202
09. 우크라이나, 정치혼란으로 대내외 경제정책 난항	204
10.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 사후(死後) 정치·경제 전망	206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중국



KIEP

01

2007년 중국 수출 1조 달러 진입

2007년 중국 수출 1조 달러 달성 전망

2006년 중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27.2% 증가한 9,693억 달러, 수입은 19.9% 증가한 7,918억 달러로 1,77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유지하였다.

표.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년	2,492	27.7	2,251	35.8	241
2001년	2,667	7.0	2,436	8.2	231
2002년	3,256	22.1	2,953	21.2	303
2003년	4,385	34.6	4,131	39.9	254
2004년	5,936	35.4	5,608	35.8	328
2005년	7,623	28.4	6,602	17.7	1,021
2006년	9,693	27.2	7,918	19.9	1,775

자료: 중국해관통계

2007년에는 중국의 수출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은 금년도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조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수출액 1조 달러 달성은 2006년에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¹⁾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의 책임론 증폭

중국의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대외적으로는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의 책임론이 증폭되

1) 2005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수출액은 9,699억 달러, 미국은 9,060억 달러(2006년 1조 373억 달러), 중국은 7,623억 달러, 일본은 5,949억 달러였다.

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수출대국으로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그 결과 위안화 절상 요구,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특히 2007년에는 미·중 무역관계에 있어 중국이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의 첫 번째 수입대상국이 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무역정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2006년부터 수출 규제 강화,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축소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오염 관련 품목 및 자원류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흑자를 축소해간다는 기조 아래 원유, 자원, 원자재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입을 확대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중국의 수출 확대는 한국의 수입시장에 있어서도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7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대상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06년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85억 달러로 전년대비 25.5% 증가한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519억 달러로 7.2% 증가한 데 그쳤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추세가 2007년에도 지속되면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균형무역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무역적자 국가에 대한 압력도 강화해갈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무역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664억 달러 적자), 한국(417억 달러 적자), 일본(193억 달러 적자), 말레이시아(84억 달러) 등이다. 따라서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여건이 다소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압력이 커지면서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축소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²⁾

2) 2006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액은 2005년 233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20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02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중국의 금융개혁

제3차 금융공작회의 개최

중국정부는 제3차 금융공작회의(2007. 1. 19~20 개최)에서 국책은행 개혁, 농촌금융 개혁, 외환보유고 운용 등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³⁾ 주요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①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상업은행화 개혁 ② 농업은행의 상장을 포함한 농촌금융 개혁 ③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및 점진적인 금리 자유화 개혁 ④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및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 ⑤ 외환보유고 운용을 위한 외환투자공사 설립 추진 ⑥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게 될 통합 금융감독기구와 예금보험공사 설립 문제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WTO 가입 이후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외환관리 방식의 전환에 중점

중국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향후 중국의 금융개혁에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는 중국의 새로운 금융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금융개혁은 소요자금의 조달과 오랜 관행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 중 중국정부는 은행개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금년도 중국의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과다한 외환보유고에 대한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3) 금융공작회의는 총리를 비롯한 최고 국무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제1차 회의는 1997년에, 제2차 회의는 2002년에 개최되었다. 이후 대대적인 금융개혁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금융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표. 중국 주요 상업은행의 상장 현황

은행명	주요 내용	자본조달액
교통은행	2005년 6월 홍콩증시 상장	22억 달러
건설은행	2005년 10월 홍콩증시 상장	92억 달러
중국은행	2006년 6월 홍콩증시 상장	112억 달러
	2006년 7월 상하이증시 상장	25억 달러
중국상업은행	2006년 9월 홍콩증시 상장	24억 달러
공상은행	2006년 10월 상하이·홍콩 동시 상장	190억~210억 달러

보이며, 이를 위한 외환투자공사 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구 개혁에 있어서는 국유상업은행을 개혁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년 중 중국농업은행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외화자금의 투입과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⁴⁾

또한 자본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비유통주의 유통주 전환, 기관 및 외국인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자금조달의 간접금융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 확대 예상

중국의 금융개혁 과정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중국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안화 예대출 업무가 허용됨으로써 외국계 은행의 중국내 현지법인 설립이 가속화될 것이며,⁵⁾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다국적 금융기관의 지분참여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금융기관 역시 중국 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07년은 우리 금융기관이 중국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溫家寶 총리는 “무역불균형 심화, 금융기업의 부실한 지배구조, 농촌금융의 취약성 등이 중국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China Daily*, 2007. 1. 21).

5) 중국의 개인(1,329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그들의 예금을 서비스가 양호한 외국계 은행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외국계 은행에 대한 중국 개인의 인식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na Daily*, 2007. 2. 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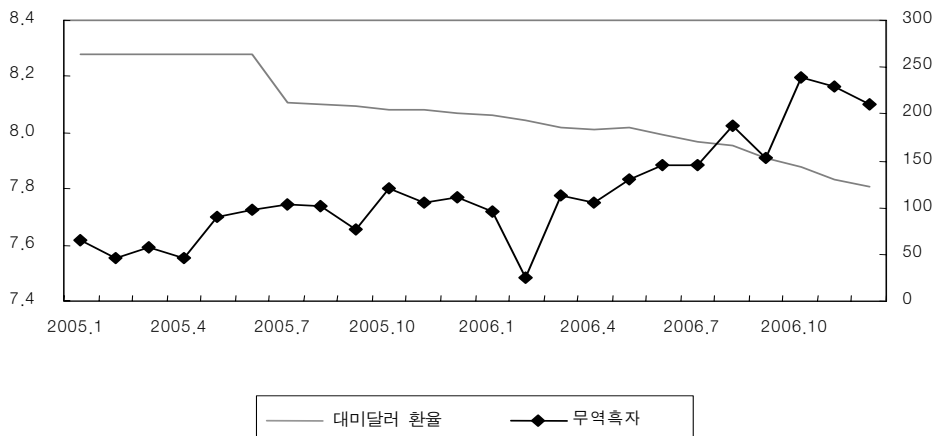
2007년 위안화 환율 전망

2007년에도 위안화 절상 압력 지속

중국은 2005년 7월 미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던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복수통화바스켓 제도(basket peg)를 채택하는 내용의 환율제도 변경을 단행하였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미 달러 대비 위안화의 명목환율이 2.1% 전격 절상되었으며 이후 2006년 말까지 3.7%가 추가 절상되었다. 하지만 환율제도 변경 이후에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위안화 평가절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6년 2월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그림. 중국의 무역흑자와 위안화 환율의 변화 추이 ■

(단위: 억 달러)



위안화 절상의 대내외적 필요성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위안화가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일 것인가

가, 위안화 가치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 혹은 현재의 일일환율변동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위안화의 재평가 및 환율유연성 확대 가능성은 대외요인과 국내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위안화 절상 압력의 가장 중요한 대외요인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와 이와 관련된 글로벌 불균형 문제이다. 중국은 환율제도 변경 이후 1년 동안의 무역흑자 규모가 변경 이전 1년 동안에 비해 59.3% 증가하는 등 무역흑자 규모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측 통계에 따를 경우)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04년 803억 달러에서 2005년 1,142억 달러, 2006년 1,442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과 관련된 국내요인은 과잉유동성 및 국내경제 불균형문제이다. 이는 외환보유액 급증에 따른 통화팽창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와 이자율 등에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과잉투자 억제 정책과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 과도한 금리인상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투기자금의 유입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어 경기연착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위안화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상반기 중 3% 내외의 추가적인 절상 예상

이와 같이 중국의 대규모 외화유입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이와 관련된 글로벌 불균형문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국내 거시경제 불균형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위안화 변동폭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환율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내외 위안화 절상 요인들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의 절상 속도 및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변동폭이 확대되더라도 위안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가 현재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2007년 상반기까지의 추가절상폭은 대체로 3% 내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2007년 6월 말 위안화 환율은 7.55~7.6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04

중국 외환보유 1조억 달러의 의미와 시사점

2006년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 663억 달러

최근 들어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2월 말 현재 누계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663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외환보유 규모는 일본(8,969억 달러), 러시아(2,834억 달러), 대만(2,651억 달러), 한국(2,389억 달러, 이상 11월말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3년에 4,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2004년에 6,000억 달러, 2005년에 8,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역흑자의 급속한 증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유입, 투기성자금의 유입 등으로 인해 외화유입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중국의 외환보유액 구성 현황

(단위: 억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보유액	2,121.7	2,864.1	4,032.5	6,099.3	8,189.0	1,0663.0
연간 증가액	466.0	742.4	1,168.4	2,066.8	2,089.7	2,474.0
무역수지 흑자	230.9	303.4	253.8	328.4	1,021.0	1,774.7
FDI 유입	468.5	527.4	535.1	606.3	603.3	630.2
기타 유입	-233.4	-88.4	379.5	1132.1	465.4	69.1

자료: 중국인민은행, 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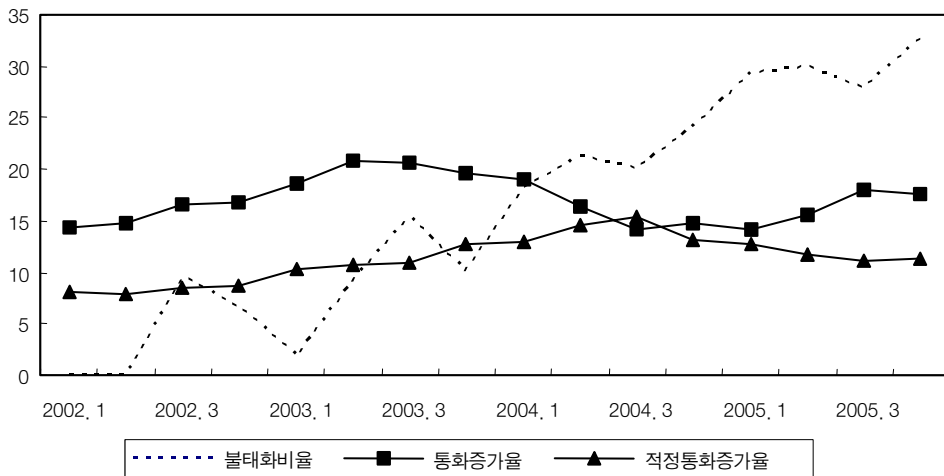
과다한 외환보유가 과잉유동성과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

중국의 경우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물가상승압력 가중 및 실질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져 중국정부의 경기연착륙 목표를 방해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채

권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국으로서는 환율의 재조정 없이 중앙은행의 불태화정책(sterilization)만으로 외환보유액 급증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의 불태화비율은 2002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 1/4분기 말 현재 39%에 그치고 있어 민간부문의 통화증가율이 적정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존의 불태화정책으로는 외환보유고 급증에 따른 통화량 증대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6년 중국의 통화증가율(16.9%)은 적정수준(12%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4/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5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2.03%)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실질이자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중국의 분기별 불태화비율 및 통화증가율

(단위: %)



환율 조정, 해외투자 확대, 달러표시 자산의 재조정 가능성 증대

중국의 경우 지나친 외화보유액 증가는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환율조정의 필요성과 환율조정에 따른 환차손 사이의 괴리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화 및 외환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과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외환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에너지자원 등에 대한 해외투자를 증대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달러화표시 자산의 재편성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05

중국 1인당 GDP 2,000달러 시대 진입

1인당 GDP 2,000달러 돌파 예상

중국의 1인당 GDP는 2000년 말 875달러로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연평균 9%가 넘는 성장률을 지속, 2005년에 1,740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2007년에는 2,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된다.⁶⁾

1인당 GDP 2,000달러는 중국 전역의 평균치이다. 지역별 경제발전 편차가 큰 중국에서 빈곤층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농촌인구가 약 7.5억 명(전체 인구의 약 57%)이라는 점, 그리고 도시·농촌간 평균소득 격차가 3.3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대도시의 1인당 GDP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⁷⁾

표. 중국 주요 지역별 1인당 GDP(2005년 기준)

(단위: 달러)

상하이	베이징	톈진	저장	장쑤	광둥	산둥
6,613	5,698	4,517	3,509	3,143	3,035	2,568
랴오닝	푸저엔	헤룽장	지린	중칭	하이난	구이저우
2,439	2,386	1,855	1,712	1,411	1,387	669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6

- 2007년 2,000달러 돌파는 2006년~2010년 사이 중국의 GDP 성장률과 인구 성장률을 각각 10%와 0.6%로 가정한 결과이다(『新浪财经』, 2007. 1. 11). 한편, 2006년 1인당 GDP의 공식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1,937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2006년 중국 전체 GDP 20조 9,407억 위안을 중국 전체 인구 약 13억 8,600만 명으로 나눈 수치이다(1위안=7.8달러로 계산).
- 실제로 최근 지방정부별로 발표하고 있는 2006년 주요 지역별 1인당 GDP를 살펴보면, 베이징(北京)이 6,346달러, 톈진(天津) 5,177달러, 광저우(广州)가 7,800달러, 선전(深圳) 8,800달러 등을 기록하였으며, 상하이(上海)는 약 7,60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 소비의 고급화·서비스화 추세 가속화

1인당 GDP 증가율의 가속화로 중국의 소비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 증가를 나타내는 소비재 판매 총액은 2000년 이후 12~14%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정부의 농촌지원 정책⁸⁾과 농민공(农民工)의 송금 증가 등으로 농가의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13%대의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도시지역 소비도 고용개선,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특히 대도시의 중산층의 주택소유 증가로 가정용 내구재의 수요가 대형화·고급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가 내구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교통·통신비, 의료비, 교육비, 여행·레저 등 서비스관련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인당 GDP 2,000달러 돌파로 중국의 소비패턴은 보다 고급화되고 소비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7년에도 중국정부는 농촌과 도시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⁹⁾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소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국정부는 2007년 경제운영에 있어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안정성장 지속’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어서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비 확대의 걸림돌과 과제

그러나 중국의 진정한 소비인구 수가 아직 적고 대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데다,¹⁰⁾ 도시지역의 경우 의료, 교육, 주택 등을 위한 예비적 저축의 동기가 작용하여 저축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도 도로, 전기, 수도 등 공공설비, 공공서비스 낙후라는 비(非)소득적 요인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소비재 소비와 관련 없이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해야 하는 인구가 2억~3억 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 수요가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8) 농업세 완전 폐지, 농촌 의무교육 도입, 농촌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곡물 생산 및 농기구 구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촌 인프라 건설의 지속적 확충, 농업의 산업화 추진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양로보험, 최저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시스템을 도입하여 농민의 권익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9) 공무원의 급여 인상, 의료 및 교육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강화, 소비세 조정, 개인 소득세 과세징수 기준 상향조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10) 의미 있는 소비자로 평가되는 일인당 소득 5,000달러 이상의 인구만 보면 장강삼각주지역에 8,200만 명, 주강삼각주지역에 4,300만 명, 북경·천진지역에 2,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財經』, 2006. 12. 18).

06

중국 친(親)노동정책 강화 예상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 강화와 경제적 약자 보호

2005년 말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2006~10년)’에서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경제적·사회적 불안요인들을 완화하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 안정을 목표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사회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취업 확대,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건립, 도시 유입노동자(农民工)의 사회보장문제 해결, 요소공헌도에 따른 소득분배, 소득격차 해소 노력’ 등을 의미한다.

단기고용 관행, 임금 체납, 무단 해고,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정책 목표의 설정에 따라 중국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노동자 권익 보호, 「신(新)노동계약법」 실시로 더욱 강화될 것

우선 중국정부는 고용안정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규정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 지방정부별로 2년에 최소 1회 이상 그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¹¹⁾ 또한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와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해 노동조합 성격의 공회(工會)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2007년 말까지 외자기업의 노조설립 비율을 70%로 확대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사회보장 강화·장기고용·경제보상금(퇴직금) 지급·파견 노동자 1년

11) 2006년 중 주요 투자지역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베이징 640위안(이전 임금 대비 10.3% 인상), 상하이 750위안(8.7% 인상), 톈진 670위안(13.6% 인상), 산둥성 610위안(15.1% 인상), 저장성 750위안(11.9% 인상), 장쑤성 750위안(21.0% 인상), 광둥성 780위안(14.7% 인상) 등이며,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경우 이전 임금 대비 각각 44.4%와 41.7% 인상된 650위안과 510위안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표. 중국 신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내용(현행 노동법과의 비교)

구 분	현행 노동법	신노동계약법 초안
노동계약의 체결 형식	▶ 서면 노동계약 시에만 노동관계 성립	▶ 실질적 노동관계 존재시 노동계약 체결로 간주
사용(試用) 기간	▶ 최대 6개월	▶ 직종별로 한도 설정
경제보상금 (계약 만료시)	▶ 지불 불필요	▶ 지불 의무 (노동계약 해지 종류에 따라 지불)
파견노동자 사용	▶ 규정 없음	▶ 1년 이상 사용 금지 ▶ 노동인력 파견 업체의 등록자본금 명시, 경영기준 강화
취업규칙 제정	▶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	▶ 취업규칙 제정 및 사내공고 의무화 ▶ 노조와의 협의 · 동의 취득 의무화
해고시 노조의 사전 의견 제출권	▶ 노조의 사후 의견 제출권 규정	▶ 노조에 사전통지 의무화 ▶ 노조의 사전 의견 제출권 부여
구조조정시 인력 감축	▶ 규정 없음	▶ 50인 이상 감축시, 노조와 협의 ▶ 최근 입사자 순으로 감축

자료: KOTRA, 「중국 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쟁점」.

이상 사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노동계약법 초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환경과 관련된 최근 중국내 이러한 변화는 농민공(农民工),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정부는 노동문제를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내수 진작을 위한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화로운 사회 구현'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 기업의 노동 관련 비용 상승 압력 가중

중국의 친노동정책 지속으로 기업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제도 실시로 지역별로 매년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이에 따른 복지비용(양로, 실업, 의료, 생육, 공상보험, 주택공적금 등) 상승으로 인건비는 급속히 상승할 것이다. 게다가 2007년 2월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차 심의 중인 「신노동계약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비용 상승은 물론 노조의 발언권 강화로 노사간 마찰과 갈등이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도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변화하는 중국의 노동환경과 노동정책에 대비한 노무관리체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07

중국 17차 당대회와 후진타오 2기 지도부 출범

2007년 가을 제17차 당대회 개최 예정

2007년 가을에 열릴 제17차 공산당대표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2기 지도부가 출범할 예정이며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가 수반하는 경제적인 변화는 올 한해 중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우방궈 등으로 구성된 현 지도부의 집권이 지속될 전망이다. 후진타오는 1940년 전후 출생자로서 문화대혁명 이후 활동을 시작하고 1990년대에 중앙 정계에 진출한 4세대 지도부이며, 집권 2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자신의 권력기반인 친(親)후진타오 성향의 ‘공산주의청년단’ 출신 인사 및 칭화대 출신의 고학력 인재들을 등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 지도부는 권력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며 권력기반을 확고화할 것이다. 후진타오는 작년 9월 상하이방 핵심인 천량위 상하이시 서기를 해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02년 취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위민정치(爲民政治)에 힘입어 국민의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당대회 이후 정책기조 변화 예상

이러한 정치바람은 중국의 경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17차 당대회를 통해 출범할 후진타오 2기 지도부는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자원의 효율적·형평적 배분을 중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후진타오는 지난 16기 6중전회에서 ‘화해(和諧)’를 정치슬로건으로 택함으로써 ‘사회주의식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1978년 이래 심화된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4세대 지도부의 신지도이념이며, ‘선부(先富)를 통한 균부(均富)’에서 ‘자원 재분배를 통한 공부(共富)’로의 선회는 이전 성장노선의 수정을 의미한다. 신지도이념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될 것이며, 특

히 민생문제, 공평사회 촉진, 빈부격차 축소, 의료·교육·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는 신지도부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서 사회적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분배 정책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에 뒤떨어진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 저변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공산당의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지도부는 또한 경제성장 및 대외무역 측면에서도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기존의 저부가가치·환경오염 산업에 의존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과학적 발전론’에 입각한 질적 성장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주력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2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할 것이다. 수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출제품 고도화 및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WTO 가입 당시 약속했던 시장개방 일정이 작년 말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개방 확대 압력에 따른 대응보다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지속 전망

새 지도부가 출범할 시기에 경기 활황을 원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는 중국의 공산주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권 초기에 이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를 위해 중국 정치권은 현 경기호조를 지속하기 위해 고정자산 투자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보인다. 소비 진작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고정자산 투자를 늘리는 것이 보다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고정자산 투자가 24% 증가해 정부의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경기과열 때문에 이를 억제해야 하지만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세 차례의 당대회 직전, 그리고 뒤이은 새로운 지도부 형성 시기마다 고정자산 투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또한 같은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중국의 신(新)정권 출범 당시 경제지표

(단위: %)

	14차 당대회			15차 당대회			16차 당대회		
	1991년	1992년	1993년	1996년	1997년	1998년	2001년	2002년	2003년
실질 GDP 성장률	7.7	12.8	12.7	8.9	9.3	7.8	8.3	9.1	10.0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23.8	44.4	61.8	14.5	10.1	13.9	13.0	16.9	28.4
소비 증가율	13.4	16.8	13.4	20.1	11.1	6.8	10.1	8.8	10.9
CPI 상승률	0.3	2.9	7.8	-7.5	2.8	-0.8	0.7	-0.8	1.2
수출 증가율	15.8	18.1	8.0	1.5	21.0	0.5	6.8	22.4	34.6

08

2008 북경 올림픽 개최 준비

2008년 올림픽 준비를 위한 투자 지속

중국은 올해 2008년에 열릴 북경 올림픽 준비 마무리로 분주할 예정이다. 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이자 개최국에게 새로운 경제단계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기회로서 중국은 이를 십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베이징, 새로운 올림픽’이라는 슬로건하에 2007년 한해에만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도심 교통환경 개선,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 원활화, 도심 미화작업 등에 중점을 둔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제29회 올림픽을 위한 모든 경기장이 2007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라 발표했다.

중국은 또한 향후 5년내에 기존의 지하철 노선을 개선하고 신노선을 건설할 것이며 올림픽 빌리지와 경기장까지 잇는 특별 노선 또한 구상 중이다. 이러한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자동차 사용자에게 따른 북경내 교통체증을 완화하

표. 북경 올림픽 주요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내 용	비 고
경기장	- 총 37개 경기장 건설 - 올림픽 공원, 선수촌, 전시컨벤션, 문화시설 건설	21억 달러
인프라스트럭처	- 도시철도, 시내도로망, 북경공항, 천연가스관	217억 달러
환경	- 쓰레기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 올림픽선수촌에 태양열에너지시스템 도입 - 공해유발공장에 환경보호기술 도입	86억 달러
철강	- 1,500만 달러 규모 더블코팅라인 건설	-
정보통신 인프라	- 전자정부, e-비즈니스, 지역사회정보화, 원격교육시스템	36억 달러
통신네트워크	- 北京電信(Beijing Telecom)의 선진국 수준 개발	66억 달러
호텔경영	- 호텔경영 위탁, 호텔경영 컨설팅 서비스 수요 증가	-

자료: 무역협회(www.kita.net)

기 위해 효과적일 것이다. 베이징시는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165억 달러에 달하는 약 387건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중국 및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디지털분야 투자 및 환경정비사업 강화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외에도 중국은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선진 제조업, 지식형 서비스업, 현대적인 유통업, 관광 및 컨벤션업 등의 4대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디지털 올림픽’이라는 슬로건하에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11차 5개년 경제계획(2006년 10월)에서 이를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북경시는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6년에 약 15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녹지대를 조성하고, 2007년 한해에 도시와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북경 올림픽은 중국경제 구조변화의 계기

중국은 올림픽 준비 사업을 통한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효과로서 경기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 소득 증가 효과, 그리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건축·부동산·교통·서비스 산업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인 효과는 올림픽 개최의 국내외적 영향을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올림픽 준비와 개최를 대내적으로는 국민 통합의 기회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기술과 문화를 홍보하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기대효과 이면에는 잠재적 위험요소도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올림픽과 관련한 맹목적 투자, 올림픽 개최국의 경제가 올림픽 이후 쇠퇴하는 현상을 일컫는 ‘포스트 올림픽 신드롬’, 소비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가능성,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올림픽 개최라는 정치·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며, 2007년은 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산업개발,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무대에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플레이어가 된 중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올림픽 준비를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09

내외자기업 동등대우 시대의 도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현황

중국은 1990년대 들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자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으며, 가장 주요한 혜택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는 각각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暂行조례(企業所得稅暫行條例)」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에 따르고 있으며, 두 법안을 근거로 내외자 기업에 기업소득세를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고 있다.

국내기업은 33%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고 있지만, 외자기업은 입주 지역에 따라 15%, 24%, 33%로 다르며, 국내기업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영업이익 발생연도부터 2년간 면세,

표.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분야별 소득세율 우대 현황

(단위: %)

구분	전국 공통	경제 특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서부지역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개방도시 및 지역
생산활동 기업	30	15	15	24	24
비생산활동 기업	30	15	30	30	30
특정산업					
3,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지식· 기술집약사업	30	15	15	15	15
에너지, 교통, 항구사업 등	15	15	15	15	15
우대기간 만료 후 생산제품 70% 이상 수출기업	15	10	10	12	12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사업기간 10년 이내 금융기관	30	15	15	15	15
지방소득세	3	1.5	1.5	2.4	2.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3), 『중국 서부지역의 진출유망 산업과 우리의 진출전략』을 박세근(2004. 5), 『중국기업 소득세 단일화 전망』, 『수은해외경제』에서 재인용함.

이후 3년간 50% 감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兩免三半減).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이 상당 부분 폐지되고 외국기업에 대하여 내국민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의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은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기업소득세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2007년 새로운 「기업소득세법(企業所得稅法)」 통과 예상

현재 2007년 3월 제10기 전인대(全人大) 5차 회의에 상정이 확정되었으며 입법 예고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로 예상된다. 개정의 골자는 현행 양분되어 있는 내외자기업 소득세법을 「기업소득세법(企業所得稅法)」으로 병합하고 기본 세율은 25%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다만, 초안 공포 이전에 이미 설립되어 기존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단일화 이후에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종래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예기간을 둔 것은 기업소득세율이 단일화되면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는 증가하지만, 수적으로 훨씬 많은 내자기업으로 부터의 세금 징수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 당시 중국의 각종 세수우대 정책을 약속 받았던 외자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중 투자기업의 조세부담 가중 예상

기업소득세가 단일화되면 중국 내자기업에는 현행보다 낮은 세율이, 외자기업에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외자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세제혜택의 기준이 외자기업 여부가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 내자기업과 가격경쟁이 심한 산업에서의 외자기업에는 특별히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 다수를 차지하며 중국의 세제 변동에 대응할 능력이 미약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

홍콩 반환 10주년

일국양제의 내정불간섭과 대륙과의 경제융합 강화

2007년 7월 1일로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중국 반환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중국의 홍콩 통치원칙인 일국양제(一國兩制)는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체제하에서 중국은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을 견지해왔다¹²⁾. 2005년 3월 10일 둥젠화(董建華) 초대 행정장관의 갑작스런 임기 중 사퇴¹³⁾는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하였고, 2003년에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 등 반환 이후 대륙과 홍콩간의 정치·사회적 갈등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은 정치적인 직접적 내정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륙과 경제적인 융합을 강화하는 대(對)홍콩 정책을 구사해왔다.

표. 반환 이후 10년간 홍콩의 GDP 성장률 및 대중무역의존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성장률	11.0	-5.3	-2.0	3.8	-1.2	-1.7	-3.4	4.7	7.0	6.5
*대중무역의존도	36.3	37.6	38.6	38.9	40.3	41.8	43.1	43.7	45.0	46.4

자료: 홍콩특별행정자치구 정부 홈페이지

주: * 홍콩 전체 무역량에서 대중국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

대륙·홍콩 CEPA 체결, 금융기능 촉진 등 경제 유대관계 강화

중국정부는 2006년 처음으로 홍콩을 국가 5개년 개발계획에 편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범주강삼각지역(泛珠三角区域)¹⁴⁾의 긴밀한 경제협력과 홍콩과 대륙의 경제융합을 주요 골

12) 이에 따라 반환 당시 중국은 외교·안보 등 대외적인 주권행사와 관련된 사항만 중국정부가 관할하고 자본주의체제 등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항은 향후 50년 간 홍콩인들이 직접 다스리도록 하였다.

13) 현재 도널드 창(曾蔭權)이 둥젠화의 잔여 임기인 2007년 6월까지 행정장관직을 맡고 있으며, 2007년 3월 실시되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자로 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체결된 대륙·홍콩 경무관계긴밀화협정(CEPA)과 ‘개인 여행허가’ 등의 정책을 통해 대륙과 홍콩간의 실물 경제교류를 촉진해왔다. CEPA는 범주 강삼각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선전(深圳)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이 지역에서 홍콩 CEPA를 통해 수입한 화물 수입액은 1억 1,200만 달러(동기대비 38.3% 증가, 세금 혜택은 6,924만 5,000위안(48.6% 증가)에 달하였다.

또한 중국의 간섭으로 인한 경제자유도의 하락으로 홍콩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여전히 홍콩은 매력적인 FDI 투자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홍콩의 FDI 유치 순위는 아시아 2위, FDI 유입량은 전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반환 초기 사회주의 중국의 통제로 금융기능이 시들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2006년 홍콩증시는 412억 달러(약 38조 4,000억 원)의 자본을 조달해 경쟁도시인 런던과 뉴욕의 기업공개 규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현재 홍콩증시에 350여 개의 중국기업이 7,000억 달러를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 홍콩증시에서 이루어진 신규 기업공개 물량 가운데 중국 본토기업의 비중은 92%에 달했고, 2006년에는 홍콩 발행 H주 시장에 중국 공상은행, 중국은행과 초상은행(招商銀行)이 상장되었으며, 이보다 먼저 건설은행과 교통은행이 상장되었다. 이처럼 홍콩 금융시장은 중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장관 선거 이후 친중(親中) 성향 강화 예상

2007년 3월 실시되는 행정장관 선거 결과를 중국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환 이후 실시된 3차례의 행정장관 선거에서는 친중(親中)파 단일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으나, 2006년 행정장관 선거인단 투표에서 민주파가 100석 이상을 차지하며 후보출마 자격을 획득하여 최초의 경선이 치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이변이 없다면 현 행정장관인 도널드 창 후보가 연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향후 CEPA의 확대실시와 홍콩을 통한 대륙 투자의 증가, 대륙 기업의 해외 진출에 교두보로서 홍콩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홍콩과 대륙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 범주강삼각지역: 푸젠(福建), 장시(江西), 후난(湖南), 광둥(廣東), 광시(廣西), 하이난(海南),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9개 성과 홍콩, 마카오 3개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지역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일본



KIEP

01

일본경제 2007년 경기 전망

일본의 금리 및 환율 동향에 대한 관심 고조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가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주지하다시피 2002년 2월부터 경기회복이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회복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경제는 2004년과 2005년(fiscal year) 각각 2.0%와 2.4%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06년에도 약 2.1%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거시적 동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거시경제 동향에 따라 일본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엔캐리 자금을 차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금리동향에 따라 기업들의 금리부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일본의 환율이 거시경제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환율은 금리보다 훨씬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약 1.9%의 실질성장 예상

대다수 일본의 경제예측기관은 현재의 경기확대국면이 2009년 3월까지 지속되다가 2009년 4월 이후에 경기후퇴국면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2009년 소비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2009년에는 국민연금의 국고부담금 비율이 현행 1/3에서 1/2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부담의 증가를 보충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2008년 중에 경기후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러한 예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과잉투자에 따른 재고 및 생산조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기업들은 매우 왕성한 투자활동을 보여왔다. 그러나 왕성한 투자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고의 누적에 따른 투자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의 일본경기에 대해 예측기관의 대부분은 경기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금년 1년 동안은 현재까지의 확대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 GDP 성장률은 실질 1.9%, 명목 2.2%로 예상되고 있고 물가는 약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0.5%의 단기금리(무담보 콜금리, 익일물)는 연말에 약 0.8%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으나,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이 매우 가변적이며 또한 금리인상이 물가나 소비 등 거시경제동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경제, 환율, 소비회복세가 일본경제의 중요 변수

일본의 경기 확대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역시 미국경제 동향이다. 2006년의 일본 경제동향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3/4분기에 내수가 크게 위축된 반면 수출증가가 겨우 플러스 성장을 지탱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3/4분기에는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을 크게 저하시켰다. 투자도 약간 감소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느낌이 든다. 이러한 내수감소를 수출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위축은 일본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쌍둥이 적자로 인한 달러화 약세, 주택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비약화 등 위험요인이 있으나 경기의 급속한 냉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율도 일본경제의 거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의 하나이다. 현재는 엔화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세국면이 강세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미국경제의 감속 등으로 환율이 엔고로 전환될 경우 일본의 해외수출과 기업수익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화 환율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민간소비는 2006년 여름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감소세가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감소세가 이어질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민간소비의 향방은 향후 투자활동의 약화가 예상되고 있는 현재의 국면에서 확대국면의 지속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경제의 감속, 엔고로의 전환, 소비회복세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앞으로도 2년 정도는 경기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2월 일본은행이 콜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것은 일본경제에 대한 일본은행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02

소비세율 인상 논쟁

재무성과 아베정부간 의견차이

현재 일본에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는 재정건전화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안고 있는 정부부채는 약 800조 엔으로 GDP 대비 무려 1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부채의 급속한 팽창을 막고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증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매우 넓고 또한 일본정부의 국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세율을 인상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인상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아베정부와 재무성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세보다는 세출삭감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더구나 2007년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그 과실로서 세수 증대도 기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함으로써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었던 1997년의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재무성은 세출삭감만으로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을 뒤로 미룰수록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민적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줄다리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또한 누구의 주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주장인가? 향후 일본의 재정과 경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될 것이다.

소비세 인상은 다수의 분야에 심대한 영향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재정 및 소비,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대립은 일본사회에 대해 음미할 다양한 소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재정건전화 문제는 그 하나에

불과하다. 소비세 인상은 조세수입을 늘이는 반면 경제활동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는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잡힌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소비세 인상문제는 연금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다. 고령화와 자녀수 감소로 인하여 연금지급에 대한 정부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그 재원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중심에 소비세가 있다. 소비세를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그것인데, 소비세를 연금재원으로 목적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연금수입의 범위 내에서 연금지급액을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세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는 감가상각제도와 증권세제가 있다. 감가상각제도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또한 상각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증권세제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이익에 대해 경감세율 10%(통상세율은 20%, 2007년이 기한)의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개인의 주식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다.

2009년쯤 소비세 인상 단행될 듯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베정부는 당분간 소비세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이 현행 1/3에서 1/2로 증가하는 등 사회보장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7~10% 정도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일본경제도 약간의 감속이 예상된다.

표. 일본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내역

(단위: 억 엔, %)

	일반회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기타세수	기타수입	공채수입
금액	796,860	127,880	130,580	105,380	94,940	38,350	299,730
구성비	100	16.0	16.4	13.2	11.9	4.8	37.6

자료: 재무성 홈페이지

03

금리인상 가능성

2007년 1월 금리인상 연기

일본의 금리정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어왔던 양적 완화정책이 2006년 3월 해제되고 같은 해 7월에는 이른바 제로금리정책도 해제되었다. 그리고 2007년 1월 까지 일본은행은 콜금리의 유도목표를 0.25%로 설정하여 금리정책을 운용해왔고 또한 일본은행의 대출 금리도 0.4%로 인상하여 운용해왔다. 이러한 금리변화 추세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는 한국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정책과 관련하여 2007년 1월에 결정된 금리인상 연기는 향후의 금리변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행의 경기판단이 아직 금리를 인상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일본은행은 2006년 여름부터 주춤해진 민간소비가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금리인상 연기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행은 미국의 FRB처럼 거시경제동향과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보다는 물가, 성장 등 거시경제동향을 주시하면서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의 금리동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이른바 “시장과의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유도해왔다. 즉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시장에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일본은행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주체의 실제 행동을 유도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는 당연히 일본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월의 금리인상 연기결정에는 금년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자민당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였다는 추측도 있다. 일본은행의 독립성에 상당히 큰 타격이 가해진 셈이다.

물가상승률 및 성장률 등 거시변수의 향방이 금리를 결정

이처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거시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 시기 및 속도를 추측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금변에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금리인상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유가하락 및 2007년 상반기의 경기조정국면 지속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 전후에서 추이할 것으로 보여 단시간내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예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상승률이나 경기동향지수 등 일본경제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을 정확하게 관측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엔화 약세현상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지도 일본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지난 2월 콜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6년 10~12월 GDP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인상기조가 2007년에 지속될지 여부는 향후의 물가, 성장률 등 변수의 동향에 달려 있다.

2007년에 대폭적인 금리인상은 없을 듯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2007년 이내에 일본은행이 대폭적으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금리인상의 폭은 어떨까? 지난 2월 0.25%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였지만, 2006년 하반기 이후에 나타난 일본경제의 회복세 둔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세 전환 가능성 대두 등 일본경제의 거시경제동향은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다. 더구나 2007년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에는 정치적 역풍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급격한 금리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아직 금리수준이 매우 낮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04

엔화 환율 전망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엔화 약세가 지속

세계 각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엔화만이 세계의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엔화는 2007년 1월 말 현재 미국 달러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파운드화, 원화 등 많은 통화에 대하여 최소 4년 이래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하락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엔화가 약세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이 아직도 초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행은 2006년에 양적 완화정책과 제로 금리정책을 폐지하여 일본에서도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2006년 7월에는 거의 0%에 가깝던 콜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2007년 2월에는 0.25%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있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고 일본은행은 아직 신속하고도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미국에서도 조기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미·일 금리격차의 해소에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우세하게 되

표. 세계 각국 통화에 대한 엔 환율

각국 통화	환율	엔화 약세의 상황
미국 달러	121엔	4년만의 최저치
유로	158엔	과거 최저치
영국 파운드	241엔	14년
호주 달러	96엔	10년
뉴질랜드 달러	85엔	1년
한국 원	1엔=7.7원	9년
인도 루피	2엔	5년
태국 바트	3엔	8년

자료: 『일본경제신문』(2007. 1. 24, 조간 3면)

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최근에 다시 일본에서 저금리로 엔화를 차입하여 이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이것이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엔화 약세는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불확실 요인을 증가시킴

위와 같은 엔화 약세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유럽에서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다. 앞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로 대비 엔화의 가치는 현재 과거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 영국 파운드와에 대해서도 과거 14년 만의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도 9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엔화 약세는 유럽 및 아시아국가들의 국제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6년 우리나라의 대일 관광객수가 일본의 대한 관광객수를 넘어선 것은 엔화 약세의 상징적 사례일 것이다. 또한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일본기업의 가격인하 공세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일본기업들은 엔화 약세로 인하여 매출증가, 수익증가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2007년 사업계획의 전제로 삼고 있는 환율은 대략 1달러=115엔과 1유로=145엔이다. 이를 현재의 실제 환율과 비교해 보면 일본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가 엔화 약세에 큰 영향

그렇다면 언제까지 엔화 약세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금년 이내에 엔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 엔화 환율의 향후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이고, 둘째는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나아가 일본경제의 거시적 동향 등 경제적 요인이다.

먼저 국제사회가 향후 엔화 약세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가 엔화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7년 2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화 약세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은 엔화 강세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은행의 금리정책과 일본경제의 거시적 동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민간소비의 회복, 소비자물가의 지속적 상승 등 거시변수의 동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이 2007년 엔화 환율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05

경기확대 지속을 위한 설비투자의 역할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일본경제는 2002년 2월부터 2007년 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61개월 동안 경기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GDP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설비투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들어 호조를 보이던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6년 3/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1.5%)은 전기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경기확대 국면 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기계수주(선박·전력 제외)가 전기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일본의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전기대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3/4	4/4	연간 ¹⁾	1/4	2/4	3/4	4/4 ¹⁾
설비투자	-2.9	6.1	6.2	5.8	0.9	-0.8	7.9	3.6	3.2	1.5	1.3

주: 1) 전망치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국민경제계산(SNA)」.

경기확대 유지에 설비투자 역할은 매우 중요

2002년 이후 설비투자는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호조와 이에 따른 풍부한 Cash Flow, 저금리정책, 노후설비의 갱신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일본경제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의 경상이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설비, 채무, 고용 등 3대 과잉문제 또한 해소되면서 기업의 윤택한 자금이 설비부문에 집중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는 현재의 경기확대 국면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

욱이 2007년 세계경제의 전망이 예년에 비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일본경제는 1990년대 후반 경험한 바 있는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기 악순환 국면에 진입하여 현재의 경기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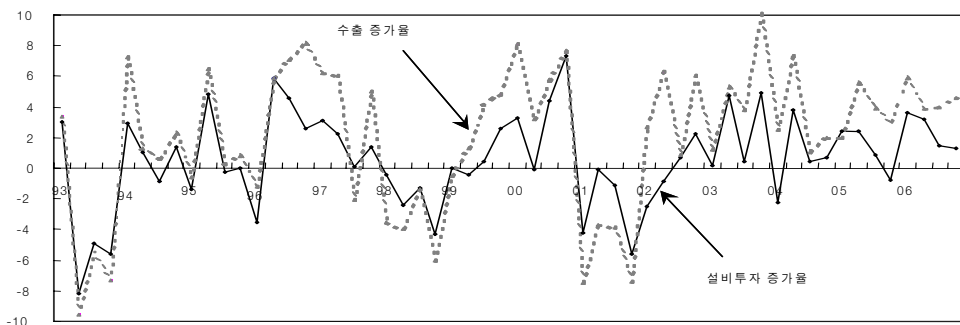
2007년 설비투자,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

일본경제의 2006년도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실질 7.9%를 기록하여 2005년도 수준(5.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03년부터 지속되어온 6%대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는 설비투자에서 기계투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2007년 설비투자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중 기계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추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수출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이후 신규 공장 건립 등 건설투자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전반적인 설비투자 확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본중앙은행이 분기별 조사·발표하는 단간지수(短期經濟觀測調査)에 의하면 2007년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지속적인 기업의 수익 호조, 충분한 Cash Flow, 설비투자 효율성 개선,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계수주의 감속 경향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 폭은 하락하겠지만, 일본의 대세계 수출 가운데 약 36%(2005년) 비중을 점하는 미국과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에 따른 수출증가 가능성이 높아, 2007년에도 일본의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일본의 설비투자율과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국민경제계산(SNA)」.

06

GDP 2% 성장을 견인하는 개인소비의 향방

개인소비 회복 지연

일본경제 GDP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의 회복세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2006년도 3/4분기 GDP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비 증가율은 전기대비 -0.9%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소비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개인소비의 회복에 큰 영향을 주는 고용자보수가 1998년 이후 6년 동안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자의 소득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고용자수(전산업)는 200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이다.

한편 2006년 4/4분기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증가세(1.4%)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기업의 임금상승이 본격화되지 않는 한 개인소비의 증가세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카이 세대의 정년퇴직과 젊은층 인구 감소 등으로 2006년 모든 학력별 전년대비 임금 상승률은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임금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인소비 정체는 엔화 약세 유발 요인

일본경제로서는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확대 국

표. 일본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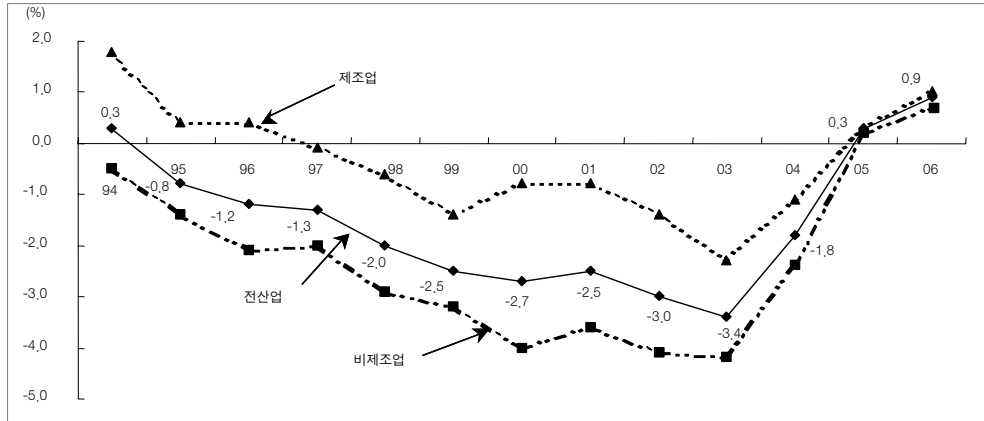
(단위: 전기대비,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3/4	4/4	연간 ¹⁾	1/4	2/4	3/4	4/4 ¹⁾
개인소비지출	1.2	0.6	1.3	1.9	0.6	0.5	0.5	-0.1	0.5	-0.9	1.4

주: 1) 전망치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국민경제계산(SNA)」.

■ 그림. 일본의 고용자수 증가 추이 ■



주: 2006년은 전망치.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기업행동에 관한 설문조사」.

면 유지를 위해서는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개인소비는 고용자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고용자보수가 증가하면 개인 소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고용자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고용자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자수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1인당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설비투자자의 증가세 둔화와 함께 개인소비 정체가 지속될 경우, 2007년 일본경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엔화 약세 및 저금리정책 기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소비의 회복 가능성 불투명

일본경제가 고용정세 개선, 기업수익 호조, 임금상승 조짐 등 최장기 호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 유발효과는 미흡한 실정에서 2007년 개인소비의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로금리정책이 해제되면서 이자 및 배당이 증가하여 가계소득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임금억제 경향이 높아 가계가 소비를 확대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지속적인 고용자수 증가와 이에 따른 임금 상승세가 본격화될 경우,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개인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7

새로운 경제성장 로드맵 추진

강력한 일본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일본정부는 최근의 최장기 경기확대 국면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일본경제 위상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2006년 「신경제성장전략」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의 핵심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여 대내외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경제가 중국과 인도경제의 급부상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상은 일본경제가 경제규모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세계에 ‘강력한 일본경제’, ‘매력 있는 일본경제’의 확고한 비교우위를 확립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른바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교훈 삼아 ‘다가오는 10년’을 맞이하여, 일본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메커니즘 확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형태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 ‘범국가적 경제발전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이 구상에는 고령화 진전 및 인구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세계경제를 주도해 가는 혁신적인 일본경제 확립,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모색 등, 대내외적 문제 해소 및 개선·혁신을 위한 세부방안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

이 구상은 특히 아시아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시책(EPA 적극 추진, 국제적 분업체제 구축, 자금조달체제 개선 등) 및 세계적 이노베이션센터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등, 일본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산업별로는 제조업뿐 아니라 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일본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을 수반한 특화산업의 집적화 및 첨단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자립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과학기술창조입국’(1995년), ‘신산업창조전략’(2004년), ‘기술전략 로드맵’(2006년) 등 지속적인 산업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왔다. 특히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신산업창조전략이 국내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신경제성장전략은 국내외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일본경제의 위상을 유지·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이 구상을 통해 2015년 실질 GDP 성장률이 2.2%(연평균)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버블경제기의 부(負)의 유산인 재정적자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요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정책은 약 0.2~0.4%의 GDP 상승효과를 유발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제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5년 0.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또한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 차원에서 10대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부처간 이해대립 해소가 중요

이와 같이 일본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인 산업·기술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경제가 과거 과학기술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해야 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경제성장전략 구상은 경기확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인구감소 및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적 불만·불투명성이 고조되는 일본경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07년 일본정부는 이 구상의 주요 시책별 추진 시기 및 사업전개 공정표 작성,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 논의 등을 통해 부처별 실질적 추진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래의 공공투자와 달리 산업 및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투자는 간접투자 형태로서,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만큼 이 구상이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요 시책별 추진 속도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각 부처간 신속한 의견조율과 합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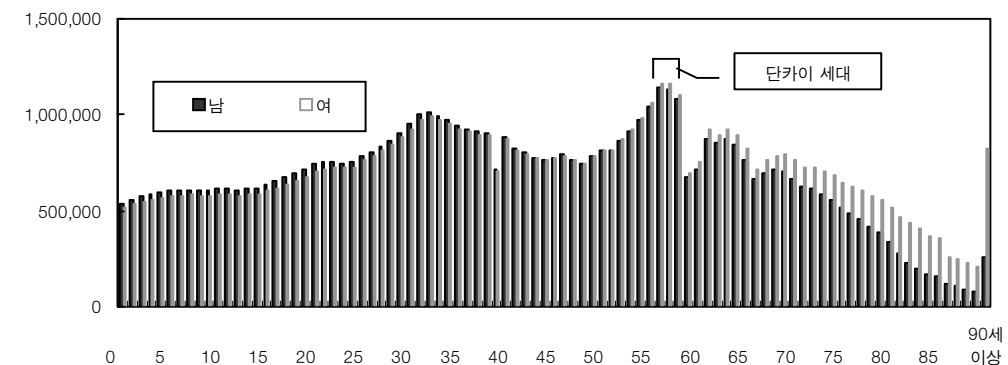
08

고령화와 고용 연장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

일본에서는 단카이(団塊)¹⁾ 세대라고 불리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2007년을 기점으로 60세 정년을 맞이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 기술전수의 차질, 연금 재정의 악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1947~49년에 걸쳐 태어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이른바 군인의 아들·딸)는 현재 691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일본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에 따른 문제들을 ‘2007년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그림. 일본의 인구 구성(2005년 10월 현재) ■



자료: 총무성

일본경제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은 일본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성장 후퇴, 숙련 기술·기능의 퇴

1) 덩어리를 의미함.

장, 거액의 퇴직금 지불, 연금부담 증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사회보장 부담의 증가 등이 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기업의 임금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수익 개선, 퇴직 단카이 세대의 소비확대 기대, 여가·학습 등 시간소비형 시장 확대 등이 있다.

특히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 문제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료 및 보너스 지급 감소와 후생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또한 연금재정의 측면에서는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재정을 지탱해온 단카이 세대로부터의 수입이 없어지는 반면, 대량으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동시에 지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노동력이 대량으로 상실되어 인력부족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현재 청년층 실업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당장 인력부족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단카이 세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에도 적응되어 있고, 체력면에서도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의 고령자 세대와 비교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 노동력 활용방안의 모색 필요

이러한 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년을 맞은 인력이 65세까지 고용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2006년 4월부터 발효된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확보 의무연령은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늦추어진 것에 연계되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된다. 또한 재고용 제도의 대상으로 되는 고령자에 대한 기준을 노사협정에 따라 정했을 때는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의 조사(2006년 9월)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비용 부담의 문제 때문에 재고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의한 고용연장의 제도화는 단카이 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2007년 문제’는 당장 현재화되지는 않고 2012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저출산 문제와 연계하여 노동력 감소의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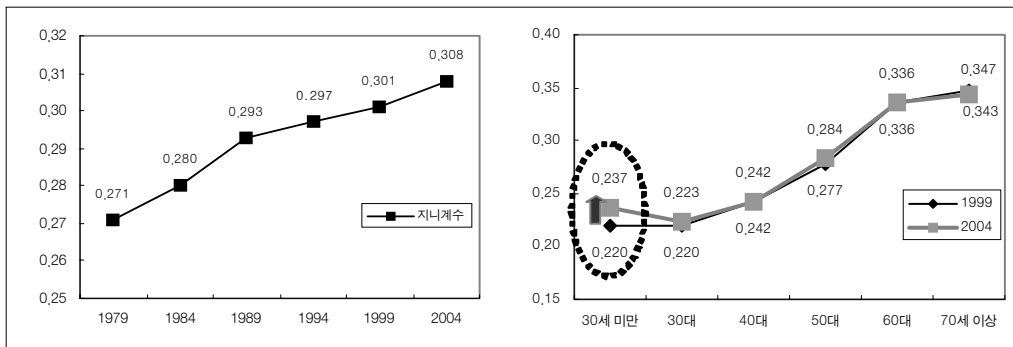
09

양극화와 재도전 지원

양극화 확대

일본사회에서 ‘양극화’(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야당과 노동계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 들어서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80년대에 크게 상승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30세 미만 청년층의 소득불평등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는 빈곤층 증가에 의한 사회불안 확산, 출생률 저하, 소비회복 억제, 그리고 노동의욕 저하 등에 의한 인적자본 약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 그림. 일본의 지니계수 추이 ■



자료: 이형근(2006),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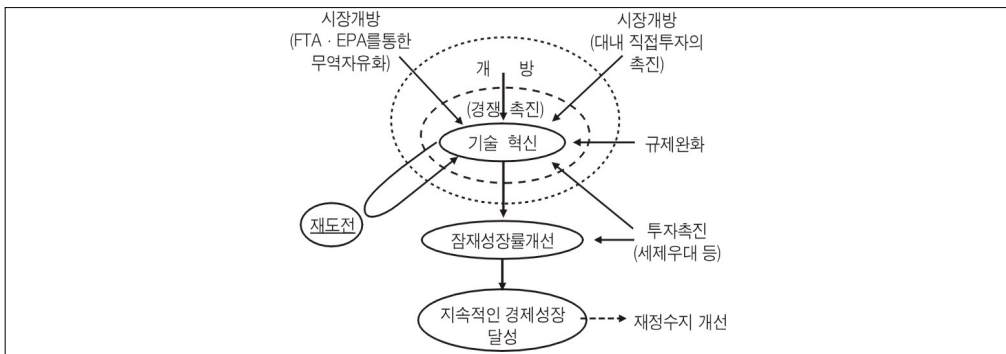
재도전 지원으로 양극화 대응

일본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특히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증가와 고용형태의 변화, 그리고 고령화 진전, 세대규모 축소 등 인구구조상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장기불황 과정에서 기업의 과잉고용 해소를 위한 인원삭감과 비정규직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격차확대에서 고령화 요인이 64%를 차지하였다(『일본경제신문』 2006. 4. 19).

과거 고이즈미 정부에서는 소득격차의 확대를 단순한 외견상의 문제로 보았으며, 기껏해야 청년실업자 등의 취업 확대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정도였다. 반면 현재의 아베 정부는 ‘재도전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소득격차 확대 대응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이전부터 경쟁에 기초한 경제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재도전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재도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 그림. 아베정부 경제정책에서의 ‘재도전’의 위치 ■



주: 2006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제시된 「정책구상」의 요약

자료: 이형근(2006),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과 향후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06-28호.

「재도전 지원 종합플랜」에 관심

일본정부는 2007년도 예산안에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청년층 고용지원’, ‘중소기업 지원’, ‘고령자·육아모 고용대책’ 등의 부문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 25일에는 재도전 지원 대책으로서 237개항의 개별대책을 포함한 「재도전 지원 종합플랜」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향후 「재도전 지원 종합플랜」을 바탕으로 프리티2)에 대한 취직·능력개발 지원, 일괄 신규채용 시스템의 개선, 파트타임노동법 개정(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성의 재취직 지원, 재도전 지원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젊은층

10

아베정부의 지지율

아베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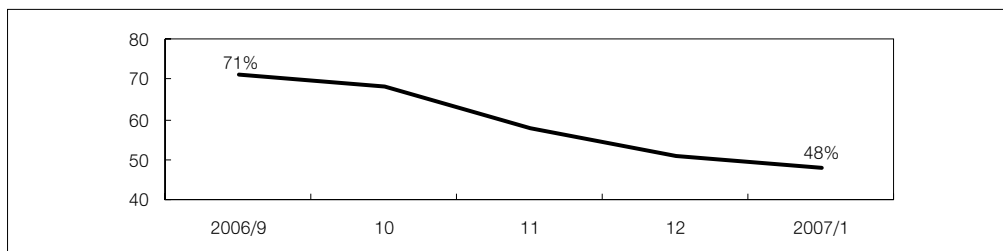
최근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정부의 지지율은 48%로, 2006년 9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경제신문』 2007. 1. 29). 아베내각의 지지율은 2006년 9월 71%, 12월 51%, 2007년 1월 48%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또한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경향이 지속되어 2006년 12월의 조사와 비교해 6% 포인트나 하락한 43% 수준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는 21% 수준(이전 조사 대비 1% 포인트 상승)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가 이전 조사의 17%에 비해 6% 포인트 상승한 23%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민당의 지지율 하락분인 6% 포인트를 거의 흡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7월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항목에서 ‘무소속 후보자 지지’가 이전 조사의 7%에서 11%로 4% 포인트 상승하여 자민당 및 민주당의 하락(각각 2% 포인트, 1% 포인트)과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내각 및 자민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을 향한 지도력 부재에 불만

아베정부에 대한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무엇보다도 개혁을 향한 지도력 부재에 대한

■ 그림. 아베정부 출범 이후의 지지율 추이 ■



자료: 『일본경제신문』(2007. 1. 29)

불만이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일본경제신문』 2007. 1. 29). 조사항목 가운데 ‘고이즈미 정부의 개혁의지와 비교해 소극적’이 이전 조사보다 11% 포인트 상승한 41%, ‘적극적’은 이전과 같은 7%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아베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는 우정민영화 반대파의 복당, 도로특정재원³⁾을 일반재원화하는 개혁정책의 지연, 2006년 말 이후 드러나고 있는 각료 및 자민당 간부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의혹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아베 총리에 대한 평가 ■

항목	내용	평가
개혁의 추진	- 재정재건, 교육개혁 등 추진	○
官邸의 강화	- 보좌관 5명, 학자 팀 구성 등 신설	△
국민의 지지	- 우정민영화 반대파의 복당 문제 등으로 하락	●

주: ○ 순조, △ 관망, ● 불안

자료: 『일본경제신문』(2006. 12. 30)

이에 따라 아베총리의 취임 초기 ‘관저 주도 개혁’의 추진이 퇴색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관방장관을 비롯한 내각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구심력 저하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개혁 부문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 26일 신성장전략의 추진과 교육재생의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신년연설 직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지지율의 하락세는 아베 정부의 신임이 두텁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일본정부는 2007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경제는 2006년도의 1.9% 성장에 이어 2007년도에도 2.0%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경제가 전후 최장의 경제회복 국면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베정부는 이번 신년연설에서 강조했듯이 격차문제 해소(최저임금 개선), 신성장전략 추진(이노베이션 전략 마련 및 의료·농업분야의 규제개혁), 세출삭감, 행정·재정개혁 단행 등의 분야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3) 도로건설만을 목적으로 징수되는 각종 세원으로, 특별회계의 하나임.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동남아 · 오세아니아



KIEP

01

ASEAN 공동체 노력 가속화 및 동아시아 통합 논의 혼란

ASEAN 공동체를 비롯한 동아시아내 통합 노력 활발

ASEAN은 제13차 정상회의(2007년 1월 13일)를 통해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실현을 당초 목표보다 5년 앞당긴 2015년까지 완성하기로 하고 ASEAN 최고규범으로 「ASEAN 헌장」의 지침을 논의하는 등,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SEAN 헌장」의 기본적 지침이 정해지고 기초작업의 시작이 선언되었는데, 2007년 11월의 제14차 회의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헌장이 작성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체 구축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아시아내에서는 ASEAN+3(한·중·일)와 East Asia Summit(EAS, ASEAN+3+인도·호주·뉴질랜드)의 관계 설정,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형성과정에서의 정체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 특히 중·일의 지역패권 경쟁과 ASEAN의 역할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ASEAN+3 협력체제의 중장기 비전과 관련하여 2007년 개최될 제11차 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제2공동성명」이 채택될 예정이고 지난 1월 14~15일의 제10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내 EAc를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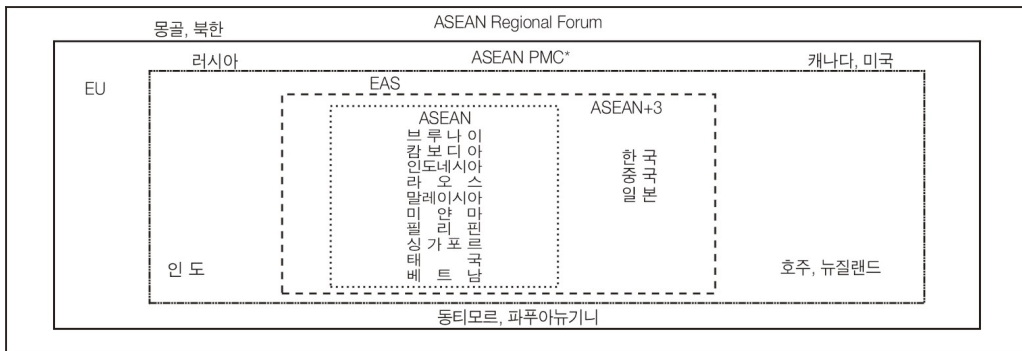
ASEAN 주도와 EAS의 변형

ASEAN의 통합은 그동안 추진해온 ‘ASEAN Vision 2020’의 목적으로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5년을 앞당긴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동체 형성을 이끌 구심력으로서 ASEAN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실제 ASEAN은 1997년 이후 동북아국가들이 역사적, 정치·외교적 현안으로 인해 역내 협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동아시아 협력구도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해왔다.

그리고 ‘ASEAN+3 정상회의’와는 별개인 EAS는 당초 의도, 즉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제안과는 달리 역내 참여국들의 역학 구도와 성급한 시도 등에 의한 편의주의적 타협의 산물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당연히 EAc의 창설 역시 답보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 그림.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내 주요 협력구조 ■



주: *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

자료: ASEAN 사무국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ASEAN+3 중심의 통합 추진 필요

ASEAN의 자체 통합 가속화 노력은 인구 5억 5,000만 명 거대공동체(정치·안전보장, 경제, 사회·문화)의 조기 창설과 동아시아 협력 구도에서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동아시아 통합 또는 EAc 논의는 중·일의 패권경쟁 지속, 역내 분열 가능성, ASEAN의 지도력 한계, 역내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표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지역(경제)협력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EAS는 외교·안보 협력과 동아시아 역내의 지도자들간 포괄적 대화체로 활용하여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정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EAVG과 EASG의 경험을 살려 동아시아지역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예: 단계적 경제공동체 추진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통합 노력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SEAN의 단일시장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데, 진행중인 한·ASEAN FTA 협상의 조기 종료를 비롯, 보다 적극적인 대(對)ASEAN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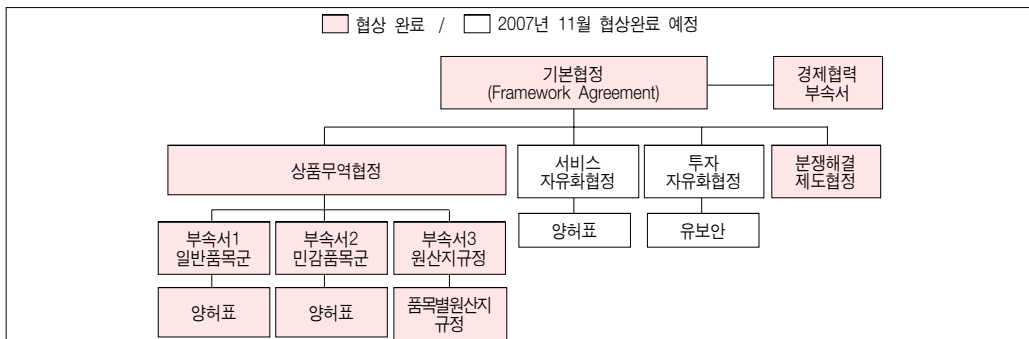
한 · 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및 서비스 · 투자협상 진행

한 · ASEAN FTA 추진 현황

2005년 2월 시작된 한 · ASEAN FTA 협상은 태국을 제외한 9개 ASEAN 회원국과 한국간의 기본협정서 및 상품무역협정서에 대한 서명을 마쳤으며 2007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현재 국내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 · ASEAN FTA는 양자간 FTA 협상이면서 동시에 한국과 ASEAN 10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ASEAN 10개 회원국과의 협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본협정서를 먼저 체결하고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 투자협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중 · ASEAN 모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 한 · ASEAN FTA 협정 구성



자료: 김영무(2006), 「5억 거대시장 아세안과의 FTA 기본협정 서명」

한 · ASEAN FTA의 의미

ASEAN은 5억이 넘는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 · ASEAN FTA는 한국 최초로

동남아·오세아니아 10대 이슈

거대 경제권과 체결하는 FTA라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ASEAN은 미국, 중국, 일본, EU와 함께 한국의 5대 교역국·지역으로, 지리적 근접성과 한국의 주요 투자 진출 지역으로 주요 관심지역이 되고 있다.

기존의 ASEAN 시장은 제3세계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주목을 받았으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ASEAN 회원국 내수시장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수출시장으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ASEAN FTA보다 자유화의 폭과 속도에서 앞서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한·ASEAN FTA가 ASEAN 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앞서 한국기업의 선점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상품자유화 방식에 있어 각 국가는 HS 6단위 기준으로 40개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쌀을 포함한 마늘, 양파 등 민감한 농수산물품을 양허 제외 품목으로 분류하여 관련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기타 농림수산업 품목들도 원산지규정과 SPS(위생 및 검역 조치)를 통해 ASEAN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향후 일정

상품협상에 이어 진행 중인 한·ASEAN 서비스·투자협상은 ASEAN 회원국의 서비스 및 투자시장 개방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기본협정 서명 당시에 합의한 2006년 12월 협상 타결 시한을 맞추지 못했으며, 현재 2007년 11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새로운 타결 시한을 가지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ASEAN 회원국들이 자국의 서비스·투자시장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에 타결된 중·ASEAN FTA 서비스·투자협정도 이러한 연유로 각국의 GATS 양허안에 몇 가지 분야를 추가 개방하는 정도에 그치는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종료하였다.

한국은 ‘한국기업의 ASEAN 진출과 기진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ASEAN 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본 협상의 결과는 한국기업의 ASEAN 시장 진출과 ASEAN 시장내에서의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투자 일변도의 쏠림 추세를 완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에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되어 한·ASEAN FTA가 완료되면, 한국과 ASEAN간의 경제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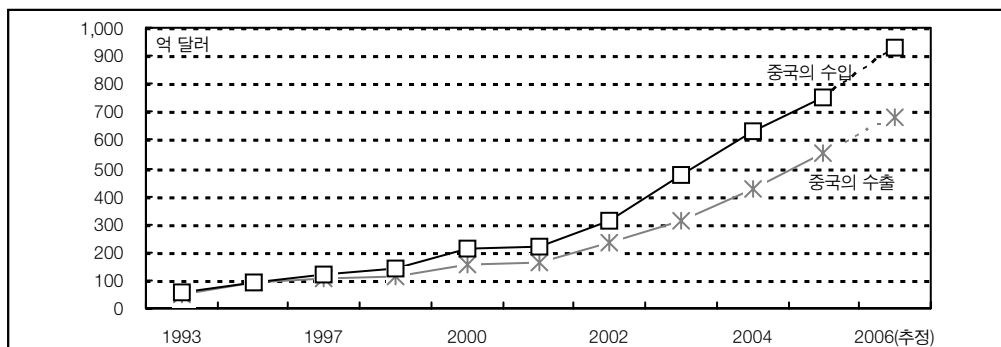
03

ASEAN,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가속화

ASEAN과 중국의 경제교류 급증

중·ASEAN FTA 서비스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ASEAN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무역, 투자, 정부협력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 중 2002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양 지역간 교역은 2006년 1,60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5년 대비 23%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대ASEAN 투자(승인기준)는 매년 1억 달러 미만을 보이다가 2003년 이후 급증하여 2004년 6억 7,000만 달러, 2005년 5억 6,98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석유, 천연가스 등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ASEAN의 중국 투자도 매년 3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ASEAN 후발국, 특히 인도차이나국가에 대한 ODA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여 채무를 탕감해주고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있다.

■ 그림. 중국의 대ASEAN 수출입 추이(1993~2006년) ■



주: 2001년까지는 ASEAN 6국 집계임.

자료: CEIC Database

동남아 · 오세아니아 10대 이슈

ASEAN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두 지역이 이웃해 있다는 지경학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수입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2년 9월 마련한 중·ASEAN FTA 기본협정안과 그에 따른 상품분야 FTA 발효(2005년 7월)도 중요한 배경으로 들 수 있다. 특히 Early Harvest Program에 따라 기존 ASEAN 회원국의 관련상품 관세율도 2006년부터 0%로 인하되었다. 투자 측면에서는 중국이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외투자 촉진전략으로 중국기업의 동남아내 에너지자원 확보 및 M&A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은 고도경제성장에 수반해 폭증하는 자원 수요를 이웃한 동남아에서 공급받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ASEAN+3(한·중·일), ASEAN+중국, 메콩강유역개발 등의 협력체제 구비를 통해 중국이 동남아 끌어안기에 나선 것도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동남아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 격화

양 지역간의 경제협력 확대는 중국과 ASEAN의 경제통합 가속화와 동남아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실제 양 지역은 FTA를 위한 서비스협상을 지난 1월 종료하여 한국과 일본, 인도 등을 제치고 동아시아내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의 공격적인 에너지자원 투자나 자원관련기업 M&A는 동남아를 자국의 전략적 자원공급지로 만들고 있다. 양 지역간 협력 확대는 필연적으로 동남아시장을 둘러싼 수출, 투자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과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진행 중인 한·ASEAN FTA 협상(상품분야 발효 및 서비스협상 마무리)을 조속히 타결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간 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2007년 중·ASEAN 교역 2,000억 달러 초과 전망

중·ASEAN FTA 서비스협상의 타결 등을 배경으로 ASEAN과 중국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 지역간 교역 규모는 기존 ASEAN 회원국의 Normal Track에 의한 관세인하가 2007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하여 금년내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의 동남아 투자나 싱가포르기업을 중심으로 한 화교기업들의 중국 투자 역시 지속되고, ODA 지원 확대와 ‘ASEAN+중국’ 협력체제 추가 구축 등을 통한 중국의 동남아 끌어안기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04

자연재해와 동남아시아경제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자연재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지구온난화 관련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자연재해는 크게 기상이변과 전염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은 미시적으로는 각종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복구 비용을 발생시키고 거시적으로는 인류의 생존기반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한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도 태풍, 지진, SARS,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매년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상 향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침수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로 인한 동남아시아 일대의 피해

동남아 일대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태풍과 지진은 그 특성상 막대한 복구 비용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동반한다. 2004년 발생한 쓰나미¹⁾로 인도네시아는 약 16만 명의 인명피해와 약 3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태국은 약 8,000명의 인명피해와 약 5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세계 각국의 긴급원조와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와 각종 NGO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연으로 경제적인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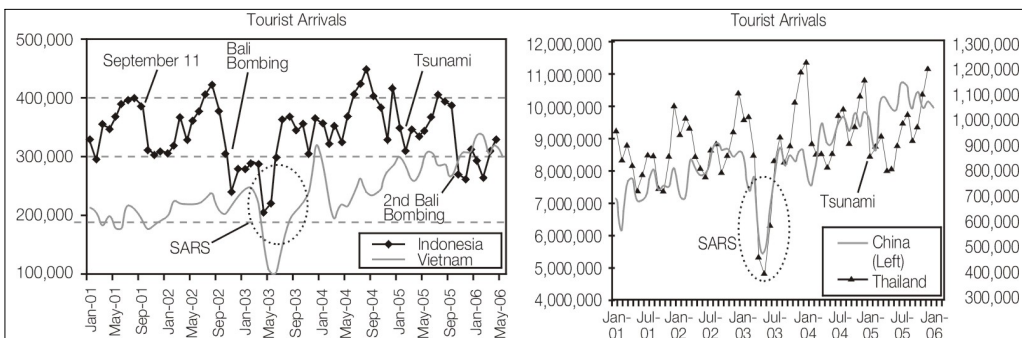
1) tsunami(津波). 해소(海嘯)라고도 한다. 대개 얕은 진원(震源, 30km 이내)을 가진 진도 7 이상의 지진과 함께 일어난다. 그 밖에 해저화산이나 해저에서의 사태에 의한 토사 함몰이나, 핵 폭발에 의해서 발생한다(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동남아 · 오세아니아 10대 이슈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2월 초 대홍수로 자카르타의 75%가 침수되고 25명의 사망자와 3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홍수의 경우도 쓰나미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되며 인프라 파괴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인적교류를 단절하는 전염병도 미시적으로는 관광 및 축산물 관련 산업에 피해를, 거시적으로는 인명피해와 인적교류 단절로 인한 중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주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2003년 상반기의 SARS 발생을 들 수 있는데, 당시 동남아 관광객 입국이 급감하여 관광산업이 일시적으로 크게 위축되었고, 최근 수년간 AI 발병으로 가금류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AI는 SARS보다 발생 범위가 넓어 아시아를 시작으로 현재 아프리카, 유럽으로 확산 중이며 사람간 전염이 발생할 경우 세계적인 경제손실이 예상된다.

■ 그림. 동아시아 주요국의 관광객 입국 추이 ■



자료: The World Bank(www.worldbank.org)

국제사회의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시급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인류의 생존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향후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재해는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재난대비시스템 마련이, 전염병은 확산 방지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정부도 한국국제협력단 재난복구지원사업 및 NGO 지원사업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재난발생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국 및 국제기구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보다 효율적인 복구지원을 위한 지원국간 협력체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05

인도네시아 경기 전망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2007년 6%대 경제성장 전망

EIU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5.6%와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에 약 6%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하락, 국내소비 증가, 그리고 새롭게 개정될 예정인 투자법과 세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006년 예상되었던 투자법과 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은 예정보다 늦춰진 2007년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투자법 개정과 법인세 인하를 다루고 있는 세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확대시키고 사업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도의 대외교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

표.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항 목	단 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실질 GDP 성장률	%	5.6	5.5	6.0	6.3
실 업 률	%	10.3	12.5	12.3	12.9
소비자물가상승률	%	10.5	13.1	6.5	6.1
재정수지	%, GDP 대비	-0.3	-1.0	-0.9	-0.6
수 출	십억 달러	86.2	97.7	108.1	118.7
수 입	십억 달러	63.9	69.2	79.7	88.4
경상수지	십억 달러	0.9	6.1	6.1	6.1
경상수지	%, GDP 대비	0.3	1.7	1.6	1.4
총 외 채	십억 달러	138.6	128.5	131.5	134.1
환 율	Rp/달러	9,705	9,162	9,264	9,484

자료: EIU Country Report

동남아·오세아니아 10대 이슈

율을 초과하여 교역수지 흑자규모는 2006년에 비해 다소 작아질 전망이다. 투자 증가와 국내소비 진작은 수입에 대한 수요증가를 유발하는 주요인이 되지만, 수입증가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7~08년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임시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대 무슬림국가로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란 및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중동과 동아시아지역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7년 상반기에 남북한 동시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핵문제가 6자 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한반도와 국제사회 핵문제에 있어 조정자로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이 선언문은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포괄적인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대통령 방문의 후속조치로 ‘한·인니 현인그룹’(외교통상부), ‘한·인니 경제협력 민관 T/F’(산업자원부) 등을 구성하여 양국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문에서 협력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에너지·광물자원시장으로, 기업의 투자진출 지역인 동시에 거대 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 1위국으로 2005년 기준으로 파시르지역의 유연탄광, SES 유전광구 등 총 13개 사업에 11억 4,00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총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인 82억 7,000만 달러의 약 13.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2006년 8월 「한·인니 산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인도네시아내에 한국이 투자 조성할 수 있는 조림지 50만 헥타르를 확보하는 등 양국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사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억 3,000만 명(세계 4위)에 이르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지닌 인도네시아는 비록 현재 1인당 국민소득 1,308달러(2005년 기준)의 개발도상국이나 앞으로 무한한 시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신흥국가로 떠오르고 있어, 양국간에 보다 적극적인 정치·경제협력 확대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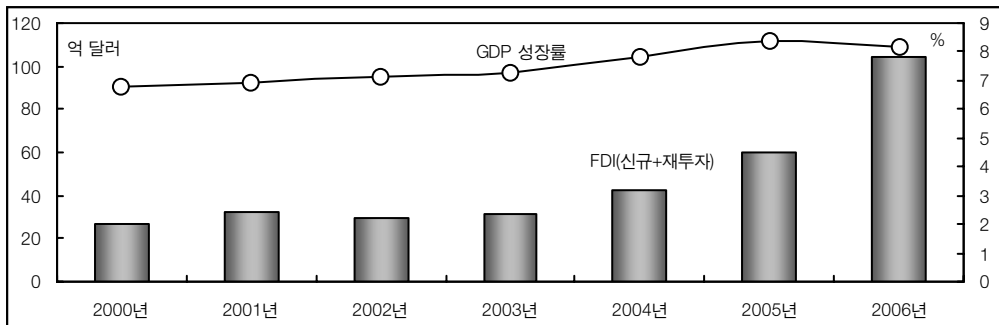
06

베트남경제, 고도성장과 외국인 투자 붐 지속 전망

고도성장 지속과 제2 외국인투자 붐

2000년대 들어 연평균 7.5%대의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베트남경제는 2005년 8.4% 성장에 이어 2006년에도 8.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와 재투자를 합한 총투자(승인 기준)는 2005년 60억 달러에서 2006년 104억 달러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대외무역도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는 수출도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 그림. 베트남의 GDP 성장률 및 FDI 유치(승인 기준) 추이(2000~06년) ■



자료: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

최근 베트남경제의 고도성장 지속과 외국인투자 붐은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성장잠재력,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경제개혁 및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FDI의 적극적인 도입에 의한 공업화와 그에 따른 대외무역의 급증, 세계경제의 성장센터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 위치했다는 지경학적 이점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운영과 공격적인 대외개방정책 추진(FDI의 적

극적인 유치, ASEAN 가입, 미국과의 무역관계 정상화, WTO 가입 등)은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는 외국인투자를 베트남으로 유인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WTO 가입과 PNTR 획득 등으로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FDI 붐이 불고 있다는 것은 베트남경제가 신흥시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WTO 가입과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획득을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은 베트남경제의 글로벌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베트남은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성장 잠재력의 한 단계 향상이라는 효과를 보고 있으며, 금융, 통신 등의 서비스산업과 민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은 베트남 서비스산업부문의 경쟁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에게도 베트남은 최대 유망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는 2006년 한 해 207건에 26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5년의 5배 규모이고 2006년 베트남 전체 FDI의 34%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당연히 2006년에는 베트남내 최대투자국으로 부상하였고 전체 누계 기준으로도 4위에서 3위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도 2007년 1월 말 현재 13개 펀드에 8,3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활발한 실정이다.

적절한 투자 및 통상정책 필요

WTO 가입과 미국으로부터의 PNTR 지위 획득은 베트남경제의 세계경제로의 완전한 편입과 개혁개방정책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세계에 확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베트남경제의 고도성장과 투자 붐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또한 최근 높아지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 회피지역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베트남이 신흥시장으로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 투자, ODA 지원 등 경제협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적절한 투자전략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하지만 펀드를 통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는 베트남 주식시장의 열악한 환경(시장규모 왜소, 낙후된 증시시스템, 투명성 부족, 감독기관 부재 등)과 비이성적 과열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전략 수립과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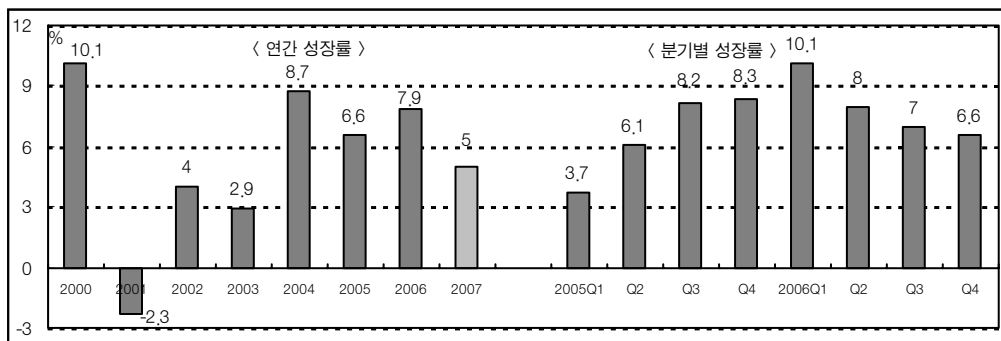
07

2007년 싱가포르경제, 성장 둔화 전망

2006년 7.9% 성장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성장을 둔화

2006년 싱가포르경제는 바이오메디컬과 석유화학 제품 등 제조업 생산의 증가, 수출 및 내수의 호조 등을 배경으로 7.9% 성장하여 2005년의 6.6%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반면, 분기별로는 2006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6%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6년 1/4분기에 10.1% 성장하여 피크를 기록한 이후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기선행지수인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도 2006년 11월 54.6을 기록한 이후 12월 53.4, 2007년 1월 52.6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그림. 싱가포르의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싱가포르경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내수를 바탕으로 다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해온 전자제품의 생산과 수출 증가속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 성장둔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전자 및 IT 제품을 비롯한 제조업 생산

동남아 · 오세아니아 10대 이슈

증가율이 2006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8.6%를 기록한 이후 2/4분기 11.9%, 3/4분기 9.5%, 4/4분기 7.7%로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서비스 생산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에 8.2%에서 6.6%로 낮아졌다. 또 대외무역도 2006년에는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지만 싱가포르 국내경기를 좌우하는 국내비석유(NODX) 전자제품의 수출(NODX의 47%)은 4.3% 증가에 그쳤다.

높은 대외무역의존도 탈피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

싱가포르는 2001년 전세계 IT 버블 붕괴로 인한 제2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 석유 화학과 전자전기로부터 바이오, 제약, 금융(특히 Private Banking), 관광 등으로의 산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4년 이후 다소 성장세를 회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최근의 성장률 등락은, 보다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외의존도를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싱가포르경제는 대외무역의존도(대외상품무역/GDP)가 3.45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Global Insight, 2006년 기준), 중장기적으로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바로 한국의 대(對)싱가포르 수출증가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싱가포르 수출이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관계로 한국의 수출증가율도 싱가포르의 경기둔화와 맥을 같이하여, 2006년 들어 1월까지의 전년동기대비 56.4%를 기록한 이후 8월까지의 31.3%, 12월까지의 28.1%로 낮아지고 있다.

IT 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경제성장 좌우

2007년 싱가포르경제는 5% 전후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 비용의 상승압력과 카지노 구상의 성공 여부가 성장세 유지와 관련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피스 빌딩이나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7월부터는 GST(Good & Service Tax)가 인상(5→7%)될 계획으로 있는 등 비즈니스 비용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2007년에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전세계 IT 제품에 대한 수요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싱가포르 전체 수출도 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정부 역시 올해 4~6%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 주력 부문인 IT 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경제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08

쿠데타 이후 태국 정치 · 경제 현황 및 전망

쿠데타 발발과 과도정부 출범

2006년 태국은 정치·경제 양면에 걸쳐 격변기를 맞이하였다. 2006년 상반기부터 탁신 전 총리는 총선비리와 Shin Corporation 주식 매각 관련 탈세 혐의로 지속적으로 사임압력을 받아왔다. 국방부 인사체계와 관련하여 군부와의 갈등이 깊어지던 차에 9월 19일 쏘티(Sonthi Boonyaratkalin) 육군사령관이 쿠데타를 전격 감행하였고, 하루만에 태국 국왕의 추인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정권을 획득하였다. 쿠데타 발생 직후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태국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우려와 비난이 이어졌으며 환율과 증시가 일시적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일부 외국인투자자들은 쿠데타를 태국 증시에 대한 매수기회로 보기도 하는 등 경제적인 여파는 크지 않았다.

쿠데타 성공과 동시에 쏘티 장군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개혁평의회(Council for Democratic Reform: DCR)는 국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과도정부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10월 1일 수라웃 전 합참의장을 총리에 임명하면서 과도정부가 출범하였다.

과도정부 설립과 정치 · 경제 동향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태국 과도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철저한 비리조사와 개헌을 통한 민주정부를 구성하여 1년 이내에 정권을 이양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자산조사위원회(Asset Examination Committee: AEC)를 통한 전 정권 비리조사 및 민주정부 구성을 위한 개헌작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과도정권 설립 이후 비리조사 결과 발표와 개헌작업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군부정권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 과도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친(親)군부인 사들로 구성된 현 내각에 대한 개각 여론도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 · 오세아니아 10대 이슈

경제문제도 현 태국 과도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미화 약세와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으로 인한 바트화 절상 압력을 통제하기 위해 외환 통제정책,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을 연이어 실시하며 바트화 안정에 나서고 있다.

표. 쿠데타 이후 태국의 주요 국내 이슈

날 짜	주요 이슈
2006년 9월 19일	쿠데타 발발, 탁신 전 총리 축출
2006년 10월 1일	수랏윗 전 합참의장 과도정부 총리 취임
2006년 12월 19일	외화 30% 의무예치안(URR) 발표
2006년 12월 20일	증시 폭락으로 증권·선물분야 의무예치 제외
2007년 1월 7일	외국인사업법 개정 - 의결권 50% 제한
2007년 1월 15일	해외투자 상한선 확대
2007년 1월 29일	외화 30% 의무예치안 추가 제외 - 외환 스왑

자료: 필자 작성

그러나 투기성 단기자금 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바트화 환율 안정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오히려 갑작스러운 외환통제로 인한 증시혼란과 투자여건 축소로 인한 중장기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정부 구성과 안정된 외환정책 추진이 관건

쿠데타 직후 과도정부가 발표한 각종 계획들이 지연되고 장기 군부 집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 군부정권에 대한 신뢰기반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현 태국 과도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부패·비리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헌을 통한 민주정부 구성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경제정책들도 갑작스러운 외환규제로 인한 투자여건 축소로 외국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태국의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내고 있어, 안정적인 외환관리체계 구축과 외국인투자제도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향후 태국경제는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를 통한 환율안정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1980~90년대 고도성장과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으로 주변 동남아국가들의 모범적 경제성장 사례가 되어온 만큼, 태국 과도정부의 향방이 주변 동남아국가들에 끼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09

미국 · 말레이시아 FTA 협상

협상 개요 및 진행 경과

2004년 5월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FTA의 선행 협정격인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을 체결했으며, 2004~05년 3차례의 무역투자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FTA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후 양국은 2006년 3월 8일 미국·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래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협상을 개최하였는데, 섬유 및 의류, 원산지규정, 무역관련 기술 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투자, 환경, 위생·검역 등 총 18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표. 미·말레이시아 FTA 협상 경과 ■

구 분	기 간	장 소
제1차 협상	2006. 6. 12~16	말레이시아, 페낭
제2차 협상	2006. 7. 17~21	미국, 워싱턴 DC
제3차 협상	2006. 10. 30~11. 3	말레이시아, KL
제4차 협상	2007. 1. 8~12	미국, 샌프란시스코
제5차 협상	2007. 2. 5~9	말레이시아, 사바

자료: 필자 작성

FTA 추진 배경 및 양측의 주요 관심분야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FTA가 그렇듯이 정치·안보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국은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일본에 이은 두 번째 수입대상국으로 2005년 미국과의 교역에서 230억 달러 상당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 말레이시아정부가 승인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30% 가량이 미국에서 유입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가 5,000달러를 상회하는 중상위 소득국

동남아·오세아니아 10대 이슈

가로서 3조 달러에 달하는 ASEAN 시장의 중요한 진출거점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동남아시아 최대 교역파트너로서 지난 10년간 양국의 상품교역은 50%, 서비스교역은 31% 증가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관세장벽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²⁾ 수입면허·인증 등의 비관세장벽이 많아 양국간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측에 많은 무역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안보적으로도 말레이시아는 개도국·이슬람권 국가의 리더격이자 APEC 등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중요 협력 파트너이며 대(對)테러 공조 국가란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말레이시아 FTA 체결은 부시의 대ASEAN Initiative(대ASEAN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실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대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유·의류, 고무·원목, 세라믹, 전기·전자제품 및 농산물분야의 미국 관세(5~32%) 조기 철폐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투자분야에서는 경제발전계획 등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제한(규정)의 허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쌀’시장 개방문제는 협정에서 제외키로 결정되어 담배와 함께 말레이시아측 개방유보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의약품,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함께 저작권 기간 연장 등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통신, 법률·회계, 건축, 금융·보험 등 서비스분야의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전망

최근 말레이시아 사바(Sabah)주에서 열렸던 5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별 진전 없이 협상을 종료하였다. 미국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TPA 만료(2007년 6월) 전까지 협상을 완료하고자 희망하나, 서비스분야와 정부조달분야 협상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현재로서는 기한내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이견이 큰 사항은 말레이시아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미푸트라(말레이계) 우대정책에 관한 것으로, 정부조달과 서비스시장 개방 분야에서 이 정책이 예외로 허용될 것인가가 향후 FTA 타결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정부는 협상시한에 관계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말레이시아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협상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MFN 평균관세율이 말레이시아는 8.4%, 미국은 3.7%임.

10

호주의 대(對)동아시아 정책 강화

호주의 대동아시아 협력 강화

호주는 1960년대까지 정치·경제적으로 유럽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유럽통합이 진행되면서 이들 국가들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으나, 근래에 와서 호주정부는 대동아시아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호주의 우선적인 통상정책 방향이 WTO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 및 타결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거대유망시장인 동아시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동아시아 협력 현황

호주는 2003년 동아시아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으며, 2004년 7월 태국과도 FTA를 체결(2005년 1월 발효)하였다. 또한 중국 및 일본과는 2003년에 각각 Trade and Economic 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양국 모두 FTA에 관한 공동연구를 마친 상태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으로 2006

표. 호주의 경제협력협정 및 FTA 추진 현황

체 결		협상 추진(협상 · 공동연구)	
국 가	연 도	국 가	개시연도
뉴질랜드(경제협력)	1983년	말레이시아(협상)	2005년 5월
싱가포르(FTA)	2003년	중 국(협상)	2005년 5월
태 국(FTA)	2004년	일 본(공동연구 완료)	2007년 상반기 중
미 국(FTA)	2004년	UAE(협상)	협상 중단
중 국(경제협력)	2003년	한 국(공동연구)	2006년 12월
일 본(경제협력)	2003년	인도네시아(공동연구)	2006년

주: 2006년 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임.

자료: 필자 작성

년 6월까지 6차례 협상을 가졌으며, 일본의 경우 2007년 상반기 중에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주는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해 2005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6년 말까지 총 8차 협상을 진행한 상태이며, 말레이시아와는 2007년 FTA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호주 방문시 우리나라와 FTA 공동연구(민간차원)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의 FTA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의 대(對)아시아 협력관계에서 경제부문외에 정치·외교안보 부문의 중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등의 역내 분쟁 및 테러 등으로 인해 깊은 관련이 있으며, 2002년 발리 폭탄테러 이후 동아시아국가들과의 대(對)테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는 이미 대테러 공조협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와도 테러범 체포협력 등 대테러 공조에 나서고 있다.

또한 2005년 호주는 ASEAN+3(한·중·일)+인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비록 전통적으로 한·중·일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협력체이지만, 호주는 대동아시아 협력 강화를 위해 EA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동아시아 협력 전망

동아시아 정치·경제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호주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동아시아지역의 위상과 이 지역에 대한 호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호주의 생존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연방국가인 호주가 유럽적인 정체성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아시아로의 접근 강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성패는 EAS의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 강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ASEAN+3의 주도국이던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EAS의 주도권 다툼에 나선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신규 회원국으로 참여시키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이 협력체의 발전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EAS내 주도권 다툼을 비롯해 호주의 동아시아권내 역할 정립 및 대(對)아시아 FTA 추진 동향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인도



KIEP

01

인도경제의 안정적 고도성장 가능성

중국 다음으로 빠른 성장

인도는 지속적인 개방 및 개혁정책으로 지난 15년간 5~6%의 성장과 더불어, 2003년부터 3년간 연속 8.5%, 6.9%, 9.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도경제는 2006/07년 상반기 회계연도 1, 2분기에 각각 8.9%와 9.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6/07년도 9.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소비자물가가 2003/04년 3.5%, 2004/05년 4.2%, 2005/06년 5.0%, 2006/07년 1/4분기 5.73%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기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득증대와 함께 금융권 대출 확대, 정부 및 가계지출의 대폭 증가에 의해 4%대의 물가가 최근 5%대에 진입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06년 10월 5.29%, 2007년 1월 13일 5.95%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인도경제의 주요 지표

구분	2003/04	2004/05	2005/06	2006/07 Q1
GDP성장률	8.5	6.9	9.0	8.9
제조업	7.1	8.1	9.0	11.3
소비자물가	3.5	4.2	5.0	5.73
수출(억 달러)	647	793	1,007	290.9
수입(억 달러)	802	1,066	1,402	409.4
환율(루피/달러)	46	45.3	44.1	44.57
재정수지/GDP	5.4	4.6	4.2	-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각년호.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Monthly Economic Report*, 각년호.
 Reserve Bank of India, *Annual Report*, 각년호.

인프라 개선이 중장기 성장에 중요

서비스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10%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IT 분야의

인도 10대 이슈

20~30%의 높은 성장은 교역, 운송, 통신부문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여 인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① 우수하고 풍부한 인력자원 ② 외국인투자 확대 ③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④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 등이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동력이 있는 반면, 인프라, 교육, 건강보건, 시장 경쟁 및 효율성 등의 미비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으로는 재정의 취약성에 따른 인프라 건설지연이다. 인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재정수지적자는 8%대를 유지하고 있어 투자를 확대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도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및 민간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경제의 가파른 성장이 개인소득 증가와 함께 금융권의 대출 확대에 이어져 소비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5%대의 물가상승으로 경기과열조짐이 발생하자 인도중앙은행(RBI)은 2007년 초부터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기조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경제의 과열은 인도정부가 기대했던 9%대의 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7%대의 안정적 성장 가능

인도의 과열조짐으로 9%의 성장대를 기록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7%대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투자는 IT 중심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전히 안정적인 IT 분야의 성장은 인도경제에서 지속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산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산품에 대한 초과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주요 기관의 인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단위: %)

연도	IMF	ADB	Global Insight	EIU	Morgan Stanley
2006	8.3	7.6	7.9	8.4	7.0
2007	7.3	7.8	7.6	7.6	6.7

자료: ADB(2006), *Asia Development Outlook*; EIU(2006), *India Country Report*; Global Insight(2006), *Interim Annual Forecast*; Morgan Stanley(2006), *Indian Economics Monthly*.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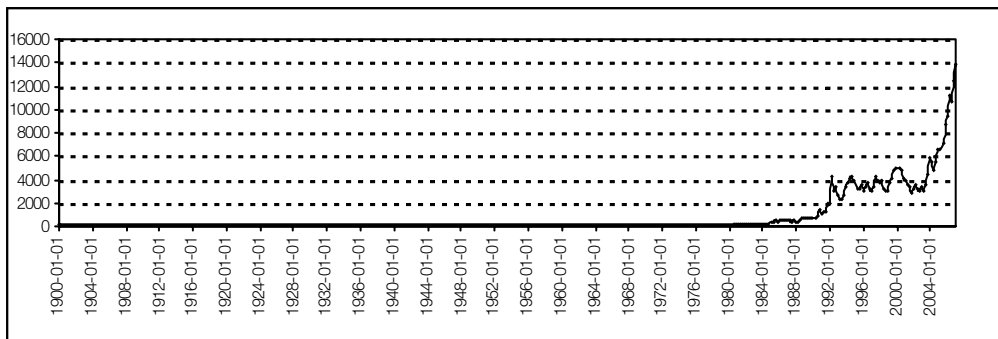
조정국면이 예상되는 인도 자본시장

질주하는 인도 주가지수

최근에 해외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자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인도 주식시장이 호황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뭄바이 주가(SENSEX) 지수는 2004년 3월말 5,591포인트에서 2005년 3월말 6,493포인트로 상승하였고, 이 거래소의 시가총액도 2004년 3월 말 12조 120억 루피에서 2005년 3월 말 16조 9,840억 루피까지 증가하였다. 2005/06년도에도 인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기관 투자의 자본유입은 더욱 확대되어, 2006년 2월 7일 10,000포인트 선을 달성하였으며, 2007년 1월 25일 14,0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M&A와 뮤추얼펀드가 활성화되고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을 중심으로 파생상품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뮤추얼펀드 거래액은 약 1조 5,000억 루피로 추산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투자신탁 형태에서 사모펀드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부분 개방형이다.

■ 그림. 인도 SENSEX 지수 변화 추이 ■



자료: Bloomberg

해외자금 유입이 증시활성화 자극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해외자금의 투자유입 확대와 해외교포인 NRI(Non-resident India)의 자금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2~2003년도에 겨우 2억 4,000만 달러였던 해외의 증권투자유입이 지속 증가하였고, 2003/04년도 들어서 통화가치 상승, 경기호조, 파키스탄과의 관계개선 등에 의해 해외기관투자자의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된 결과 순유입금액은 113억 8,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2004/05년도에 891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한편 인도의 기준금리(10년 국채)와 Libo 금리의 차이를 활용한 금융거래(arbitrage)의 급증도 인도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2003년 이후 BRICs 국가의 일원으로 인도시장의 잠재력이 인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인도정부의 증시개방정책도 인도금융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시장이 과열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가운데, 인도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을 맞이할 경우 현재 브릭스펀드, 친디아펀드 등 해외펀드의 수익률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조정국면 예상

인도 증권시장도 현재 피크(peak)점에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인도 증권시장은 2월 이후 조정국면을 맞이한 후, 급속한 주가 상승이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2007년 인도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발표, 인도정부의 지불준비금 조정, 2007년 주(州)지방선거 등이 증권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회사, 전력회사, 텔레콤업체 등 450여개 업체, 124억 달러의 기업공개가 예상되고 있어, 기업공개 역시 증권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인도경제와 증권시장은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조정국면을 맞이한 후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투자시 이에 대응하는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03

경제 고성장을 위한 FTA 추진 확대

다발적인 FTA 추진 정책

인도는 태국과의 조기관세인하(Early Harvest Scheme) 조치와 더불어 싱가포르, SAFTA 등과 FTA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과는 FTA의 부정적인 효과 발생으로 발효시기가 연장되고 있으며, ASEAN과도 체결하려고 했지만 네거티브 리스트 품목 축소에 합의하지 못해 체결에 실패했다.

표. 인도의 자유무역협정과 경제협력 현황

구분	특혜무역협정(PTA)	자유무역협정(FTA)	기타 지역협력연합
주요내용	특정국가 또는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 우대	역내 무역자유화, 역외 독자적 관세주권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른 경제협력
기체결	방글라데시(1980) 네팔(1991) 부탄(1995) 미얀마(1995) SAPTA(1995) 아프가니스탄(2003) MERCOSUR(2004)	스리랑카(합의: 1998년/발효: 2000년) 태국(합의: 2003년/82개 품목 조기실시계획 시행, 발효: 미정) 싱가포르(합의: 2005. 6/발효: 2005. 8) SAFTA(합의: 1995년/발효: 2006. 1 단계적 발효, 최종합의: 2016년 예정)	방콕협정(1975) SAARC(1985) BIMST-EC(1997) IORARC(1997) BOBCOM(1999) IBSA(2004)
협상중	칠레	ASEAN(합의: 2002년/종결: 미정) 방글라데시(합의: 2002년/종결:미정) 한국(합의: 2006년/종결: 2007년) 일본(합의: 2007년/종결: 2008년)	
검토중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중국, EU, 칠레, 이집트, 말레이시아, 우루과이, IBSA, MERCOSUR, 모리셔스, GCC	

최근 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CEPA), 일본과의 경제협력협정(CECA)을 위한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과는 공동연구를 1월부터 시작하는 등 동아시아와 협상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동아시아 중시 정책 확대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FTA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전략초점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우선 FTA 추진에 있다. 특히 인도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 철폐로부터 발생하는 사회후생효과가 가장 큰 반면, 한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효과는 일본과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중국, 한국과 FTA 체결 가능

인도는 FTA 전략을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레버리지화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고, IT 등 인도에게 유리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극 개방을 요구하고, 교역확대보다는 투자 등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FTA 전략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협상이 앞으로 쉽게 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나라와는 경제수준 차이에 의해 공산품 및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도 투자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경제협력협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도 인도와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 역시 다양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인도에 접근하겠지만 역시 공산품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인도 정부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별 차이 없는 수준에서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과는 2010년 중반까지는 모두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SEAN에서 인도가 배제되는 것을 인지하여 ASEAN+3보다는 좀더 폭넓은 수준인 ASEAN+6 등을 주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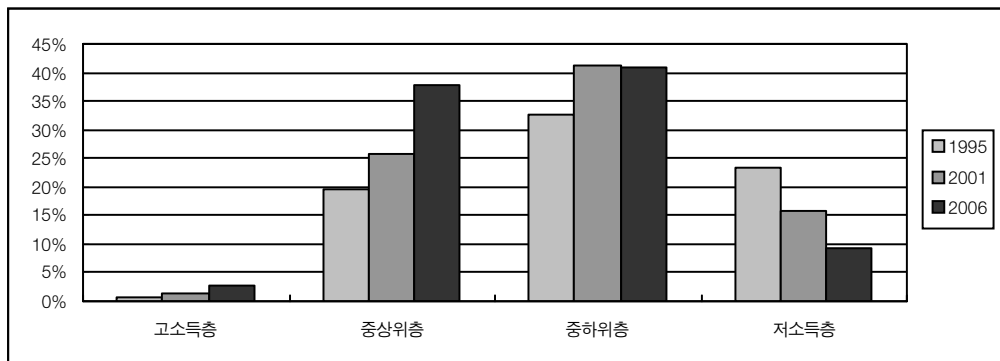
인도의 소비문화 변화와 소비확대

급속한 경제성장이 소비 견인

IT를 중심으로 인도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소득분배효과도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내수 소비가 확대되고, 이러한 내수소비 증가는 인도경제의 성장 동력원이 되고 있다. 국내소비는 1991년 인도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 시행 이후 IT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증가 및 수입확대 등에 힘입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말 이후 IT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여 IT 붐이 일면서 고용 창출 및 소득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중산층 계층 형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1995~2006년 중상위층이 2005년 19.7%에서 2006년 37.9%로 18.2% 포인트 증가, 저소득층은 2005년 23.3%에서 2006년 6.1%로 17.2%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중산층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 그림. 인도의 소득분배 추이 ■



새롭게 형성되는 중산층이 높은 소득을 올림에 따라 소비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가는 젊은 층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젊은 층을 겨냥한 미용 및 오락 소비, 핸드폰, 자동차, 관광, DVD, 디지털 카메라, 노

트북 등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지출의 비중도 높아가고 있다.

신소비층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급증은 특히 내수소비재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휴대폰 가입자가 매달 500만 명씩 증가하여, 2006년 6월 말 현재 휴대폰 가입자는 1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2000년 500만 대에 불과하던 자동차 보유대수도 2005년 말 기준 1,000만 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경험 위주의 소비문화 정착

인도에서는 미용, 오락 등 개인의 만족을 위한 자기만족적인 새로운 소비문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많은 젊은 층들이 높은 소득을 올림에 따라 소비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소비문화는 제품 위주의 소비문화에서 경험 위주의 소비문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도인들은 앞으로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소비하는 특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소비문화 특징의 예를 들어보면, IT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입사 후 휴대폰을 구매하고, 1년 이내에 오토바이를 구매하며 2~3년이 지나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인도의 주별 소비패턴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인도의 소비문화를 이해하고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으나, 지역별 소비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입전략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 중심의 신중산층이 소비 주도

인도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 역시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득 및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소비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력 기준으로 인도는 세계 4위 내수시장대국으로 부상하여 향후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젊은 층과 중산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이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소비문화가 확대되면서, 미용 및 오락과 같은 개인의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인도 소비시장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29세 인구가 중국은 2010년 이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인도는 이 연령층이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인도 경제는 청년인구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젊고 높은 기술력을 지닌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IT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한 고액의 소비층은 중국보다 두터운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인도의 소비문화를 이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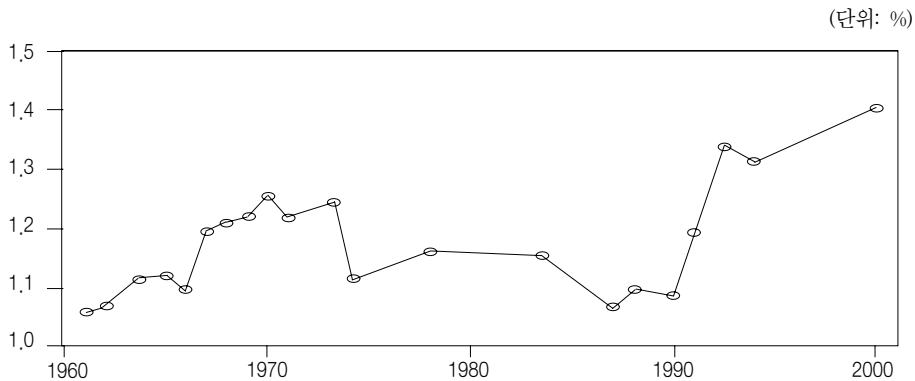
05

도 · 농간 소득격차 심화

축소되지 않는 최빈곤층

인도는 1991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8%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농 및 지역간 소득격차는 축소되지 않고 있다. 농촌 인구는 6억 5,0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연 2.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0년 이전까지는 도·농간 빈곤율 격차가 1.1~1.2%였으나 대외개방 및 개혁조치를 단행한 1990년대 이후 1.4%를 상회하며 오히려 농촌의 상대적 빈곤율을 심화시키고 있다.

■ 그림. 인도 도·농간 빈곤 격차율 ■



자료: Gaurav Datt(2002, 5), "Is India's Economic growth leaving the poor behind?" World Bank working paper.

인도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빈곤퇴치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최빈민층(Below Poverty Line) 인구는 2006년 2억 6,000만 명 정도로 1990년에 비해 500만 명 정도만 줄었을 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불균형적인 성장이 양극화 확대

소득 불균형의 주요원인으로는 자본과 노동력의 특정 산업 및 지역 집중, 좌파의 농촌 지역운동에 의한 자원개발 저해, 농촌의 높은 인구성장률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제조업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체성장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절대적인 고용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간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농촌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인도 중부지역에는 많은 천연자원이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농촌지역운동(peasant movements)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농촌의 인구증가율은 인도 전체 인구증가율 2.1%보다 높은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계속되는 인구증가는 농촌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 인도 정부가 농업시장을 개방하고 수입면화와 미국산 종자가 들어오면서 농촌에서는 사업 실패, 경작비용상승 및 농가부채로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촌 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이 관건

인도가 도·농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빈곤을 해결하려면 농민들이 농촌에 머물면서도 농산물 가공산업이나 서비스 분야 등에 취업할 수 있고, 일자리를 다양화해 농업에만 의존하는 인구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많은 부분이 도시개발에 편중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을 농촌지역 인프라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여 농촌경제활동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농업에 비적합한 불모지를 상업단지로 활용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도·농 및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균형이 계속 될 경우 인도의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06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개시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과제

인도정부가 1951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2007년 3월말 제10차 계획으로 끝난다. 제10차 경제개발계획 동안 GDP 성장률은 비록 목표치인 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평균 경제성장률이 7%로 추정되고 있어 1951년 이래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긍정적 상승효과에 발맞추어 인도정부는 빈곤층 절감을 통한 양극화 해소, 9% 이상의 경제성장, 인프라 개선 등 ‘포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07/08~2011/12년)을 세웠다. 인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는 제11차 개발 기간 동안 경제성장 목표를 8%에서 2006년에 9%로 수정하는 등 야심찬 제11차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 GDP 성장률을 10차 계획 중의 2% 미만에서, 2차 녹색혁명을 추진해 4%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인도가 향후 8~9%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 성장률이 12%대를 유지해야 하므로 11차 계획에서는 제조업 성장에 전력을 가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적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본 계획을 통해 수백만 명을 가난, 무지, 질병으로부터 구제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표. 인도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성장률 추이 및 목표

구분	9차(1997~2001년)	10차(2002~06년)	11차(2007~11년) 목표
농수산업	2.0	1.8	4.1
광공업	4.6	8.0	10.5
서비스업	8.1	8.9	9.9
GDP	5.5	8.0	9.0

자료: Planning commission government of India(2006)

제11차 경제개발계획의 제약 요소

인도경제가 9%대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IT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제조업 동반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발전에 가장 큰 제약요인인 도로, 철도, 항구, 공항, 통신, 전력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부족 해소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에 인도 정부는 인프라 시설을 향후 5~10년 안에 재정비하여 공급 부족을 해소할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인프라 투자 비중을 현재 GDP의 4.6%에서 11차 계획에서는 8%로 높여 책정하였으며 항공업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100% 개방하고 민관협력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력부족과 전력공급시설 낙후가 인도경제발전에 제약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인도는 전력시스템의 체계화와 전력의 고른 분배를 위해서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11차 계획에서는 숙련 및 비숙련 노동력의 직간접 고용을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는 건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는 물론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을 활성화시켜 기술인력, 전문인력 양성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정부의 투자 증가가 필수적이며 총투자의 상당부분을 민간을 통해서 충족하여야 하므로 민간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환경조성이 시급한 상태이다.

향후 전망

11차 경제개발계획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GDP를 9% 수준으로 높이고 유지하는 것과 균형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 성장률 추이에 서 본다면, 인도정부가 제시한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11차 계획에서는 실업률 5% 이하 감축, 비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 20% 인상, 유아 및 부녀자 사망률 감축이 이루어지고, 모든 마을에 식수·전화·전기를 제공하며 건설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7,00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프라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향상된다면, 인도경제는 11차 경제개발계획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고도성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평가된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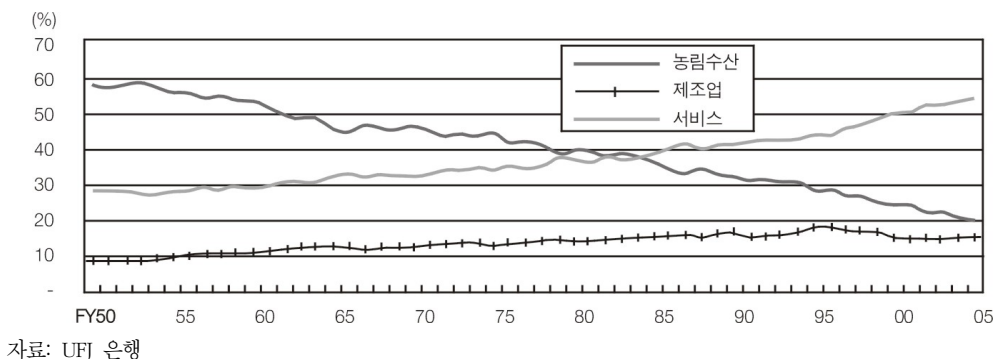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제조업 육성 확대

지식기반형 제조업 육성모델 채택

현재 인도경제는 IT산업 및 금융산업 위주의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었지만 앞으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제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리 직속으로 국가 제조업 경쟁력위원회 NMCC(Nation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Council)를 설치하여 인도의 제조업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제조업이 고용과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제조업 육성책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투자를 활발히 개방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제조업 서비스’ 육성정책을 시도하여 제조업 부문에서 대량생산에 의한 경제개발방식이 아닌 SW와 고급 엔지니어링에 주력하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 중심의 제조업 육성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향후 연평균 12%의 제조업 성장을 지속해 GDP 중 제조업 비중을 현재 15%에서 2012년 25%, 2020년 30%까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그림. 인도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



개혁과 개방정책 확대가 관건

제조업이 인도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혁과 개방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조업 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력과 철도, 도로, 항만 등 수송 부문의 인프라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전력부족량이 10%가 넘어 단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공항에서는 시설낙후로 항공기 연발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향후 전력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도 인도 제조업성장에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둘째, 비록 산업허가제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영세지정분야의 투자 제한, 복잡한 승인 및 허가절차 등이 적용되고 있다.

셋째, 공기업의 민영화가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 공항, 도로, 항만 등의 공기업 민영화 공산당의 반대에 부딪쳐 민영화가 늦어짐에 따라 경영의 효율화에 차질을 주고 있다.

넷째, 관료화 및 정부 역할 축소이다. 인도경제는 관료화로 인해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의 투명성이 낮고 관료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등 부패 측면이 여전히 다른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섯째, 경직적인 노동법 개혁이다. 아직도 1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 경직적인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어, 경영효율화는 물론 외국인투자 유인에 방해가 되고 있다.

여섯째, 단계적인 관세를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관세가 인도제품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일곱째, 인도의 조세제도는 복잡하고 세율이 높아 제조업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분야에 활용될 노동력 공급확대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교육확대가 요구된다.

향후 10% 이상의 제조업 성장 가능할 듯

제조업부문은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에 대한 인도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와 더불어 내수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제조업 부문은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2~06년 동안 제조업은 8%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향후 5년 동안에도 10~11%의 성장이 예상된다. 제조업 성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인프라 개선은 재정확보에 달려 있으나,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프라 건설에 민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투자유인정책이 요구된다.

08

인도 경제특구(SEZ) 신청 열기 가속화

인도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SEZ 활성화

1990년대 이후 인도에서는 특별경제구역 설치에 둔화되어왔지만 2006년 새로 도입된 경제특구 활성화법과 다양한 세제혜택은 경제특구 신청 및 개발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델(Dell), 구글(Google), 엑센추어(Accenture)등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전국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에 향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2006년 6월에는 인도 최대기업 릴라이언스(Reliance)그룹이 히르야나주 구라가온 지역에 향후 10년간 인프라 개발에 55억 달러를 투자하려 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제조, 서비스, 농가공산업의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여 125억 달러 정도의 수출상품을 생산하며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의 연간보고서(2004/05)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948개 기업이 SEZ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총 11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중 4만 명이 여성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인도 SEZ의 최근 2년간 수출 실적

(단위: Rs. Crores)

연도	수출실적
2003~04	13,854
2004~05	18,309
2005~06(4~12월 예상치)	15,581

자료: Ministry of Commerce, Annual Report 2005/06

세금감면 및 우호적인 정책으로 인해 SEZ 설치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IT서비스산업이 기업의 46%정도를 차지하며 섬유, 의류,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 관련 기업들이 SEZ 설립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표. 인도 SEZ 업종별 승인 추이

	정식 승인	형식 승인	총계
IT/IT관련 제반산업	85	38	123
멀티 생산재	13	35	48
섬유 및 의류	13	10	23
제약/생명공학	13	5	18
IT하드웨어	10	5	15
중공업	4	8	12
원자재	2	5	7
자동차	3	3	6
보석류	2	3	5
기타	5	5	10
총계	150	117	267

자료: Ministry of Commerce(2006, 8)

인도 경제특구의 논의점 및 향후 전망

인도의 SEZ가 전반적인 인도 거시경제에 플러스 작용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의 70% 가량이 생계를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SEZ로 인해 비옥한 토지가 수용되는 점을 강하게 반발하여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반향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인도기업들은 지역거주민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SEZ 설치 지구내의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SEZ 과열 징후가 보이면서 인도의 재정적자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도정부는 SEZ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특히 법인세)이 과도하여 연방정부에 막대한 세수 감소(2010년까지 380억 달러)를 가져오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특구를 통해 신규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이 SEZ로 이동함에 따라 인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SEZ 설립 초기의 단기적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SEZ가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유치에 기여하면 좋지만 일부 개발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SEZ를 건설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SEZ의 신청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 및 거주민 이주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인도정부는 2007년 1월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롭게 신청한 304개 경제특구신청서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승인을 보류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정상화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염려 속에서도 인도 상공부는 SEZ를 통해 2009년까지 10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130억 정도의 외자유치를 통해 제조업부문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09

인도기업들의 해외기업 인수 및 합병(M&A) 본격화

인도의 산업구조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으로 급격히 변화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 및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도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인수가 본격화 되어가며 다국적 기업들의 인도내 회사 인수보다는 인도 회사들에 의한 해외 인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 해외 M&A 흐름은 2006년 세계 최대 철강회사를 소유한 인도계 Mittal 이 세계 2위 철강사인 Arcelor를 2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인도기업들에게 세계화 전략 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인도 주요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현황

인도기업	인수된 외국기업
Mittal	룩셈부르크 Arcelor(230억 달러)
Tata Steel	영국 · 네덜란드 Corus(81억 달러)
	싱가포르 Natsteel 인수
	태국 Millenium Steel 인수
Tata Tea	미국 Glaceau(2억 달러)
	미국 Eight O'clock Coffee(2억 2,000만 달러)
Subex Systems	영국 Azure Solutions(1억 4,000만 달러)
Ranbaxy	루마니아 Terapia(3억 3,000만 달러)
Wockhardt	아일랜드 Pinewood Lab(1억 5,000만 달러)
Videocon	한국 Daewoo Electronics(7억 3,000만 달러)

자료: Chindia Journal, vol. 5.

M&A 사례: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타타철강(Tata Steel)

인도의 철강산업은 1991년 개혁 · 개방 정책의 시작으로 서서히 발전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세계경제질서의 한 부분으로 흡수되어갔다. 가장 최근에는 인도 타타철강(Tata

Steel)이 2007년 1월 세계적인 유럽의 철강기업인 코러스(Corus)를 인수하였다.

현재 타타철강은 인도 내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 철강산업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가 발표한 세계 철강사 경쟁력 비교 순위를 보면, 타타철강은 광산 보유, 수익성, 설비 확장 등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WSD의 세계 철강사 경쟁력 비교

	Tata Steel	POSCO	Bao Steel	Severstal	Arcelor-Mittal
순위	1	2	3	4	5
종합점수 (광산보유, 수익성, 비용절감, 제품품질등)	8.51	8.41	8.13	8.11	7.70

타타철강이 철강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격적 M&A 전략을 추진하여 해외의 우수 철강기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하였기 때문이다.

타타철강은 1991년 이후 경제가 개방되면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급 철강업체들의 제품이 인도시장에 밀려올 것을 예측하고, 기업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기존 사업체 통합, 원가 절감, 생산설비의 신예화, 새로운 기업문화 창달 등의 경쟁력 향상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현재의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인도의 M&A 활성화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예상

2006년 상반기 동안 외국기업이 인도기업을 인수한 사례는 34건인 데 비해, 인도기업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85건의 해외 M&A를 성사시켰다. 평균 인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200만 달러에서 4,7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총 거래액은 108억 달러에서 163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M&A 본격화 추세는 인도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유효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확대되는 인도 식품산업

2,000억 달러 규모의 인도 식품소비시장

인도의 총식품소비규모는 약 1,900억 달러, 가공식품 소비규모는 약 1,000억 달러로 총 식품소비의 53% 차지하며, 이 중 진출 가능 가공식품분야의 소비규모는 약 400억 달러로 추정된다(2004년 기준).

가공식품은 매년 7.8%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육류, 어류, 과일 및 야채, 기름 및 지방 31%, 곡식 및 전분 24%, 유제품 12%, 음료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일부 식품에 집중되어 있는 가공식품 산업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식품 중 시리얼, 콩제품, 식용유, 유제품, 양념 및 조미료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어류, 채소 및 과일, 음료수 등의 소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식품시장은 ① 고소득 중산층 확산 ② 서구식품 접촉 증대 ③ 도시 소매업 지속 변화 ④ 패스트푸드 체인망 증대 ⑤ 도시화 및 여성 근로자 증가 ⑥ 수입대체식품 가공산업 확대 등 특성을 갖추고 있어 코카콜라, 펩시, 하인즈, 켈로그 등 식품관련 유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인도인의 식습관

인도는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이며,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및 문화에 따른 음식문화, 신선한 음식과 전통음식에 대한 강한 선호 등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소득증대와 국제화 및 현대화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곡류보다는 과일 및 야채, 육류 섭취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스, 냉동식품 및 가공식품, 즉석식품, 스낵식품 등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건강과 편의성’에 맞는 즉석카레, 비탄산 음료 및 시리얼, 요구르트 음료, 포장 샐러드, 생수 등은 물론 탈지분유, 아몬드 및 건포도 등 건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7~10%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식품시장

인도 가공식품산업은 매년 7~10% 이상의 성장을 보여 2015년에 약 1,400억 달러,

인도 10대 이슈

2015년에는 약 2,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성장분야는 포도주 등의 주류(30배), 스낵류(16배), 파스타류(12배), 닭고기 등 조류(14배), 과일 및 채소(11배), 음료(5~6배) 등이다.

표. 식품별 소비규모 전망

(단위: 십억 루피, 백%)

구분		2003/4	2009/10	2014/15	시장변화규모
과일 및 채소		49	290	550	11.2
유제품		1,160	2,500	4,400	3.8
육류	소고기	20	50	86	4.3
	조류	7	37	104	14.9
비주류음료	차	78	136	211	2.7
	커피	23	33	42	1.8
곡물	쌀	800	980	1,150	1.4
	전분	520	650	760	1.5
	빵	38	95	198	5.2
	비스킷	69	182	393	5.7
	스낵	29	150	486	16.8
	파스타	8	36	102	12.8
	수산물	70	173	377	5.4
	설탕제품	43	86	129	3.0
	설탕	240	320	390	1.6
	제과	12	30	70	5.8
주류	초콜릿	8	25	59	7.4
	맥주	41	110	193	4.7
	양주	190	393	870	4.6
	포도주	3	50	90	30.0
콩류		400	605	810	2.0
탄산음료		80	137	201	2.5
맥아음료		12	35	75	6.3
향료 및 조미료		175	450	886	5.1
소금		25	53	90	3.6
합계		4,600	8,200	13,500	2.9

자료: Ministry of Food Processing Industries, Government of India(2005), *Vision,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Food Processing Industries in India*, p. 153.

인도의 식품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① 가공식품 분야 진출 ② 브랜드 마케팅보다는 인도인의 선호 제품 집중공략 ③ 신소비문화 확대에 대응 ④ 건강 제품을 강조한 제품홍보전략 ⑤ 소량포장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대 ⑥ 다양한 정보제공 및 현지 육성기지 구축 ⑦ 일부 식품관련 제조업분야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출시 유의해야 할 요인들은 ① 폐쇄적 농식품시장 및 강한 채식문화 ② 높은 관세 및 까다로운 식료품 관련법 ③ 위생 및 식품위생 관련법 ④ 유통망 및 인프라 부족 ⑤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 선호 ⑥ 한국교민 및 주재원 대상 식품 진출 ⑦ 냉동시설 부족 등이 있다.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중동 · 아프리카



KIEP

01

국제유가와 중동경제 전망

국제유가의 하락

2006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중동의 유가정책 및 중동경제 전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7년 1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51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던 2006년 8월에 비해 20달러 가까이 하락하였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중동 이외의 산유국에서 공급량이 증가하고 따뜻한 겨울 날씨로 난방유 수요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은 현재의 유가 수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배럴 당 50달러대를 적정한 유가수준이라고 중동 산유국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낮은 유가는 산유국의 수익을 감소시켜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만 유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중동 산유국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가가 너무 높으면 세계경제가 둔화되어 석유수요가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나 풍력발전과 같은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는 산유국의 경제적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국가들은 최근 EU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이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산유국들은 신축적인 산유량 조절을 통해 국제유가를 50달러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하면 유가는 2006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중동경제 5%대의 안정성장 전망

GCC¹⁾ 경제는 2003년 이후 유가의 가파른 상승 덕분에 7%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경제의 곳곳에서 경기과열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건설경기의 과열로 인건비나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고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두바이나 카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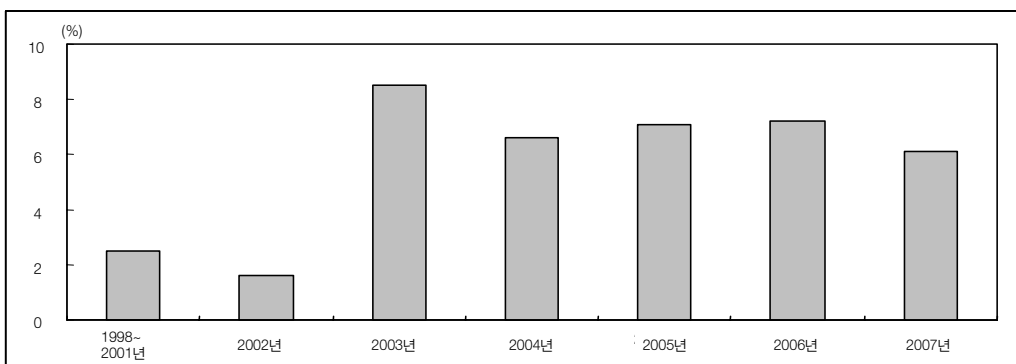
1) GCC는 걸프협력회의체(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중동 걸프지역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의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임.

중동 · 아프리카 10대 이슈

에서는 물가가 치솟고 특히 임대료가 연간 20%나 올라 정부가 가격제한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GCC 각국의 주식시장이 돌아올라 몇 년 사이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하였다.

국제유가의 상승속도가 둔화되면 이러한 경기과열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유가가 다소 하락하여도 경기가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약 2조 달러의 오일머니가 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이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석유안정기금(oil stabilization fund)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축적해놓고 있다. 유가가 하락하여 오일머니 유입이 감소한다고 해도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가 경기를 뒷받침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석유와 가스 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석유화학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조성이나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형 인프라 투자 등도 계획하고 있다.

■ 그림. GCC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주: 2006년은 추정치, 2007년은 전망치

자료: IMF

다변화하는 중동과의 협력

중동은 더 이상 수출시장이나 건설시장, 그리고 에너지 공급지역으로서만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오일머니를 흡수하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산유국들의 개발 정책에 발맞추어 진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있다. 영국은 중동의 M&A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IT기업들은 두바이에 중동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카타르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루브르나 구겐하임은 아부다비에 대규모 전시장을 짓고 있다. 우리도 상품과 플랜트 수출을 넘어 중동과 우리가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빨리 찾아내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02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이란간 긴장 고조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3년간 계속되고 있다. 9.11사태 직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이란에 대한 적대정책을 분명히 했다. 그 후 이란이 핵활동을 재개하고 이란의 핵개발 기술이 생각했던 것보다 발전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란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2005년 극단적 보수주의자인 아마디네자드가 이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미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핵개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EU가 미국을 대신하여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이란과 핵개발 중지를 위한 협상을 2년여간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으며, 이란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석유를 무기화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미국은 UN을 통해 이란에 대한 포괄적 경제제재를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실현할 수 없었다. 러시아는 오래 전부터 이란의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경제제재에 동의할 수 없었고, 중국은 앞으로 에너지분야에서 이란과의 협력이 절실했기 때문에 제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2006년 12월 UN 안보리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안을 통과시키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통과된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은 무기개발과 관련된 물자의 교역을 제한하고 관련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무기개발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이러한 제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핵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무기의 보유인데 이것이 중동 걸프지역에서 핵개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 공급의 중심지인 중동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지난해 이후 미국이 다른 지역의 항공모함을 걸프지역으로 이동시키며 이

란을 압박하는 데서도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국제유가의 중요한 위험요인

이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걸프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만약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이루어져 최악의 경우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세계 석유시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세계 석유수출의 30%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처럼 최악으로 빠져들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이 우방국과 함께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그에 대응하여 이란이 석유수출의 부분적 중단을 언급하는 사태가 전개된다면 국제유가에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 프리미엄이 부가될 것이다.

표. 이란의 에너지자원 현황(2005년)

항목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1,375억 배럴 (세계 2위)	26조 7,400억 m ³ (세계 2위)
생산량	404만 9,000배럴/일	870억 m ³ /일
수출량	279만 7,000배럴/일	-

자료: BP, OPEC

미국의 금융제재 강화 가능성

미국의 가장 핵심적 대외정책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문제, 이란 핵문제, 북한 핵문제 중 북한 핵문제는 최근 6자회담 합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 핵문제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국은 이라크 문제 때문에 다른 전쟁을 치를 여유가 없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란 입장으로서도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최근 지방 선거에서 아마디네자드 세력이 패배하고 의회내에서 현 정부의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 강경노선으로만 치달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핵 처리과정에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는 금융제재를 이란에 대해서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EU와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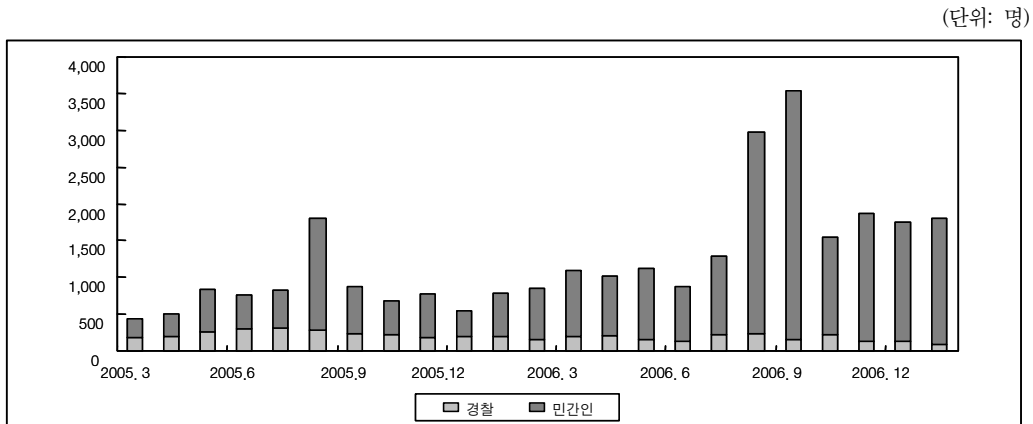
03

혼돈과 분열로 치닫는 이라크

앞이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정세

2003년 공식적인 종전 직후에는 연합군에 대한 공격의 성격을 띠었던 이라크내의 무력 충돌이 이라크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즈음한 2005년 후반부터는 내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라크 정세는 말 그대로 악화일로에 있으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부시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파를 초월하여 이라크 연구그룹이라는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았지만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은 이들이 제시한 대안마저 거부하고 오히려 2만 명 이상의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병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상황이 개선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림. 이라크 경찰 및 민간인의 월별 사망자 수



후세인을 추종하던 수니파와 현재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시아파내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장세력이 서로 출동을 일으키고 있다. 사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의 테러나 무장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규

모도 커지고 있다. 현재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고 대통령과 수상을 비롯한 신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으로 분리된 중앙 정치권력은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치안을 확립할 만큼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부족이나 지방권력이 강화되어 국가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쿠르드족의 미래

이라크 정세가 계속 악화될 경우 이라크 자체가 분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은 나라가 쪼개지지 않겠지만 매우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부의 쿠르드족이 현재보다도 훨씬 많은 정도의 자치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부의 쿠르드족은 이미 자치정부(KRG)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치안이 매우 안정된 상황이다. 현재의 법률로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독자적으로 석유 판매수익을 처분하거나 유전개발을 추진할 수 없으나, 정치불안으로 중앙정부의 석유수입이 감소하고 유전개발이 지연되면 쿠르드족이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를 둘러싸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수니파지역 역시 이미 중앙정부의 간섭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국가분열의 경향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는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나타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에 대해 인접국가인 터키와 이란이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라크내 쿠르드족이 독립한다면 터키나 이란의 쿠르드족 역시 분리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터키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독립을 시도할 경우 군사적 행동까지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가분열의 가능성

이라크 중앙정부의 장악력은 올해에도 계속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족 및 종파를 중심으로 한 지방권력 중심의 정치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터키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석유수입 및 유전 지배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올해 말에 이라크내 대표적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정부에 편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중앙정부 혹은 시아파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04

중동 건설 · 플랜트시장 활황 지속

제2의 중동 건설 · 플랜트 붐

중동이 제2의 건설 · 플랜트 붐을 맞고 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중동 각국의 각종 프로젝트 발주가 주요 원동력이다. 중동 경제전문지인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지에 발표되는 주요 프로젝트 발주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발주된 중동 건설 · 플랜트시장 규모는 약 1,1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의 발주액 약 1,180억 달러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건설 · 플랜트 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까지 약 25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던 중동의 건설 · 플랜트 발주 규모는 2004년 약 700억 달러, 2005년 약 1,180억 달러로 급성장한 바 있다.

GCC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건설 · 플랜트 붐은 고유가에 힘입은 정부의 풍부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국별 경제정책 및 인구증가 등의 경제구조적 요인들이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선 중동 산유국들은 여유생산능력의 확충을 목적으로 석유 · 가스부문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다. 급증하는 세계에너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각국 정부는 석유화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에너지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낮추고 산업구조를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높은 출산율과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수 · 전력, 교통 · 통신, 주택 등의 공급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것 또한 관련부문 발주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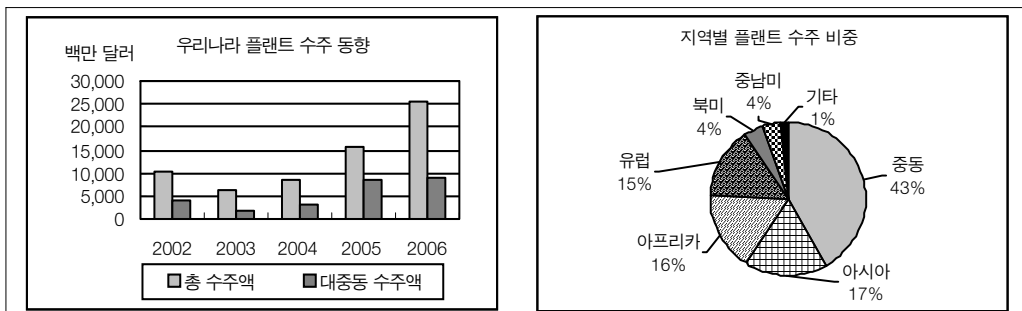
한국기업의 수주성과 확대

석유 · 가스, 석유화학, 수 · 전력, 부동산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중동 건설 · 플랜트 붐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 역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도 최근 중동 붐 덕분에 수주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중동 · 아프리카 10대 이슈

200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총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497억 달러로 이 중 중동으로부터의 수주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플랜트산업에 있어 중동시장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그림.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 동향 및 지역별 비중 ■



주: 지역별 비중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수주액 기준임.

자료: 플랜트산업협회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동 건설·플랜트시장의 성장과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경영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존 선진국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개도국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국들과는 기술경쟁이, 개도국들과는 원가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지시장 활황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프로젝트 착수가 현지 원부자재 및 인력 수급난으로 이어져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수주기업의 채산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플랜트 활황세 지속 예상

국제유가가 급락하지 않는 한 걸프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동 건설·플랜트 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가스 생산시설 확충과 석유화학산업 육성은 각국 경제개발정책의 핵심으로 이들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걸프지역은 소득수준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증가율 또한 높아 수·전력, 교통·통신, 주택 등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가 유지·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과열조짐이 있어 건설·플랜트 발주세가 일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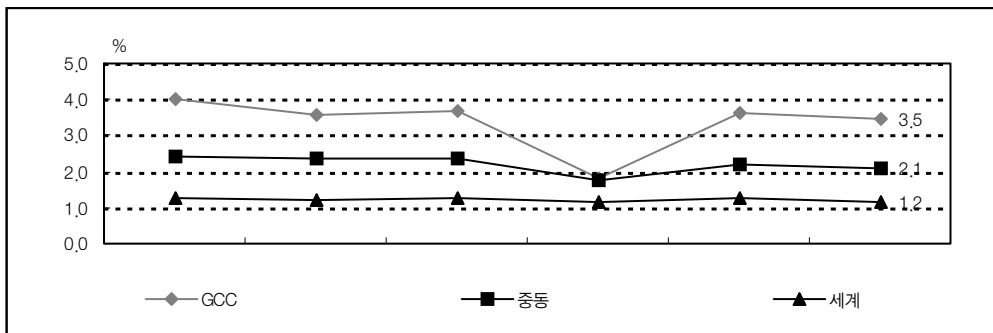
GCC, 급속한 인구증가와 그 파급효과

3.5%의 인구증가율

2005년 기준으로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의 인구는 3,460만 명이고 인구증가율은 3.5%이다. GCC의 인구증가율은 전세계 인구증가율 1.2%보다 약 3배 정도 높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동지역의 각국 정부가 인구통제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1980년대 초반에 3%를 초과하던 중동의 인구증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약 2.1%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GCC의 인구증가율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인구급증의 배경에는 GCC의 높은 경제성장, 외국인노동자 유입 확대 등이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3%를 넘었던 인구증가율 때문에 현재 GCC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이다. 2000년 이후에도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와 관련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GCC 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 그림. GCC와 세계 인구증가율 ■



주: 2003년 GCC 인구증가율이 급락한 것은 오만의 급격한 인구감소(-8%) 때문임.

자료: Global Insight

높은 실업률과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동의 실업률은 18~25%로 추정되고 있고 추가적인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GCC의 경우에도 높은 인구증가율, 정부 보조금 정책, 낙후된 교육시스템 및 노동력의 낮은 숙련 수준 등으로 공식적인 통계와 달리 실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GCC 각국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한, 미약한 기술기반,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산업다각화 실현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능력이 없고, 산업다각화 정책을 통한 민간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단기간내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실업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인구증가율로 생활 및 산업용수, 전기, 교육, 보건, 수송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GCC 단위에서 철도, 원자력에너지 개발, 전력선 연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GCC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기술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인프라 분야에 진출할 경우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확대 및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GCC는 현재 경제통합 목표 아래 다방면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GCC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높은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서 나열한 철도, 원자력에너지, 전력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GCC 각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기초 생필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어 높은 인구증가와 국제유가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06

GCC의 다각적 FTA 추진

GCC의 FTA 추진 현황

GCC 각 회원국은 GCC 단위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중이다. GCC 회원국들은 2001년 최고이사회(Supreme Council of the GCC states)에서 경제협약(Economic Agreement)을 통해 GCC 단위로 대외무역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의 목적은 GCC 단위에서 역외 국가와 무역협상을 추진함으로써 협상력을 키우는 데 있다. 그러나 바레인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2005년까지 무역협상 단위 문제로 인해 GCC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7년 현재 회원국들이 싱가포르와 개별단위로 추진하던 FTA를 GCC 단위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종전의 갈등이 봉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이 지역의 FTA 협상에서 진전 속도가 빠른 것은 GCC와 MERCOSUR, GCC와 일본간 FTA 협상이다. GCC와 MERCOSUR는 서로 이해가 일치하여 2007년 6월에 FTA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CC는 MERCOSUR지역의 금융, 통신 등 서비스 분야 투자에, MERCOSUR는 오일머니 유치 및 상품 수출 확대에 관심이 많다. GCC는 오일머니 투자처를 확보하고 MECOSUR는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양 경제블록간 FTA 체결의 기반은 이미 마련된 것이다.

일본은 GCC와 2006년부터 FTA 협상을 추진해왔으며, 2007년 말에 협상을 완료할

표. GCC의 주요국과의 FTA 추진 현황

협상단위 형태	현 황
블록 대 블록	GCC · EU(협), GCC · MERCOSUR(협)
블록 대 개별	GCC · 중국(협), GCC · 터키(추), GCC · 인도(협) GCC · 일본(협), GCC · 싱가포르(협)
개별 대 개별	바레인 · 미국(체), 오만 · 미국(체), UAE · 미국(협) UAE · 호주(협), 쿠웨이트 · 미국(협), 카타르 · 미국(추)

주: (추)는 추진, (협)은 협상, (체)는 체결을 의미함.

자료: 필자 작성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UAE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UAE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기술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총 원유수입 중 25%를 UAE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일본에게는 UAE가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다.

GCC · 중국, GCC · 일본 FTA 협상의 특징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석유소비국은 GCC와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FTA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 나라들이 GCC와 FTA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안보 강화이다.

중국은 역으로 자국의 석유소비능력을 기반으로 한 활발한 고위급 경제외교를 통해 GCC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동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과 달리 중동 정치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은 경제협력을 강조해 GCC로부터 석유수입을 안정화시키고 미국과 중동간 벌어진 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중동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기술 이전을 매개로 하여 GCC와의 FTA 협상 및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GCC와의 FTA 체결을 통해 자국 기업의 대UAE 진출을 확대해 기술전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이것은 일본이 기술전수를 GCC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은 FTA 정책을 물류허브인 UAE에 중동진출의 거점기지 마련과 동시에 UAE로부터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증대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GCC와의 FTA 체결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GCC가 필요로 하고 자국이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을 GCC에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GCC와 FTA를 추진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GCC와의 FTA 체결국가 확대 전망

GCC의 풍부한 석유자원,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능력 증대 등으로 인해 GCC와 FTA 체결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GCC 경제성장은 아직까지 석유 중심의 단순한 산업구조로 인해 국제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인구 3,400만 명의 GCC가 수출시장으로 매력을 계속 가질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상품판매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 또는 경제블록이 GCC와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07

중동에 적극 다가서는 중국과 인도

중국과 인도의 대중동 진출 현황

중국은 안정적인 석유공급 채널 확보를 위해 중동과의 교류 확대를 세계 어느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동 산유국과 이란을 대상으로 에너지 중심 외교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원유자원 개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인도는 아시아의 3번째 석유소비국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동으로부터의 안정적 석유 확보를 대중동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인도는 2006년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Abdullah Bin Abdul Aziz)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방문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기업이 인도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의 대중동 투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표. 중국의 대중동 에너지분야 진출(2006년 현황)

진출국	내 용
사우디아라비아	- 중국의 전략유 비축 사업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의 중(2006년) - 사우디아라비아정부와 에너지, 무역, 투자 관련 협정문 체결 (2006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 방문시) - 사우디아라비아 Aramco가 중국 Sinopec의 정유설비에 원유 제공 사업 추진 중(2005년) - 러브 알 칼리 바신(Rub al-Khali Basin)지역 천연가스 개발(3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2004년)
쿠웨이트	- 쿠웨이트정부와 석유·가스분야 협력 협약 체결 - 쿠웨이트 유전개발 사업인 프로젝트 쿠웨이트 참가를 위한 컨소시엄(85억 달러)에 참가 (10% 지분 보유)
UAE	- 아부다비 가스전 개발 참여 추진 중(2006년)
이라크	- al-Ahdab 유전개발, 협상 중(2006년) - 이라크 북부지역 유전개발 참여를 위해 중국 고위급 관료 이라크 북부지역(쿠르드 자치지구) 방문
이란	- 이란 북부지역 Pars 가스유전 개발 참여 협상 중(2006년) - 2008년부터 25년간 LNG 1.1억 톤 수입 관련 200억 달러 계약 체결(2004년) - Yadavaran 유전개발 참여 조건으로 Sinopec이 2.5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 관련 양해각서 체결(2004년)

자료: 필자 정리

중국의 대중동 진출확대정책 수단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유전개발 참여를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내 석유하류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란과는 LNG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국이 이란과의 석유분야 협력의 촉매로 LNG 구입을 활용한 것은 LNG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좋은 협력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동 산유국 중심으로 산업다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중국의 대중동 진출 확대가 반드시 중동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석유소비능력을 보유한 중국이 석유판매처로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중동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외에도 EU, 일본, 남미공동시장(MERCOSUR), 싱가포르 등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 상품 수출 등을 위해 중동국가 특히 산유국으로 구성된 GCC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중동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만큼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동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절실하다.

중국과 인도의 대중동 진출확대 전망

IEA에 의하면, 2005년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는 32%이나 2010년에는 그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계 원유 매장량의 약 2/3가 중동지역 특히 페르시아만 인접 국가에 분포되어 있어 중국의 대중동 석유 의존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 이라크정부와의 관계 강화 및 쿠르드 자치지역 유전개발 참여를 모색하고 있어 중국의 대(對)이라크 석유부문 진출이 조만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GCC와 중국간 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GCC와 중국간 FTA가 발효될 경우 GCC의 경제성장세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의 대GCC 수출은 확대되고 GCC의 대중국 석유화학분야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중동간의 협력은 아직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거대 석유소비국인 인도에게는 중동 특히 페르시아만의 석유수출국들이 매우 중요한 협력대상이다. 그리고 중동 입장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가 오일머니 투자처로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중동과 인도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08

남아프리카공화국, Post-BRICs 신흥시장으로 부상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남아공경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BRICs 이후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근래에는 IBSA(인도·브라질·남아공), BRICS(BRICs+카자흐스탄·남아공)라는 신조어도 탄생하고 있다. 2007년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도 남아공은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경제대국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세계 유명기관들이 발표하는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 신흥시장으로서 남아공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BRICs 국가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신흥시장으로서의 남아공 평가

		부패지수	경제자유도	성장경쟁력지수	비즈니스 용이성
남아공		30.1	32.7	35.9	18.1
BRICs	중국	48.6	71.7	41.9	58.7
	브라질	40.6	50.9	55.6	76.8
	러시아	61.6	76.7	64.1	51.0
	인도	61.6	77.4	42.7	74.8

주: 1) 숫자는 각 지표의 순위를 상위 백분율로 계산하여 표시한 것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04, 2005; World Economic Forum,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2005, 2006; Heritage Foundation, Economic Freedom Index 2005; World Bank, Easy of Doing Business Ranking, Doing Business in 2006.

남아공의 경제력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단연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40~50% 정도를 끌어들이고 있다. 남아공의 잠재적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남아공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기업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인적교류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남아공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유학생 포함) 수는 3,000~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평가되어온 남아공의 시장잠재력

그 동안 남아공은 BRICs와 NEXT-11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저평가되어왔다. 골드만 삭스는 남아공이 장기적으로 3.5% 내외로 견실하게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AIDS 등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 등을 이유로 남아공을 BRICs 및 NEXT-11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남아공경제는 이미 BRICs 탄생 이전부터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 으로부터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상무성은 지난 1994년에 세계 10대 거대 신흥시장국(Big Emerging Markets)에 남아공을 포함시킨 바 있다.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는 남아공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는 이제 관망단계를 지나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할 시점(a wait-and-see period is over)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남아공의 시장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남아공을 아프리카 대륙의 낙후된 국가 중 하나로 간주하는 회의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대(對)아프리카 관계의 틀에서 남아공의 가치를 조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잠재력 못지 않은 남아공 리스크

남아공이 BRICs 이후 차세대 시장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BRICs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신흥시장의 경우, 이미 시장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red ocean)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망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남아공은 소비시장, 제조업 생산 기지, 천연자원 보유국 등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국가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2010년 월드컵 개최, 신흥 흑인 소비계층의 형성 등으로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남아공을 본격적인 무역 및 투자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키며 협력수준을 격상시키고 있다. EU는 이미 남아공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였고, 미국과 중국 역시 FTA 추진 등을 통해 남아공에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남아공경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나 잠재적 위험요인 또한 적지 않다. 골드만 삭스도 지적했듯이 남아공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AIDS 등과 같은 문제이다. 세계은행은 AIDS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남아공경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아프리카 빈곤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남아공의 암울한 모습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2010년 아프리카 최초로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남아공은 마약천국인 콜롬비아 다음으로 높은 살인범죄율을 기록할 만큼 치안상황도 좋지 않다. 결국 신흥시장으로서 남아공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지의 여부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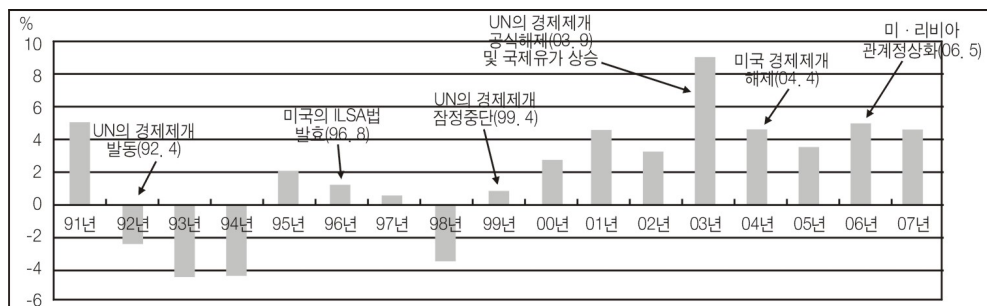
리비아의 국제사회 복귀와 경제개혁

정치적 결단과 대외개방을 통한 국제사회 복귀

10년 전만 하더라도 리비아는 폐쇄적 정치·경제정책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심각한 경제적 내핍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리비아는 수뇌부의 전향적 태도변화와 경제개혁·개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리비아는 테러지원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으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약 10년간 UN과 미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받아야 했다. 결국 테러혐의자 인도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등 가다 피 정권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리비아는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UN과 미국의 경제제재가 2003년과 2004년에 모두 공식 해제되었으며 2006년에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함께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한편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내핍을 극복하기 위하여 리비아는 에너지부문을 개방과 민영화 등의 경제개혁을 통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석유산업법 개정과 석유개발권 국제입찰 등을 통해 석유·가스산업의 현

■ 그림. 리비아의 경제제재 경과과정과 경제성장률 추이 ■



주: 1) 1998년까지는 EIU 자료이며, 1999년 이후 수치는 IMF 자료임.

2) 2006년은 추정치이며, 2007년은 예측치임.

자료: IMF Country Report(2006, 4); EIU Country Report 각호.

중동 · 아프리카 10대 이슈

대화를 위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 민영화 및 중앙은행 독립 등의 시장친화적 경제개혁과 함께 공공부문 축소 등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안정적 경제성장 및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제재 기간 동안 리비아는 재정부족과 경제침체로 각종 경제개발계획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하고 수입통제정책에 따른 물자난으로 고인플레이가 장기화되는 등 장기간의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적 불안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UN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리비아경제는 물가안정과 함께 4%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리비아의 대외개방 및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비아는 석유산업을 해외기업에 개방하는 몇 안 되는 산유국(세계 9위 매장량)으로 에너지협력의 여지가 크다. 리비아는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유전개발 및 탐사에 관한 국제입찰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리비아 석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과 치열한 경쟁을 치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리비아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 에너지, 주택, 전력, 교통 등 건설·플랜트분야에 약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므로 우리 기업의 참여 여지도 넓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對)리비아 플랜트 수출액은 약 25억 달러로 이는 대아프리카 수출액의 20%에 해당한다.

경제개방 및 개혁 기초 유지 예상

개혁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는 있으나 리비아의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기초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성향의 가넴(Ghanem) 총리가 2006년 초 경질되면서 경제개혁이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가넴 전 총리는 2003년 임명된 이후 석유·가스산업의 외국인투자 개방, 공무원 봉급 동결, 국영기업 및 은행 민영화, 각종 정부보조금 축소 등 경제개혁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에너지부문 개방과 기본적 경제개혁 기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석유 전문가로 알려진 가넴 전 총리가 리비아의 주 수입원인 국영석유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석유산업의 현대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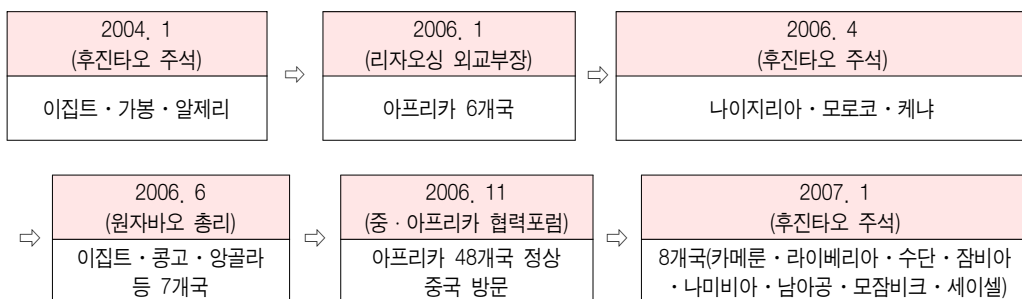
10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가속화

방문외교를 통한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가속화

중국의 파상적인 아프리카 외교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후진타오 국
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모두 16개국을 방문하는 등 아프리
카와의 관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초에도 후진타오 주석은 신흥 산유국인
수단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8개국을 순방하였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불과 9개월 만에 3
차례나 같은 지역을 찾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에는 대규모
의 개발원조가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부채 전액을 탕감하고 2009년까지 원조 규모를 2배로 늘리
겠다고 발표하는 등 아프리카 접근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프
리카내에서 중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아프리카국가들도 중국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표. 중국 고위층의 최근 아프리카 방문 일지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아프리카 전략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포장되든지간에 실질적으
로는 자원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전략은 제3세계에서의 정치
적 리더십 강화 차원을 뛰어넘어 석유 등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실리 추구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시장 침투는 우리 기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중국은 아프리카 최북단 알제리에서부터 최남단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저가 상품 공세를 통해 아프리카시장 침투를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 상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수출규모는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20억~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0년부터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2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5년 당시 한국의 대아프리카 상위 50대 수출상품(HS 4단위 기준) 가운데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상품과 중복되는 품목이 7개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그 수가 20개에 달하였다. 중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건설부문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입지가 그 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2005년 현재 아프리카에는 800개의 중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가속화 전망

중국의 아프리카시장 침투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식민지론을 운운하며 견제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정부들은 중국을 환영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아프리카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프리카의 개발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지금처럼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막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지속하고, 여기에 ‘소프트 파워’를 계속 확산해 나간다면 아프리카내 중국의 국가적 위상과 입지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이다.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중간 주도권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자국 원유수입의 30%를 아프리카에서 조달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9.11사태 이후 중동의 정세변화에 따른 석유수급의 불안정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이 지역을 새로운 전략적 석유공급기지로 다루어오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로부터의 석유 도입 비중을 현재의 15%에서 2015년경에는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가들도 아프리카 석유 확보에 적극 가세하고 있어 아프리카지역이 글로벌 경쟁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북미



KIEP

01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증가

미국 경기 추이

2006년 중반까지만 해도 2007년 미국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으나 2006년 말부터 미국 경기의 연착륙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주택경기의 침체, 소비증가세의 둔화, 원유수입부담 증가 등의 요인으로 경기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특히 주택경기 후퇴는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켰고, 이는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UN은 2007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3.8%)보다 낮은 3.2%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¹⁾

표. 미국 GDP 추이

(단위: 전기대비 연율,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질 GDP	3.9	3.2	3.4	5.6	2.6	2.0	3.5
개인소비지출	3.9	3.5	3.2	4.8	2.6	2.8	4.4
민간총투자	9.8	5.4	4.6	7.8	1.0	-0.8	-11.0
고정투자	7.3	7.5	3.0	8.2	-1.6	-1.2	-7.3
비거주	5.9	6.8	7.4	13.7	4.4	10.0	-0.4
건축물 ¹⁾	2.2	1.1	9.1	8.7	2.0	15.7	2.8
설비투자 ²⁾	7.3	8.9	6.7	15.6	-1.4	7.7	-1.8
주택건설투자	9.9	8.6	-4.2	-0.3	-11.1	-18.7	-19.2
정부지출	1.9	0.9	2.1	4.9	0.8	1.7	3.7

주: 1) structures로 각종 구조물을 의미함

2) equipment and software로 정보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산업장비, 운송장비 등을 포함함.

자료: 미국 상무부(2007. 1)

경기회복과 관련된 지표

미국 경기부진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인 주택건설경기 부진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1) UN, 「2007년 세계경제 동향 연례 보고서」.

를 보이고 있어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2006년 12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164만 2,000건으로 11월의 157만 2,000건과 비교하여 4.5%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하였다. 미래 건축경기를 보여주는 주택착공허가도 11월과 비교하여 5.5% 증가 (159만 6,000건)하였다.

■ 표. 미국의 2006년 신규주택 착공 건수 추이 ■

(단위: 천 건)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	1,760	1,659	1,724	1,478	1,572	1,642
증가율	-4.0%	-5.7%	3.9%	-14.3%	6.4%	4.5%

자료: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2007, 2)

소비지출 지표도 고용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의 호조는 소득 개선을 통해 소비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주택 관련 부채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조정 폭을 축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도 늘어나 무역적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수입물가 안정과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확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생산 감축 등은 국제유가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

2007년 경기 전망

2007년 미국경제는 주택시장의 조기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의 경기둔화는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2006년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의 경기 둔화는 극심한 경기침체 가운데 17.7% 감소했던 1982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월 25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존 주택 판매는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예상보다 침체 정도가 높지 않은 주택시장, 인플레이션 안정, 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비지출과 민간투자지출의 증대 효과 등으로 2007년 미국경제는 3.0%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연착륙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가 급격한 조정 없이 연착륙할 경우 개도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등은 유가와 가계소득 안정에 따라 수출 개선이 기대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던 석유제품, 철강 등의 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02

달러화의 제한적 약세

달러화 추이

2006년 달러화는 상반기에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에 강세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약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07년에도 달러화의 약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5~120엔 수준에서 6개월 후에는 110엔 내외로 하락하고, 1년 후에는 105엔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달러/유로 환율의 경우 1유로당 1.27~1.28달러 수준에서 6개월 후에는 1.29달러 내외로 상승하고, 1년 후에는 1.31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외환시장 추이 및 전망

(기간 평균)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원/달러	1,145	1,024	954	954.5~959.7
엔/달러	108.2	110.1	116.3	105~120
달러/유로	1.24	1.24	1.26	1.27~1.31

자료: 미국 연방준비은행(2007. 2); KIEP(2006. 12)

달러 약세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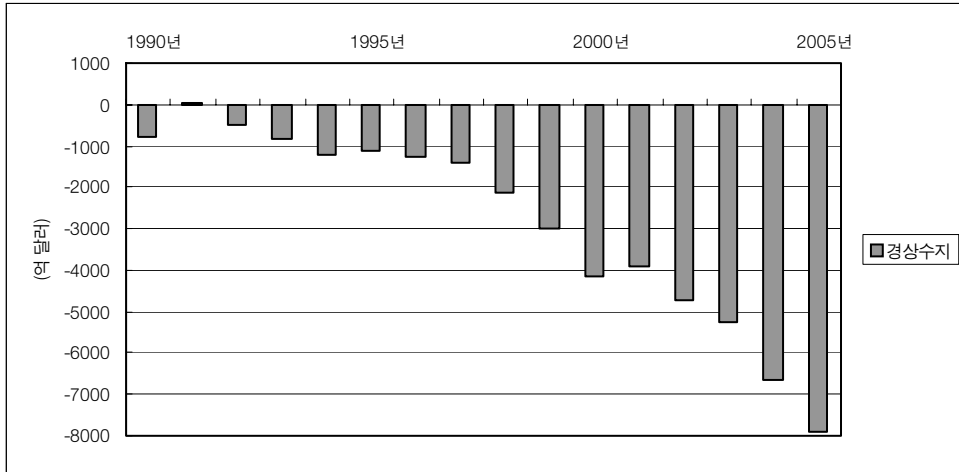
2007년 중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전망과 2007년 중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및 유럽과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다.

특히 경상수지 적자는 1995년 1,136억 달러에서 2005년 7,915억 달러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3/4분기까지 경상수지 적자도 6,559억 달러²⁾로 2006년도 경상수지 적

2) 2006년 3분기 경상수지는 잠정치이다.

자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달러화 약세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그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추이 ■



자료: 미 상무부(2007. 2)

한편 달러화 약세가 시작된 2002년 3월 말 대비 달러화에 대한 주요 통화의 절상률은 2007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유로화 51.1%, 엔화 11.2%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절상 폭이 작았던 엔화의 절상 압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인 달러화 약세 전망

그러나 미국과 주요국간 금리 차이로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달러화를 대체할 자산이 부각되지 않는 한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과 주요국간의 경제성장 격차 축소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달러화의 약세를 제한적인 범위로 국한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 유로지역의 금리인상 정도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이들 지역으로의 국제자금이동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오일머니 유입으로 외환보유고가 급증한 러시아, 중동국가 등이 외환보유고 구성통화 다변화 정책에 따라 유로화의 비중을 늘릴 경우 달러화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

03

미국의 대(對)중 경제정책

경제정책 이슈

세계경제성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정치·경제 관계는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7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의될 주요 경제이슈로는 위안화 절상, 지식재산권 보호, 보조금 정책 등이 있다.

표. 2005년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 파트너 순위

(단위: 십억 달러)

국가	무역수지	수출	수입
중국	-201.6	-41.8	243.5
일본	-82.7	55.4	138.1
캐나다	-76.5	211.3	287.9
독일	-50.7	34.1	84.8
멕시코	-50.1	120.0	170.2
베네수엘라	-27.6	6.4	34.0

자료: 미국 상무부(2007. 2)

대중 경제정책 추진 현황

미국은 그동안 대중국 경제문제에 대해서 환율 조작,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07년 2월 2일 중국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 문제를 WTO에 공식 제소하였으며, 중국이 관세장벽 완화 및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중국의 항구적 정상교역국가 지위 부여 철회, 위안화 절상 불이행시 27.5%의 보복성 관세 부과, 인터넷 통제국가로서의 수입규제 요구 법안 발의 등의 통상마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미국은 대중 통상전략의 5대 핵심사항으로 시장접근 향상, 미 통상법 집행의 강화, 불공정 무역관행 및 제도의 개선, 미·중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적

해결, 신규시장 영역 개척 및 수출 진흥을 지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접근 향상을 위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정부조달협약(GPA), WIPO 인터넷조약 등 무역진흥 관련 기구 가입을 촉구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국제표준화조약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 집행의 강화를 위하여 반덤핑 규제의 강화, 위조품 및 불법·강제 노역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위배되는 상품 수입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제도 개선을 위하여 산업보호 명목의 보조금 지급 철폐, 지적재산권 제도의 획기적 개선, 환율조작금지 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USTR 내부에 중국 통상정책 전담팀(TFT)을 구성하여 미·중 통상 이슈를 사전에 발굴하고, 중국의 실제 및 잠재 수요가 있는 새로운 분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미국은 처음으로 중국과 고위급 경제전략대화를 실시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관계 불균형해소와 이로 인한 미국 의회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6년 12월 14~15일 북경에서 열린 회담에 미국측 핸리폴슨 재무장관, 버넝키 연준의장, 수산 수압 USTR 대표 등이 참가하여 미국의 무역적자, 중국의 환율개혁, 시장개방, 지적소유권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으나 중국을 동등한 대화상대국으로 인정,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의 중국사무소 개설 허용 등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성과도 있었다.

새로운 이슈에 초점

2006년 11월 7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12년만에 상원과 하원의 지배권을 장악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의 압승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받게 되고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중국의 높은 무역장벽에 의해 초래되었다기보다 중국의 높은 저축률, 미국의 높은 소비와 낮은 저축률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이 미국 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어,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논의보다 세계시장에 대한 중국 전체의 무역수지, 적정 균형 환율, 시장접근에 대한 비관세장벽,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미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급격히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04

지정학적 변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적 요인들

2007년 미국경제는 경제변수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지정학적 변수들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 경제 외적인 변수들로는 북한 및 이란 핵문제, 이라크전쟁, 중동 산유국의 석유수급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 갈등은 이미 2005년 이전부터 진행되어왔으나 최근 기존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정당성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그동안 5대 핵보유국(미·러·중·영·프)의 핵 군축의무 위반과 이스라엘, 인도에 대한 특혜로 인해 비핵보유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만이 고조되어 2005년에는 비핵보유국의 반발로 NPT 평가회의가 결렬되었으며, 2006년 3월 미국과 인도의 핵협정 이후 비핵보유국의 불만이 더욱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3월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이후 늘어나는 전쟁비용과 미군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라크전쟁의 실패로 부시 행정부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올해 미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국제유가는 2006년 8월 말부터 이란 핵 갈등 잠복, 미국의 주택경기 둔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최근 2개월 동안 52~59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 및 북한의 핵문제가 지속되고, 중동에서 핵확산 도미노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지도력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둔 비핵화 협상(proliferation through negotiation) 전술을 지속할 전망이며 이란도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국제제재가 현실화되는 경우 석유의 무기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아시아, 중동에서 핵확산 도미노가 발생할 경우 핵우산을 전제로 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 표. 국제유가 동향 I

(단위: 미국 달러/배럴)

종 류	2006년 12월	2007년 1월	2006년 평균	2007년 평균 (1.1-2.5)	이동평균	
					10일	20일
Dubai	58.66	51.75	61.55	52.07	52.86	51.72
Brent	62.55	53.62	65.06	53.89	56.12	53.89
W.T.I	62.00	54.21	66.04	54.51	56.19	54.48
환율(원/달러)	934.57	946.77	964.14	946.79	-	-

자료: 산업자원부(2007. 2)

이라크 전쟁비용은 매년 크게 늘어나 베트남 전쟁 당시 연간 최대 지출액을 조만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라크 전쟁비용이 2006년 1,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7년 미국의 전쟁비용은 이미 승인된 700억 달러 외에 국방부의 추가 요구액이 모두 승인될 경우 1,697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쟁 비용 및 사망자 증가로 인한 이라크 전쟁 실패 여론은 국내외로부터 정치·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부담을 더욱 증대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2007 회계연도에 전쟁비용이 크게 늘어나도 세수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3,390억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세계 원유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핵문제, 나이지리아 정정불안, 허리케인 등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들은 국제유가를 일시적으로 70달러 이상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요인 외에도 전략비축유 확대계획, 투기자금 동향, OPEC의 감산 이행 여부, 미국 석유재고 동향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핵 군비경쟁이 진행되는 결과가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가 전략적으로 연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핵패권 구상을 가속화하자 미사일 성능 개량과 신형 핵탄두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다탄두 미사일과 북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東風-41’을 개발 중에 있다. 미국·인도 핵협정(2006. 3), 중국·인도 원전 및 핵기술 판매 합의(2006. 11)와 같이 핵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인도에 경쟁적으로 구애활동을 펴는 등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간 전략적 합종연횡이 심화되고 있다.

05

미국 2008년 대선레이스 시작

각 당 후보자 대선 출마 시작

2007년 들어 미국 대선을 위한 각 당의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는 등 2008년 대선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

2008년 1월 14~6월 9일	8월 25일~28일	9월 1~4일	11월 4일	12월 5일	2009년 1월 30일
주별 예비선거	민주당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	선거인단 선출 (사실상 대선)	대통령 공식 선출	대통령 취임식

각 당의 대선후보를 보면, 우선 민주당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³⁾과 배릭 오바마⁴⁾ 상원의원(일리노이)이 최대 관심을 끄는 가운데,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코네티컷)와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데니스 쿠시니치 하원의원(오하이오), 톰 빌삭 전 주지사(아이오와), 빌 리처드슨 주지사(뉴멕시코), 조 바이든 상원의원(델라웨어), 웨슬리 클라크 퇴역 장군이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화당의 후보의 경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자의 망명을 지원한 것으로 잘 알려진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캔저스), 제임스 길모어 전 주지사(버지니아),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뉴욕), 덩컨 헨터 하원의원(캘리포니아), 존 맥케인 상원의원(아리조나), 미트 롬니 전 주지사(매사추세츠), 톰 탱크레도 하원의원(콜로라도), 토미 톰슨 전 주지사(위스콘신) 등이 대선 출마에 나설 예정이다.

3) 힐러리 클린턴은 1월 20일(현지시각) 출마를 공식 선언하여 2008년 대선레이스가 가속화되었다.

4) 각 당의 대선주자 중 민주당의 경우 배릭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지난 1월 16일(현지시각) 2008년 대선 출마를 위한 예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배릭 오바마 상원의원은 풍부한 선거자금과 정치경력을 가진 힐러리 클린턴에 견줄만한 민주당 유력후보로 부상했다.

대선열기 가열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출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 공화 양당이 이번에는 치열한 공개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920년 이후 87년만의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2008년 대선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우선 선거자금과 자신을 후원해줄 자원봉사자들을 모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선두 후보군에 들 가망이 없으면 일찍 대선레이스를 포기하고 상원이든 하원이든 주지사 자리든 제2의 자리를 찾는 데도 유리하다는 것이 대선레이스를 상대적으로 일찍 가동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대선주자 중 선두그룹에는 힐러리 클린턴과 배럭 오바마 등이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존 맥케인, 루디 줄리아니 등이 유력 대선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2008년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는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 문제, 소득양극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터넷매체(예: UCC)를 통한 적극적인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때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의 출처불명 기사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선 승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후보들 가운데 전국적인 지지도를 가진 후보는 단 몇 명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번 대선은 대선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TIME지 여론조사

※ TIME지(1월 25일자)가 1월 둘째 주에 무작위로 선출한 1,064명의 전화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유력한 선두주자인 데 비해 공화당측에서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30%)이 루디 줄리아니 뉴욕시장(26%)을 근소한 차이로 앞지르고 있음.

- 당장 힐러리 클린턴과 존 맥케인 사이에 대선 경합이 치러질 경우 무승부(47%-47%)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의 출마선언을 둘러싼 떠들석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이 지지율 40%, 오바마가 21%로 클린턴이 오바마를 가뿐히 추월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존 에드워드는 11%로 3위를 기록함.
- 오바마는 유권자 사이에서의 인지도(후보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지식, ‘이 후보에 대해 나는 ‘많이’ 혹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51%로 힐러리의 94%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에서 취약점이 부각됨.

06

미국 금리정책의 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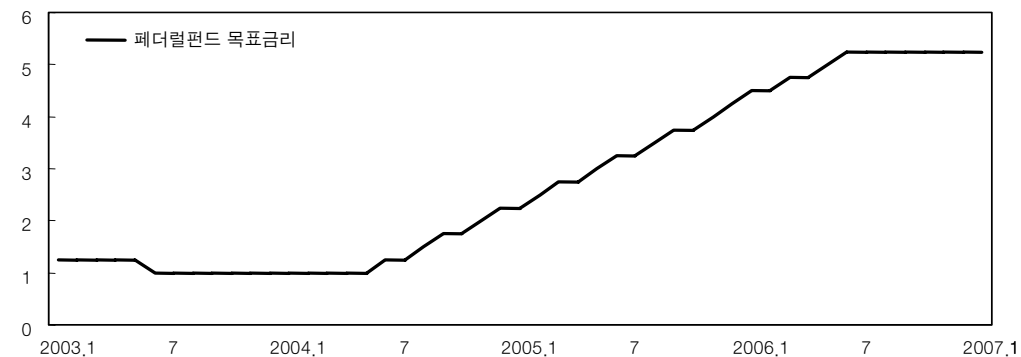
연방금리 현 수준 동결 지속

2007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1월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5.25%)하였다. FOMC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에도 일부 안정 신호가 나타나 향후 미국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 몇 개월간 근원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다소 개선되었으며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자원 활용도가 높아 인플레이션 상승의 잠재적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 긴축의 범위와 시기는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 그림. 미국 연방기금 목표금리 추이 ■

(단위: %)



자료: FBB(2007. 2)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 개선

2006년 6월 이후 FOMC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현 수준(5.25%)에서 동결해오

고 있는데, 지난 12월 FOMC 회의 때보다 미국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시장의 위축에 따른 성장 둔화 효과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007년 FOMC회의 일정

1월 30~31일	3월 20~21일	5월 9일	6월 27~28일	8월 7일	9월 18일	10월 30~31일	12월 11일
--------------	--------------	----------	--------------	----------	-----------	---------------	------------

자료: FRB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그동안 2007년 상반기 중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나 그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Bloomberg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2007년 2/4분기 중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그러나 이번 FOMC의 회의에서 나타난 경제상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인하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2007년 미국 경제성장 전망이 상향되고 있어 예상보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이는 경우 금리가 오히려 하반기에 인상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주요 투자은행들의 연방기금금리 전망

구분	전망일	현재	2007년			
			1/4	2/4	3/4	4/4
Citi	1월 25일	5.25	5.25	5.25	5.00	5.00
Deutsche Bank	1월 29일	5.25	5.25	5.25	5.00	4.75
Goldman Sachs	1월 26일	5.25	5.25	5.00	4.50	4.50
JP Morgan	1월 26일	5.25	5.25	5.25	5.25	5.75
Merrill Lynch	1월 26일	5.25	5.25	5.00	4.50	4.00
Bank of America	1월 19일	5.25	5.25	5.00		5.00
Lehman Brothers	1월 26일	5.25	5.25	5.25	5.25	5.25
UBS	1월 26일	5.25	5.25	4.75	4.25	4.25
평균		5.25	5.25	5.09	4.82	4.81

자료: 국제금융센터(2007년 1월 말)

07

미국 쌍둥이(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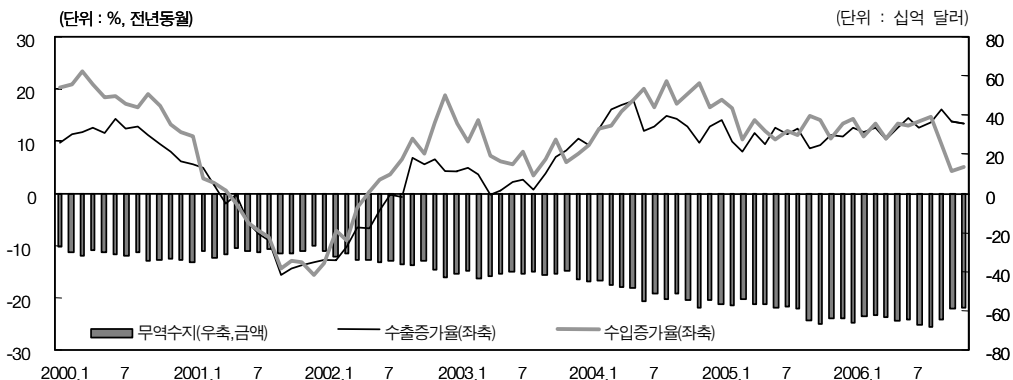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개선

최근 들어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수입증가세는 둔화됨으로써 무역수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이후 증가추세를 유지하던 미국의 월간 무역적자는 지난해 8월 68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감소하여 지난해 11월에는 58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2005년부터 미국과 일본 및 유럽경제간의 성장률 격차 축소, 유가 하락,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지속된 데 기인한다.

즉 2005년 중에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하회(수출증가율 및 수입증가율이 각각 전년대비 10.7%, 13.0%)하였으나 2006년 중(1~11월)에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2006년 중 수출 및 수입증가율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3.1%, 11.2%)하였다. 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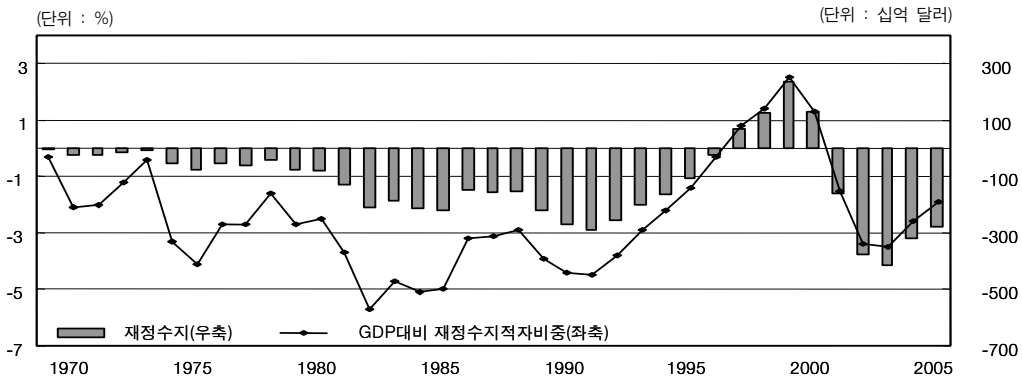
■ 그림. 미국 무역수지 추이 ■



주: 수출 및 수입은 상품 및 서비스 포함

자료: 미국 상무부(2007. 2)

■ 그림. 미국 재정수지 추이 ■



자료: 미국 의회예산국(2007. 1)

2006년 9월 이후(9~11월)에는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4.4%, 6.3%를 기록하는 등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와 아울러 지난해 8월 이후 OPEC의 수출가격을 비롯한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부담을 경감시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7년 1월 의회예산국(CBO)에서 발표한 2006년 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2007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도 당초 예상보다 1,100억 달러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보다 축소되고 있는 재정적자 규모의 원인은 6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증가에 따른 법인 및 개인소득세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쌍둥이 적자 개선 전망

올해에도 일본 및 유로지역의 성장격차 축소에 따른 미국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미국 수입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8년 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6%인 980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제성장 및 이라크 전쟁 등의 지정학적 요인이 악화되는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08

미국 무역정책 변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승리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무역정책 또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또는 공정무역(fair trade)을 주창하고,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적극 옹호해왔다. 또한 미국의 상원은 자유무역에 다소 우호적이고, 하원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구조상 FTA로 인해 지역구가 피해를 입는 경우 FTA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⁵⁾

따라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미국 의회의 무역정책 관련 성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은 보호무역 및 공정무역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⁶⁾

표. 미국 상·하원 정당별 의원수 변동 추이

의회 차수	상원			하원		
	공화	민주	기타	공화	민주	기타
제100차(1987~89년)	45	55	0	177	258	0
제101차(1989~91년)	45	55	0	175	260	0
제102차(1991~93년)	44	56	0	167	267	1
제103차(1993~95년)	43	57	0	176	258	1
제104차(1995~97년)	52	48	0	230	204	1
제105차(1997~99년)	55	45	0	228	206	1
제106차(1999~2001년)	55	45	0	223	210	2
제107차(2001~03년)	50	50	0	221	212	2
제108차(2003~05년)	51	48	1	229	204	1
제109차(2005~07년)	55	44	1	232	202	1
제110차(2007~09년)	49	51	0	196	229	0

주: 차수별 의회의 다수당은 음영 처리

자료: 미국 상원, 하원

5) 예로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샌더 레빈 민주당 의원의 경우 자동차산업이 중심인 미시간주 출신으로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강력한 입장을 견지함.

6)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 및 환경을 강조함.

표. 미국 양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성향

	민주당	공화당
지지층	중소기업, 근로자, 농민, 노조	대기업, 투자자, 자영업자
양당의 성향	공정무역 주장, 보호무역	자유무역 주장

보호무역 및 공정무역으로 전환

미국 의회를 보호무역으로 전환시킬 가장 큰 요인은 제조업 관련 일자리이고, 민주당은 공화당정부가 자유무역에만 매달려 미국의 무역적자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노동 및 환경 강조 등 공정무역으로 의회의 분위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마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7월 민주당의 슈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그레함 상원의원은 「슈머-그레함 대중국 공정무역법안」⁷⁾의 추진을 공식 발표하였고, 이는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작용해 당시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을 제공한 바 있다. 더구나 2005년 이 법안의 심의 보류를 목적으로 한 동의안이 상원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되어 자유무역에 우호적이었던 상원의 보호무역 분위기 강화가 부시 행정부를 놀라게 하였다. 따라서 2006년 중간선거 승리로 인한 민주당의 의회장악은 대중국 통상마찰 증가 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요 대내외 정책에 있어 부시 행정부와 충돌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는 통상마찰의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압력 증대 예상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이견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의회의 통상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세계적인 통상마찰이 특히 아시아 주요국(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쌍둥이 적자 축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향후 2~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중국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

09

미국 에너지 및 IT산업 정책 변화

부시, 국정연설에서 에너지공급 다변화 강조

지난 2007년 1월,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밝힌 새 에너지정책을 통해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청정석탄기술, 태양열과 풍력, 원자력 사용을 더욱 확대해 지속적으로 전력공급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위한 연료전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청정디젤 차량과 바이오디젤 연료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350억 갤런의 재생 및 대체연료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연료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대체연료의 공급을 늘려야 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도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석유자원 고갈 및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에너지정책방안(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서도 미국의 대중동 석유의존도 감축 목표안을 제시하여, 자동차, 가정용, 상업용 에너지분야에서 기술진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대중동 원유수입의 7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신에너지, IT 및 환경 관련 기술 지원 확대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역설한 것과 함께 민주당이 중시하는 IT 관련 기술, 환경 관련 기업, 신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정책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IT 관련 정책과 IT 기업의 기회」에 따르면, 향후 5년내 모든 미국인이 접근 가능한 광대역 통신망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도서 산간지역 광대역 통신망 확대에 연방정부 예산을 2배 이상 증대하고, IT기술 서비스 향상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선언하였다. 또한 도서지역이나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의 통신망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광대역 통신망 조세혜택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한 6가지 안⁸⁾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에너지 외국 의존도 감소 추진 및 바이오연료 기술 확대를 통한 친환경 기술 창출을 역설하였다.

신에너지, IT 및 환경 관련 기술 부상 전망

부시 행정부의 새 에너지정책을 통한 에너지공급 다변화(석유 감축)와 함께 민주당의 친환경 기술을 통한 에너지의 외국 의존도 감소 등으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이 배출가스에 조세를 부과하는 이상적 정책 보다는 배출가스를 신기술 개발이나 배출가스 기준을 높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어 하이브리드 기술, 신바이오에너지 기술 등을 응용한 에너지 기술이 미국시장에서 정책적 지원과 시장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역설한 바와 같이 향후 5년내로 모든 미국인이 접근 가능한 광대역 통신망 건설을 목표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IT관련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경제정책의 주요 차이점

	민주당	공화당 및 부시 행정부
감세	·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폐지 · 기존 감세정책 영구화 반대	· 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 실현 · 기존 감세정책 영구화 추진
재정균형	· 재정건전화 원칙(pay-as-you-go) 도입	· 감세, 군비지출 확대 (재정적자 지속적 확대)
에너지 정책	· 대형 석유회사에 대한 보조금 폐지로 확보된 재원으로 대체에너지개발 지원 · 석유업체의 가격담합 감시 강화	· 알래스카 등 국내유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추진
규제	· 기업규제 완화 반대	· 기업회계기준 완화, 집단소송 요건 강화 등 추진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5.15달러 → 7.25달러)	· 최저임금 인상 반대
대외무역	· 보호무역 및 공정무역 추진	· 각국과의 FTA 적극 추진

8) 펠로시 의원은 미국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한 6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고, 새로운 안은 (i) 부시 행정부의 실정을 극복한 실질적 안보 확보 (ii)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계획: 최저임금 인상 추진,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조세 인센티브안 추진 (iii) 에너지 독립 추진: 에너지 외국 의존도 감소 추진, 바이오연료 기술 확대를 통한 친환경 기술 창출 (iv) 의료보장 개혁: 의료비 지출 절감 및 제약회사에 지불되는 지나친 낭비요소 제거 (v) 대학교육 확대: 등록금 세금 공제 확대 및 등록금 대출 이자 하락 추진 (vi) 공공사회보장제도 유지: 연금개혁법 제정 및 개인저축 축진을 위한 인센티브 향상 등임.

10

캐나다 보수당정부 집권 정책 변화

보수당 12년만에 집권

지난 2006년 1월에 열린 캐나다 연방 총선에서 지난 12년간 집권한 자유당정부를 제치고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이 승리하였다. 보수당의 대외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양자간 FTA를 적극 추구하며, WTO 등 다자논의에서도 관세장벽 인하 및 무역보조금 철폐에 중점을 두면서 캐나다정부의 역할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되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에 노력하면서 특히 아시아 및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해가는 한편, 수출산업의 경쟁력 및 고용 창출 증진에 중점을 준다.

표. 캐나다 보수당의 주요 경제정책

1. 2012~13년까지 연방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감축
2. 부채감축에 따른 모든 이자절감분을 개인소득세 인하에 사용
3. 예상치 않았던 재정흑자는 부채상환을 통해 개인소득세 인하에 사용
4. 정부지출증액속도를 경제성장을 아래로 억제
5.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 2% 유지

에너지자원 개발에 적극적

보수당의 주요정책은 대표적으로 세율 인하 및 감면 확대, 동성혼 합법화, 산업기반 및 경쟁력 강화, 자유무역 및 통상협력 확대, 기업의 윤리 및 감사활동 강화, 사회간접 자본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보수당 신정부의 리더는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로 지역적 기반이 자원부존지역인 알버타 등 서부지역임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자원 개발에 좀더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06년 4월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Board) 보고서에 따르면, 알버타주 북부지역에 미국 플로리다주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의 토양층이 오일샌드(Oil Sand)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790억 배럴의 원유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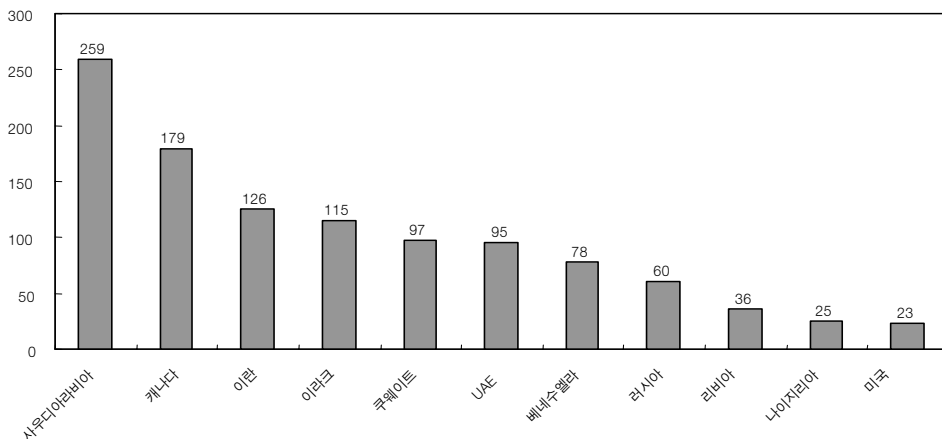
보고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캐나다 알버타주 오일 샌드 개발이 2000년 이후 개발 가속화 및 본격 생산궤도에 이르면서 캐나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세계 2위의 원유보유국가로 부상하였다.

오일샌드

원유를 함유한 모래 또는 사암(砂岩). 오일샌드에는 아스팔트(비튜멘)와 같은 중질유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모래, 물, 점토 등과 섞여 자연상태로 노천에 널려 있음. 이것을 모아 비튜멘을 분리한 다음 원유를 뽑아내 정제과정을 거치면 각종 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음. 보통 2톤의 오일샌드에서 1배럴 가량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음.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에 거대한 오일샌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유를 대신할 새로운 자원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림. 국가별 원유보유고 ■

(단위: 십억 배럴)



자료: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2006, 4)

에너지개발 현황 지속

지난해 캐나다경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양상 및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제조업의 약세라는 큰 특징으로 대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에너지개발에 힘입은 알버타주 및 건설정기를 바탕으로 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서부지역의 경기가 활기를 지속하여 캐나다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며, 향후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보수당 신정부의 지역적 기반이 자원부존 지역인 알버타 등 서부지역임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에 좀 더 적극성을 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개발을 통한 캐나다 서부지역 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중남미



KIEP

01

중남미 좌파정부 경제정책과 지속 가능성

현황 및 배경

중남미지역에서는 1998년 베네수엘라 차베스(Hugo Chavez) 정부를 시작으로 브라질의 룰라(Luis Inácio Lula de Silva, 2002년),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 2002년), 우루과이의 바스케스(Tabaré Vázquez, 2004년), 칠레의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2005년), 볼리비아의 모랄레스(Evo Morales, 2006년), 에콰도르의 코레이아(Rafael Correa, 2007년), 니카라과의 오르테가(Daniel Ortega, 2007년) 등 좌파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외에도 페루의 우말라(Ollanta Humala)와 멕시코의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가 2006년 대선에서 선전했다.

중남미지역의 역사로 볼 때 최근 좌파정부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가 아니다. 1930년대 이후 1960년대에는 주로 포퓰리즘이라 지칭되는 민족민중정당(예: 아르헨티나 페론당, 멕시코 제도혁명당)들이, 이후에는 쿠바를 시작으로 급속히 확산된 사회주의식 좌파(예: 쿠바혁명, 니카라과혁명)들이 있었다. 그리고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정당들은 다소 우경화 혹은 온건화되어 중도적 성격의 정당으로 부상하다가 칠레의 중도좌파연합(Concertación) 정부와 같이 권력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좌파정부의 등장 배경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남미지역을 휩쓴 신자유주의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생활상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된 결과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즉 좌파가 융성하게 된 뿌리가 되었던 중남미지역의 빈곤과 불평등이 신자유주의주의식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심화되었다는 점이 새로운 대안을 원하는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배와 평등 추구 세력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와 좌파의 온건 우경화 이외에도 냉전 종식 이후 좌파정부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 등도 중남미 좌파 바람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좌파정부는 학술적으로 그 분류기준(포퓰리즘, 권력집중도 등)에 따라 다양한 지칭이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반미, 자원민족주의,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의 기준에

따라 대체적으로 브라질의 룰라와 같은 실용주의적 좌파와 차베스와 같은 급진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이 경우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는 실용좌파로,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급진좌파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 아르헨티나와 최근 출범한 에콰도르 및 니카라과 새 정부는 그 성격이 여전히 모호하여 분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좌파정책 지역적 확산 주목

좌파정부 등장은 각국의 정치·사회적 변혁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지 않아 좌파정부 등장에 기여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중남미지역 좌파바람에 대한 주요 관심은 베네수엘라 등 급진좌파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 사회주의’와 같은 정책들이 지속가능할지 하는 것이다. 즉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성 재정지출의 확대가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중남미지역에서 더 이상 좌파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닌 가운데,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국가의 경제개입 확대, 자원 국유화, 기간산업 국가통제 강화, 세제 강화, 노동권 강화 등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심은 급진좌파의 정책들이 실용좌파 진영과 결합되어 중남미지역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베네수엘라가 추진 중인 자원산업 통합(예: Petrosur, Petroandina, Gasoducto del Sur), IMF에 대응한 지역금융기구 설립(예: Bansur), FTAA에 대응한 지역경제통합체(Alternativa Bolivarian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ALBA) 결성 등은 중남미지역 차원에서 급진좌파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지속가능성, 유가 및 주변국 협력에 의존

실용좌파이든 급진좌파이든 좌파정부들이 실행 중인 정책들은 각국이 처한 고유의 특성에 따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만 향방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비록 베네수엘라가 반미 기치 아래 급진좌파의 최선봉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자원’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 더 이상 무기로 작동하지 않고 주변국과의 공조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 즉 차베스 대통령은 2007년 1월 31일 의회로부터 향후 18개월간 단독으로 세제, 사회보장제도, 국방 및 공공질서, 에너지, 통신, 교통 등 주요 11개 분야의 법령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는 권한(enabling law)을 위임받았는데, 이러한 권한의 성공적인 행사 여부도 결국 기반이 되고 있는 고유가의 지속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02

미주자유무역지대(FTTA) 협상과 MERCOSUR · EU FTA 협상 전망

협상 쟁점을 둘러싼 대립으로 협상 교착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과 MERCOSUR · EU간 FTA 협상은 세계 최대의 경제 통합 출범, 관세동맹 수준의 경제블록간 최초의 FTA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MERCOSUR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미주 34개국들은 1994년부터 2005년 출범을 목표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을 추진해왔다. FTAA 협상 진전에 고무되어 EU도 MERCOSUR과 1999년부터 2004년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본격 추진했다.

2000년대 초까지 야심차게 추진되던 양 FTA 협상은 본격적인 협상단계로 접어들면서, 주요 협상 쟁점을 둘러싼 협상국간의 대립으로 협상이 중단되거나 지체되었다. 제8차 미주통상장관회의(2003. 11)에서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FTAA 협상은 4차 미주정상회의(2005. 11)의 합의 실패로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MERCOSUR · EU FTA도 FTAA

표. FTAA와 MERCOSUR · EU FTA의 주요 협상 쟁점

구분		주요 협상 쟁점
FTAA	MERCOSUR측	- 농산물시장(오렌지주스, 곡물, 유제품, 육류 및 커피, 바나나) 개방, 농업보조금 철폐 - 점진적 시장접근
	미국측	- 서비스시장(금융, 교육, 엔지니어링, 전문직서비스) 개방 - 경쟁정책, 지식재산권(IPR), 정부조달시장 개방 - 신속한 시장접근
MERCOSUR · EU FTA	MERCOSUR측	- 농산물시장(올리브유, 담배, 쌀, 옥수수, 마늘, 육류 및 유제품 등) 개방, 특히 쇠고기 수입쿼터 확대 - 농업보조금 철폐
	EU측	- 투자, 정부조달시장, 통신, 해운 및 은행 부문 개방 - 자동차시장 신속 개방

와 달리 협상은 지속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표류 중이다. 2006년 11월 개최된 협상에서도 양측은 뚜렷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을 뿐 협상 진전에는 실패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선진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현재 FTAA와 MERCOSUR · EU 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통적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다. FTAA 협상에서 MERCOSUR측은 농산물시장 접근, 농업보조금 철폐 문제 등이 선결되지 않는 한 협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U와의 협상에서도 MERCOSUR측은 농산물시장 개방, 특히 쇠고기 부문에서 많은 쿼터를 요구해오고 있다. MERCOSUR의 농산물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과 EU는 모두 이들 문제가 양자간 FTA보다는 WTO 협상에서 다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또한 MERCOSUR 협상 주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좌파정부의 선진권과의 FTA에 대한 미온적 태도도 신속한 협상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브라질 룰라 대통령 및 아르헨티나 키르츠네르 대통령 집권 이후 MERCOSUR의 FTA 정책은 선진권과의 FTA 협상보다는 인도, 남아공 등 개도권과의 FTA 협상(남남협력)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WTO DDA 협상 타결이 관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FTAA 및 MERCOSUR · EU FTA 협상의 신속한 돌파구는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다. 현재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 회원국들은 농업개도국들로 구성된 G-20를 결성해 선진국의 농업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 FTA 협상 진전은 △MERCOSUR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정회원국 가입에 따른 영향 △MERCOSUR 회원국의 잦은 통상분쟁 등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과 EU는 FTA 협상에 미온적인 MERCOSUR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인근 중남미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미 및 안데스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MERCOSUR 회원국인 우루과이와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도 칠레,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고 중미 및 안데스공동체(CAN) 국가와 FTA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

03

남미 에너지통합 가속화 전망

남미국가간 에너지통합 확대

최근 남미지역에서는 경제통합의 한 축으로 에너지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남미국가들은 2005년부터 베네수엘라 주도하에 각 소지역별로 원유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해 추진해왔다. 남미지역에서는 Petrosur(2005. 7), 카리브지역에서는 PetroCaribe(2005. 6), 안데스지역에서는 Petroandina(2006. 6) 등의 협정이 속속 체결되었다. 특히 2006년 12월 볼리비아에서 개최된 제4차 남미정상회의에서 베네수엘라는 남미석유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2007년 1월 18~19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MERCOSUR 정상회의에서 남미정상들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를 잇는 전장 9,283km, 총 공사비 230억 달러 규모의 남미가스파이프라인(Gasoducto del Sur)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브라질 국영석유회사(PETROBRAS)는 2009년 1단계 파이프라인 공사 개시를 위해 공동으로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통합은 베네수엘라가 주도

최근 남미지역에서 에너지통합은 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를 무기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베네수엘라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의 적극적인 ‘석유 외교(Oil Diplomacy)’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인근 중남미국가들의 좌파정부 등장을 공공연하게 지원하는 한편 기존 좌파정권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남미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움직임도 에너지통합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남미 12개국(1)들은 2004년 12월 남미국가공동체(Comunidad Sudamericana de Naciones: CSN) 창설을 선언하고, 우선 협력과제로 에너지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1) MERCOSUR 5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 안데스공동체(CAN) 4개국(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 칠레 + 가이아나 + 수리남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에서의 천연가스 부족과 수요확대도 남미 천연가스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케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가스부족 사태로 심각한 에너지위기를 겪고 있다.

표. 중남미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2005년 기준)

국 가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십억 배럴)	생산량 (천 b/d)	매장량 (조 입방미터)	생산량 (십억 입방미터)
멕시코	13.7	3,759	0.41	39.5
아르헨티나	2.3	725	0.50	45.6
볼리비아	0.4	-	0.74	10.4
브라질	11.8	1,718	0.74	11.4
콜롬비아	1.5	549	0.11	6.8
에콰도르	5.1	541	-	-
페루	1.1	111	0.33	-
트리니다드 토바고	0.8	171	0.55	29.0
베네수엘라	79.7	3,007	4.32	28.9
기타	0.9	142	0.17	3.5
중남미	117.2	10,173	7.44	175.1

자료: BP(2006); *Oil & Gas Journal* (2005, 12, 19), "Worldwide Look at Reserves and Production."

막대한 자원 조달이 에너지통합 성패의 관건

남미지역에서 에너지통합은 오일달러의 위력을 앞세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야심, 주요국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협력 수요 등이 맞물려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2007년 4월 베네수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인 ‘남미에너지정상회의(South American Energy Summit)’는 에너지통합 추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남미지역에서 이같은 활발한 에너지통합 추진은 남미국가간 경제적 결속력을 강화시켜 그간 지지부진했던 남미국가공동체(CSN)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남미지역에서 에너지통합의 전도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첫 번째 관건은 에너지통합 프로젝트에 소요될 막대한 자원 조달 문제이다. 중남미지역에서의 잦은 정치 혼란과 경제위기, 이에 따른 빈번한 국제계약 위반 등의 전통으로 다국간 성격인 에너지통합 프로젝트에 대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커다란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자원 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베네수엘라는 2006년 12월 전략적 투자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관건은 모든 에너지통합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베네수엘라 1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변동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가 좌우될 공산이 크다는 태생적 약점을 안고 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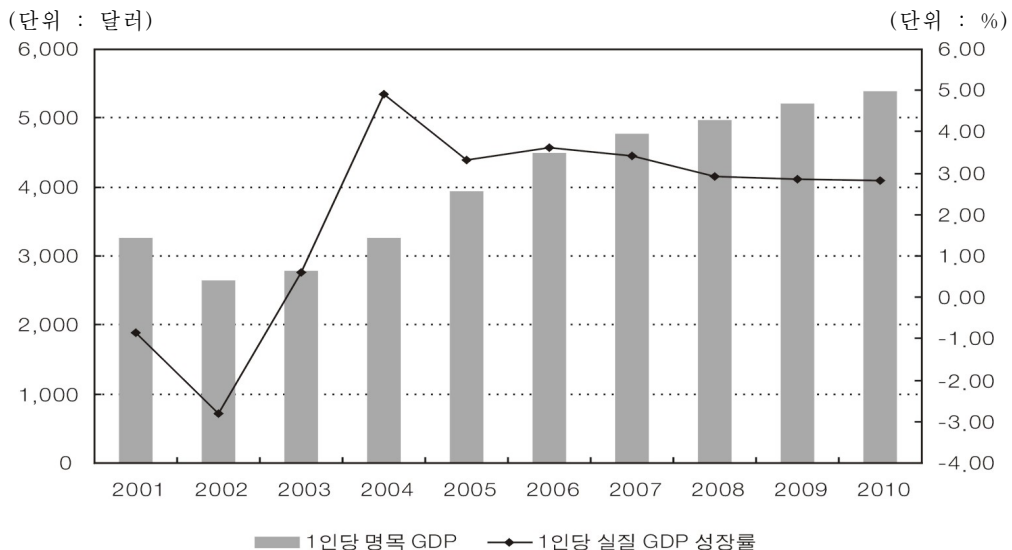
중남미 고성장 지속문제

지속되는 중남미 고성장

‘조심스러운 낙관주의(Cautious Optimism)’로 표현되는 중남미경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한 경제발전(16% 누적성장률)을 이루어왔지만, 이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중남미의 대표적 국가들인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남미경제의 고속성장을 대변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2005년 및 2006년 GDP는 각각 4.3%와 4.7% 증가했다. 중남미경제의 고성장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세계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남미국가들의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원자재의 수요가 늘어났고 원자재 공급국인 남미경제가 이득을 본 것이다.

표. 중남미국가들의 성장률: 1인당 명목 GDP



중남미 경제성장에 변수 요인

그러나 남미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중남미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를 고려하였을 때 2007년 이후 중남미경제도 하강세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 세계경제가 둔화되면 원자재의 수요가 줄어들고 원자재 수출이 주된 많은 중남미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는 중남미 원자재 중 중요한 구리, 커피, 설탕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세계시장의 둔화와 맞물릴 경우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남미국가들의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근래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는 칠레는 총수출의 82%가 원자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다른 견해로 중남미경제의 성장에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3년간 중남미국가들의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실질 임금은 상승하고, 외채는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감소해 2005년에 6.1%, 2006년에는 4.8%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재정은 거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와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모습은 근래 중남미경제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2007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차츰 떨어진다 하더라도 급격한 하강세로 접어들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남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중남미경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는 중남미경제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중남미경제의 주요 성장요인이었던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중남미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남미는 제1차 수출품인 원자재 이외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국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와의 FTA를 통해 원자재 외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시작으로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하고 투자등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05

중남미 · 아시아 FTA 현황

중남미와 아시아국가들간의 FTA 체결 현황

중남미와 아시아지역간의 FTA 체결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점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10월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남미 국가들은 총 22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그중 7건은 아시아지역의 국가들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지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국가 가운데 칠레는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칠레는 2004년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안데스국가들을 연결짓는 다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칠레는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 중이며 남미의 통상리더로 새롭게 부상하여 중남미국가들의 FTA 체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멕시코 또한 남미의 FTA 선진국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FTA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시아국가들 중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가 중남미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도모하면서 앞다투어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 준비 중이다. 중남미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원자재 공급국이기 때문에 양측간의 경제협력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표. 중남미 · 아시아국가들의 FTA 체결 현황

체결 연도	체결 국가
2004	칠레 · 한국
2004	파나마 · 대만
2004	멕시코 · 일본
2005	칠레 · 브루나이 · 뉴질랜드 · 싱가포르
2005	파나마 · 싱가포르
2006	칠레 · 중국
2006	칠레 · 일본

자료: CEPAL

FTA 체결 효과

현재 아시아국가들과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칠레의 경우, 구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FTA에 힘입은 FDI 유입 확대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 칠레의 무역흑자는 80억 달러였으며 칠레의 총교역량 중 30% 가량이 아시아지역의 국가들과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칠레는 FTA 체결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여주면서 여타 중남미국가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칠레의 성장세에 자극을 받은 파나마와 멕시코 역시 아시아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파나마가 대만 및 싱가포르와 각각 FTA를 체결했으며, 2004년 멕시코와 일본간 FTA가 체결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은 칠레 및 여타 남미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MERCOSUR와 같은 남미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발빠른 시장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부상 또한 아시아·중남미간 관계에 커다란 변화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세계의 시장과 공장으로서 부상하면서 남미국가들의 원자재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서 천연자원을 수입하면서 이들 국가들에게는 모두 5위 이내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04년 중남미의 대중국 수출은 217억 달러로 1990년 대비 약 14배 가량 증가했다. 아시아와 중남미지역간의 관계 강화는 FTA 체결 등 경제협력을 통하여 긴밀화되고 있다.

중남미·아시아 FTA의 미래

21세기에 들어 중국경제가 부상하고 또 원자재 공급기지로서 중남미의 중요성이 제고되면서 아시아·중남미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남미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재를 FTA 등 경제협력을 통해 확보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중남미에서는 칠레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 외의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측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 한국, 칠레, 멕시코의 활약으로 인해 중남미국가들과 아시아국가들간의 FTA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멕시코를 비롯한 다른 중남미국가들과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중국과 일본 또한 2007년내 더 많은 중남미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남미 진출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06

브라질 경제성장정책의 성공 가능성 및 경제회복 전망

성장촉진계획(PAC) 발표

브라질정부는 오랜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2007년 들어 본격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실시했다. 2007년 출범한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 2기 정부는 1월 22일 브라질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성장촉진계획(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PAC)을 발표했다. PAC는 경제성장 촉진, 고용 확대, 브라질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① 인프라 투자 확대 ② 공공대출 확대 ③ 투자환경 개선 ④ 세금 감면과 세제 개선 ⑤ 장기 재정정책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룰라정부는 PAC를 통해 궁극적으로 2008년부터 5%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표. 성장촉진계획(PAC)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인프라 투자	- 향후 4년(2007~10년) 총 2,366억 달러 투자 · 물류분야 274억 달러, 에너지분야 1,290억 달러, 사회·도시환경 정비분야 802억 달러
공공대출 확대	- 연방저축은행의 위생·주택관련 대출 대폭 확대 - 근속연수보상기금(FGTS)을 활용, 인프라투자기금 신설
투자환경 개선	- 환경관련 규정 재정비 - 지역개발기구 부활 · 아마존개발청(Sudam), 북동부개발청(Sudene)
세금 감면과 세제 개선	- 인프라·건설부문 투자시 사회통합기금·사회보장융자부담금(PIS/Cofins), 개인소득세 등 감면 - 디지털 TV 및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위해 공업제품세(IP) 등 각종 세금 감면
장기재정정책	- 공무원 인건비 및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설정 →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의 토대 마련 · 연방공무원 인건비 = 물가상승률 + 1.5% · 최저임금 인상률 = 물가상승률 + 실질 GDP 성장률

룰라 2기 정부의 최대 정책과제는 경제성장

브라질정부가 PAC와 같은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브라질경제

의 낮은 성장률에 기인한다. 2003년 룰라정부 들어 변동환율제, 물가목표제, 긴축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의 3대 축을 기반으로 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브라질경제의 전반적인 기초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 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대내외 신인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2007년 1월 말 현재 S&P, 무디스 및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의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은 2002년보다 2단계 상향 조정되었으며, 국가위험도(EMBI+기준)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라질경제는 고금리 및 높은 세제부담에 따른 기업의 투자 의욕 저하, 지나친 사회분야 투자 확대에 따른 공공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 부진 등의 요인으로 저성장에 머물렀다. 룰라 1기 정부 4년(2003~06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6%로 같은 기간 세계경제 평균성장률 4.8%, 신흥개도국 평균성장률 7.3%를 크게 하회했다.

룰라 대통령은 신속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절감, 2006년 대선에서 경제성장의 필수요건인 투자율을 GDP 대비 20%에서 25%로 끌어올려 연 5%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중장기적으로 3%대 경제성장 전망

PAC 발표는 룰라 2기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축이 집권 1기 경제안정에서 경제성장으로 이동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브라질경제가 그간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견고한 성장세로 진입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장기적으로 브라질경제는 집권 1기 룰라정부가 구축한 탄탄한 기초 경제여건의 토대에도 금리인하 효과, PAC 등 적극적인 성장촉진정책 등에 힘입어 잠재경제성장률 수준인 3%대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브라질경제가 4~5%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상파울루 경제인연합회(FIESP)가 지지하는 신속한 금리인하와 연금 및 세제개혁 등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표. 브라질의 중장기 경제전망 ■

(단위: %)

전망기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브라질정부	2.8	4.5	5.0	5.0	5.0
EIU	2.9	3.2	3.6	3.6	3.8
Global Insight	2.9	3.7	3.6	3.8	3.9
Tendencias	2.9	3.2	3.3	-	-

주: 2006년 추정치, 2007~10년 전망치

자료: Governo Federal(2007. 1. 22), PAC 2007-2010; EIU Viewswire(2007. 1. 16); Global Insight (2007. 1. 12); Tendencias(2007. 2. 12), Inside Brazil.

07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위기와 향후 전망

회원국간 통상분쟁 심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으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등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MERCOSUR는 지난 15년간 역내교역 확대, 외국인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이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MERCOSUR는 회원국간의 극심한 통상분쟁과 이탈 움직임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회원국간의 통상분쟁은 무역, 투자,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했다. 현재 회원국간 주요 통상분쟁은 △아르헨티나·브라질간 무역적자 분쟁 △아르헨티나·우루과이간 펄프제지공장 건설을 둘러싼 투자 분쟁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간 국경 수송 분쟁 등이다. 특히 최근 회원국간 가장 첨예한 통상 분쟁으로 비화된 아르헨티나·우루과이간 투자 분쟁은 브라질이 분쟁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데다 역내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기구에 조정을 의뢰하는 등 MERCOSUR의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노출시켰다.

또한 역내 소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통합 발전과정에서 경제규모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MERCOSUR 통합 이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FDI 유입 비중은 증가한 데 반해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비중은 감소했다.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FDI 유입 비중은 통합 이전(1986~91년) 각각 1.6%, 1.2%에서 통합 이후(1992~2005년)에는 1.0%, 0.6%로 줄었다. 특히 경제통합 공고화의 바로미터인 회원국들의 역내 수출의존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우루과이의 역내 수출의존도는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폭(1994년 47% → 2005년 23%)으로 하락했다.

표. MERCOSUR의 연도별 역내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역내 총수출	19.3	20.5	22.7	24.7	25.0	20.6	20.9	17.3	11.4	11.9	12.7	12.8
아르헨티나	30.3	32.3	33.2	36.3	35.6	31.2	31.9	28.2	22.2	18.8	19.2	19.0
브라질	13.6	13.2	15.3	17.1	17.4	14.1	14.0	10.9	5.5	7.8	9.2	9.9
파라과이	46.2	57.4	62.8	53.7	51.7	41.5	63.6	52.4	58.1	59.1	53.2	54.0
우루과이	47.0	47.1	48.1	49.7	55.4	44.9	44.4	40.8	32.6	30.5	26.1	22.9

자료: 아르헨티나 외무부 국제경제센터(CEI)

우루과이, 미국과 FTA 협상 추진

결과적으로 이같은 잦은 통상분쟁과 경제의 비대칭성에 따른 피해 심화는 회원국들의 MERCOSUR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역내 약소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2006년 들어 공공연하게 현재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에서 FTA 단계로의 후퇴를 주장했다. 특히 우루과이는 MERCOSUR 통합체와는 별도로 개별국 차원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왔으며, 마침내 2007년 1월 25일 FTA 사전단계로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을 체결했다.

경제통합단계상 관세동맹인 MERCOSUR는 제3국과 대외협상시 공동의 입장을 견지해야하는데, 우루과이의 미국과의 무역·투자협상은 MERCOSUR 통합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FTA 단계로의 후퇴 논쟁 가속화

외견상 보여지는 MERCOSUR의 분열 양상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 주도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정부의 MERCOSUR 공고화 의지가 확고해 MERCOSUR의 와해를 속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2007년 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32차 MERCOSUR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등 역내 약소국들의 불만을 봉합하기 위해 7,000만 달러 규모의 구조통합기금(FOCEM) 설립에 합의했다. 앞으로 FOCEM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서는 물론 브라질 재계에서도 제3국과 개별국 차원에서 FTA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MERCOSUR의 FTA 단계로의 후퇴를 둘러싼 논쟁은 2007년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08

NAFTA 농업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멕시코 농업정책

현황 및 배경

멕시코는 2008년 1월 NAFTA 민감 품목으로 설정된 농산물(옥수수, 콩, 탈지분유)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오연료 생산 붐으로 옥수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 및 식품가격 앙등이 야기되자 농업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심화되고 있다. 멕시코 옥수수 가격(가공 후)은 2006년에만 80%(톤당 1,850 → 3,500페소), 포르피야 가격은 2006년 6월 킬로그램당 6페소에서 2007년 1월 10페소로 상승하고, 이차적으로 사료 가격 인상을 야기하여 닭고기 및 우유 등 축산물 가격 급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처방으로 식용 옥수수(white corn)의 무관세 수입량을 60만 톤 이상 확대하고, 포르피야 가격을 심리적 저지선인 킬로그램당 10페소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분업계, 포르피야 제조업계 등과 협상을 추진했으나 강제적인 이행에

표. 멕시코 옥수수 생산 및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

연도	생산량 (천 톤)	소비자 물가지수	식음료담배 물가지수	포르피야 및 옥수수 제품 물가지수	옥수수 포르피야 물가지수	옥수수 덩이 및 가루 물가지수	옥수수 물가지수
1996	18,026	50	54	33	31	43	71
1997	17,656	61	64	42	39	51	89
1998	18,455	70	74	55	53	64	94
1999	17,706	82	86	76	74	84	106
2000	17,557	90	91	84	82	89	117
2001	20,134	95	96	95	94	96	115
2002	19,298	100	100	100	100	100	103
2003	20,701	105	105	110	110	108	113
2004	21,667	110	112	119	119	116	119
2005	19,292	114	118	127	127	120	122
2006	22,000	118	121	135	136	125	129
평균증가율(%): 1996~2006		9	8	15	18	13	7

자료: 멕시코 농림부(SAGARPA)

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농업계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약 95%가 식용이고 국내 소비량을 충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포르피야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노력해야지 수입 확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수입확대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멕시코 옥수수생산자연맹(CNPAMM)은 식용 옥수수의 사료용 전환, 수확기와 비수확기 사이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공급불균형, 유통구조(독과점), 시장개방 유예 등을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옥수수 경작지 확대,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실곡(생산량의 약 35%) 관리, 관제시설 투자(80만 헥타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장개방 대비 미흡

옥수수는 멕시코의 주식으로서 NAFTA에서조차 충분한 구조조정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장기간 유예품목으로 지정되어 보호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옥수수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소비시장의 혼란은 멕시코 옥수수 생산체제가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멕시코는 사료용 옥수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용 옥수수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르피야 가격 상승을 국제가격 상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식용 옥수수 수입쿼터 확대에 대한 농업계의 비판과 옥수수 생산구조 재편, 유통구조 감시 강화, 시장개방 유예 등의 요구 등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옥수수 가격 동향은 NAFTA에 입각한 완전개방으로 값싼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게 만드는 한편,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생산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농업보호 한계

멕시코 농업계가 요구하는 주요 정책은 가격통제와 같은 반(反)시장적 요소, 옥수수 생산체제의 대외경쟁력 부재, 정경유착에 따른 독과점 제어 한계 등으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워 실행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NAFTA 재협상도 미국의 반대로 실현가능성이 낮다.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에 담긴 에너지정책은 식량문제, 화석에너지 소비 감축 및 환경문제 해결보다는 해당 농업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칠 NAFTA 농업 재협상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09

멕시코 제도혁명당 분열에 따른 정치변동 가능성

현황 및 배경

2000년 7월 대선 결과 71년만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제도혁명당(PRI)이 2006년 7월 대선과 총선에서 다시 패배한 이후 계파간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분당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즉 2005년 말부터 PRI의 주요 정치세력인 전교조(SNTE)의 대표이면서 PRI 전국집행위원회(CEN) 전 위원이던 고르디요(Elba Esther Gordillo Morales)의 해당(害黨) 행위(△PRI 대립 정당인 Nueva Alianza 창당 △PAN 대통령후보 지원 △PRI 대선 후보 및 지도부 비판 등)로 내홍을 겪은 PRI가 차기 당권경쟁으로 재차 혼란을 겪고 있다.

PRI, 멕시코 정치문화의 근간

PRI의 분열은 멕시코 정치구도에 대규모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장기 집권하던 PRI가 1987년에 1988년 대선을 앞둔 후보 경선평정에서 PRI와 민족혁명전선(FDN)으로 분열된 이후 지지기반이 약화된 사례가 있다. PRI는 1988년과 1994년 대선에서 역대 가장 낮은 50.4%와 50.2% 지지를 받는 데 그치고, 2000년 대선에서는 녹색당(PVEM)과 연합한 국민행동당(PAN)에 42.4% 대 36.1%로 패배하였으며, 2006년 대선에서도 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1997년 중간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주요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 중간선거 결과 제2야당(하원 20.6%)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FDN은 1989년에 1988년 대선 이후 PRI에서 탈당한 인사들을 규합하여 민주혁명당(PRD)으로 개칭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하여 2006년 대선에서는 PAN과 0.6% 포인트의 박빙의 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의회 중간선거에서는 제1야당이 되었다.

PRI는 조합주의(corporatism)라는 독특한 멕시코 정치문화의 근간을 형성해왔는데, 비

표. 멕시코 주요 정당별 하원의원 구성 변화

(단위: %)

정당	1994~97년	1997~2000년	2000~03년	2003~06년	2006~09년
PAN	23.8	24.2	41.2	30.2	41.2
PRD	14.2	25.0	10.0	19.4	25.4
PRI	60.0	47.8	42.2	44.8	20.6
기타	2.0	3.0	6.6	5.6	12.8
총의석수	500	500	500	500	500

록 현재 제3의 정당으로 전략했지만 지방정부(32개 주 중 17개)는 물론 의회(하원 106석, 상원 33석)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 중이다. PRI는 멕시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71년간 축적된 통치경험과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갖춘 정당이다.

여야 협력기반 구축의 기회

2007년 2월 18일 치러진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당대표)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중도좌파를 표방한 전 틀락스칼라 주지사인 파레데스(Beatriz Paredes Rangel)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PRI의 주요 지지 세력을 양분하고 있는 중도파인 잭슨(Enrique Jackson Ramírez) 전 상원의장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어서 한동안 당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즉 파드레스의 지지기반은 당내 보수파들로 다수의 주지사, 상·하원의원, 전국농민연맹(CNC), 멕시코노동자연맹(CTM), 전국공무원노조연맹(FSTSE) 등이고, 잭슨은 팔라시오(Mariano Palacios Alcocer) 현 당대표와 마드라소(Roberto Madrazo) 전 대통령 후보 등 테크노크라트들에 반대하여 2005년 중반 민주연합(TUCOM-Antimadracista)을 결성한 세력과 SNTE를 비롯한 다수의 PRI 주집행위원회회장들의 지지를 받았다.

PRI 당내 갈등은 대선 전후 표면화되었다가 이번 선거로 악화되었다. 이에 PRI는 전당대회 직후 발생할 당의 분열을 예방하는 데 노력해왔는데, 잭슨 진영이 조기에 선거패배를 시인하고 협력을 표방함으로써 갈등수습의 기반을 마련했다. 비록 당의 결속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최소한 2007년 3개주 주지사 선거 혹은 2008년 중간선거 개최시기까지는 과거 PRI의 정치기반이었던 사회적 협약 재구축을 약속한 파레데스의 지도 아래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할 전망이다. 또한 전당대회 이전부터 파레데스가 정부 및 PAN과의 정책적 협력 가능성을 표방해왔기 때문에 세제, 에너지, 노동 등 경제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주요 개혁정책들이 재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권 재창출 의욕을 보이고 있는 PRI로서는 전통적 지지기반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 정적인 PAN과의 전면적인 협력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10

‘포스트 카스트로’ 쿠바의 정치 · 경제 전망

현황 및 배경

2006년 7월 31일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81세) 국가평의회 의장의 건강악화로 부의장 겸 국방장관인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76세)에 일시적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졌다. 임시적인 권력구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정계 복귀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과 반체제세력들, 최근 중남미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친쿠바·반미 성향의 좌파정부들, 그리고 쿠바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및 투자자들이 ‘포스트 카스트로’ 쿠바를 주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은 카스트로 사후 사회주의체제 유지 가능성과 경제정책 향방이다.

의미 및 효과

카스트로는 1959년 혁명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속적인 경제봉쇄와 체제붕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쿠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킨 중추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카스트로 사후 쿠바 대내외 정치는 물론 경제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 우선 정치체제 및 권력구도, 경제체제, 대미관계 등에서 주요 변화가 예상된다.

점진적 개혁 · 개방 지속 전망

‘포스트 카스트로’ 권력구도 재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²⁾ 가운데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를 중심으로 군부와 공산당이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권력구도가 가장 유력한 구도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는 첫째, 라울에 대한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 유약한 반

2) ① 라울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군부와 공산당이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권력구도 ② 기술관료 이미지
가 큰 라울과 알라르콘(Ricardo Alarcon) 인민권력국가평의회 의장, 라헤(Carlos Lag) 국가평의회 부
의장, 로케(Felipe Perez Roque)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집단지도체제 ③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
제 이행과 같은 빅뱅

체제 세력, 대외적인 정치·경제적 후원자(중국, 베네수엘라) 존재, 둘째,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붕괴, 그리고 변화과정을 통해 체제 유지 방안에 대한 교훈 습득, 셋째, 권력세습구상 공식화(1997. 10 제5차 공산당 전당대회), 공산당 및 정부조직 개편·강화, 측근인사(Raulista) 포진, 사상강화운동 등을 통한 사회주의체제 유지와 권력이양 작업 완료 등에 근거한다.

표. 쿠바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항 목	단 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¹⁾	2005년 ¹⁾	2006년 ¹⁾
경상GDP ¹⁾	십억 달러	18,9	20,3	27,9	28,4	29,9	32,0	35,8	40,3
1인당 경상GDP	페소	2,071	2,144	2,534	2,743	2,883	3,017	3,224	3,500
실질GDP 성장률	%	7,8	1,2	5,6	1,5	2,9	4,2	8,5	9,5
재정수지(/GDP)	%	-2,4	-2,3	-2,5	-3,2	-3,3	-4,2	-4,2	-3,2
물가상승률(평균)	%	-8,6	2,8	-2,3	8,8	0,6 ¹⁾	1,3	7,0	6,1
실업률(평균)	%	n/a	6,6	5,6 ³⁾	4,0	2,3	1,9 ⁴⁾	1,9 ⁴⁾	1,9
수출	십억 달러	1,87	1,54	1,67	1,42	1,67	2,19 ⁴⁾	2,11 ⁴⁾	2,59 ⁴⁾
수입	십억 달러	3,66	4,20	4,88	4,14	4,61	5,56 ⁴⁾	7,53 ⁴⁾	9,36 ⁴⁾
경상수지	백만 달러	-167	-361	-859	-674	-347	-340 ¹⁾	-296	38,8
외채	백만 달러	11,305	11,209	10,961	10,900	11,300 ¹⁾	13,800	14,500	15,200
환율(연평균) ²⁾	페소/달러	19,2	22,3	21,5	26,0	26,0	26,0 ⁴⁾	23,1	22,2

주: 1) EIU 추정치, 2) 시장환율 기준(공식환율은 1:1), 3) 2000년 이후 기말 기준, 4) 확정치.

자료: EIU(2007. 2), Country Report : Cuba.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지만, 민주화·자유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언론 자유화, 자유선거 도입 등)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진척이 없을 전망이다.

이러한 정치변동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과도정부는 공산당과 사회주의체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계승한 정통성을 기초로 체제 유지를 위해 급진적인 개혁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중단기적으로 경제체제 및 정책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쿠바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단편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도입, 그리고 통제와 조절을 반복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계획경제체제 유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가격 자유화, 외국인투자 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변화의 속도는 정치권에서 표출되는 사상적 저항과 개혁에서 비롯되고 있는 실업, 소득 격차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제어될 것이다.

한국에 있어 쿠바는 중남미 유일의 비수교국이라는 점, 그럼에도 최근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적으로 급진전되어왔다는 점에서 카스트로의 사망이 양국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유럽



KIEP

01

2007년 EU 경제 전망

2006년 EU 경제, 2000년 이래 최고 성장

2006년 들어 2000년 이래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EU와 유로지역은 경기 상승기 조가 3/4분기에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EU와 유로지역은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8%와 1.0% 성장함으로써 경기상승세를 이끌었다. 2007년 1월 11일 Eurostat이 발표한 3/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EU가 전기대비 0.6%, 유로지역이 0.5%로 추정되어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EU와 유로지역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3.0%와 2.7%를 기록하여 1/4분기의 2.5%와 2.2%, 2/4분기의 3.0%와 2.9%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2006년 EU의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고정투자가 경기회복을 주도하였으며 가계소비와 정부소비도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3/4분기의 경우 가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전기대비 0.6% 증가하였고, 투자도 0.9% 성장하였다. 다만 2006년 상반기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수출부문은 0%로 정체되었다.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도 증가하였는데, 2005년 12월 8.5%에 달했던 EU의 실업률도 2006년 12월에는 7.6%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기회복이 2006년 상반기의 고유가와 맞물려 물가불안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2006년 1/4분기 2.3%, 2/4분기 2.5%에 달했던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9월 이후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12월에는 1.9%를 기록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U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EU 경제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로 우선 유럽중앙은행의 이자율 정책이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모두 여섯 번 상향 조정하여, 2003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2%로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하였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농작물 가격의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유럽중앙은행의 기준치인 2%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EU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정부 재정적자가 2003년 이래 GDP의 3%를 3년 연속 초과하며 EU의 안정·성장협약(SGP) 재정준칙을 위반해왔다. 2006년에 들어와 프랑스와 독일은 적자수준이 개선되었으나,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그리스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높은 수준이다. 세 번째는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이다. 연금·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정책이 복지혜택 축소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와 소비지출·민간소비지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번째로 EU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이 합의됨으로써 향후 EU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EU 및 유로존의 확대도 2007년 EU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2007년에도 경기호황 지속될 듯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여 2007년에도 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구매관리자지수는 2006년 6월 최고치 이후 다소 후퇴했지만 2007년 1월에도 여전히 견실한 모습이며, 해외주문도 유로화 강세 및 세계경기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 10월 이후 다소 후퇴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예측기관별 EU 경제성장률 예측치

(단위: %)

예측기관	IMF		EU 집행위원회		Global Insight	
연 도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EU-27	-	-	2.9	2.7	2.9	2.4
유로지역	2.4	2.0	2.7	2.4	2.6	2.1
독 일	2.0	1.3	2.7	1.8	2.7	2.0
프 랑 스	2.4	2.3	1.9	2.2	2.0	1.8
이탈리아	1.5	1.3	1.9	2.0	1.7	1.4
네덜란드	2.9	2.9	2.9	2.8	2.9	2.2
스 페 인	3.4	3.0	3.8	3.7	3.7	3.5
영 국	2.7	2.7	2.7	2.7	2.7	2.6

자료: IMF(2006. 9), World Economic Outlook; European Commission(2007. 2), Interim Forecast; Global Insight(2007. 2), Online Analysis.

02

EU 헌법 비준문제로 양분된 유럽

EU 헌법 문제, 2007년의 핵심과제로 떠올라

2007년 1월 17일에 있었던 EU 의회 연설에서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EU 헌법 부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하면서, EU는 다시 한 번 EU 헌법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였다. 2005년 5월 프랑스, 6월 네덜란드에서 각각 EU 헌법이 부결된 이후 지금까지 EU는 성찰의 시간(pause for reflection)을 갖고 있었다.

2004년 9월 로마 EU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EU 헌법 초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EU 헌법은 27개국(당시에는 25개국) 전원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될 수 있다. EU 헌법의 핵심내용으로는 2년 6개월 임기의 EU 대통령직 신설, 외무장관직 신설, 인권규정 명시, 의사결정구조 단순화, 외교·국방·사회안전·조세 이외의 사법·교육·경제정책에 대한 국가별 비준절차 생략 등이 있다.

표. 각국의 EU 헌법 처리 현황

비준국가(18)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부결국가(2)	프랑스, 네덜란드
보류국가(7)	영국, 체코,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EU 헌법 부활에 관한 각국 논의

EU 헌법과 관련하여 유럽은 크게 EU 헌법을 찬성하는 국가와 이에 반대하는 국가로 양분되어 있다. 찬성하는 국가들이 중심이 된 20개국(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비준하지 않은 국가이면서 이 모임에 참석)은 ‘EU 헌법의 친구들’이라는 이름하에 2007년 1월 2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 EU 헌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이 모임이 불필요하게 EU 헌법 회의론자들을 자극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은 EU 헌법이 제도 및 투표방식 등에 너무 많은 변화를 담고 있어 국민투표

를 통한 비준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한 외교관계자는 현재도 EU는 에너지나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있어 공동의 정책을 내놓고 있을 만큼 충분히 통합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EU 헌법의 필요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영국 인사들 중 블레어 총리가 EU 헌법에 대해 메르켈 총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을 뿐,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EU 헌법의 비준 추진에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국민투표가 아닌 의회 승인을 통해 EU 헌법이 비준되기를 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집권당 대선후보인 사르코지가 2006년 8월 핵심조항만을 간추린 일명 ‘미니헌법’을 제안하며 국민투표가 아닌 의회에서 EU 헌법이 비준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니헌법은 EU 헌법 초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사르코지가 EU 헌법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미니헌법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사회당의 루아얄은 EU 헌법에 노동자의 권리, 인플레이션 및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변화 등 더 많은 사회적 내용(social content)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다. 루아얄은 대통령이 될 경우 EU 헌법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했다.

네덜란드는 최근의 EU 헌법과 관련하여 2005년과는 달리 긍정적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역시 어느 정도 증가했으나, 2005년 부결 원인에 대한 국민들의 컨센서스 부재와 2005년 부결 당시의 정권이 2006년 말 재집권에 성공하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 정부는 연정을 통한 새로운 내각구성 발표를 앞두고 EU 헌법 비준방식-국민투표와 의회 승인-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면에는 EU 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가 깔려있다. 특히 네덜란드 국민들은 EU의 초국가성과 관련한 헌법(constitution), EU 국기(flag), EU 국가(anthem) 등의 표현에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논란은 계속될 듯

메르켈 총리는 2009년 5월 의회선거 및 11월 집행위원 구성 전까지 EU 헌법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준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상반기 중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는 EU 헌법 부활 논의를 EU 탄생 50주년 기념과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 EU 의장국이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인 시점에서 EU 헌법을 추진하기 위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메르켈 총리의 판단이 깔려 있다. 우선은 3월 25일 50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 EU의 성공을 강조하며 EU 헌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회원국 국민들에게 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EU 헌법의 향후 전개에 있어 EU 헌법을 제안했던 프랑스의 대선과 영국의 총리 교체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03

신 리스본 전략 이행과 성과

리스본 전략의 수정

유럽국가 정상들은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유럽경제를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있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킨다는 목표하에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채택하였다. 2004년 3월 EU 정상회의에서는 리스본 전략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키로 하고, Wim Kok 전 네덜란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위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전략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그 결과 같은해 11월 Kok 위원회는 과다한 정책과제, 이행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전략 이행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렸고, 이에 2005년 EU는 Kok 보고서를 바탕으로 리스본 전략의 목표를 재조정하고 이행계획도 보다 구체화한 ‘신 리스본 전략(New Lisbon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신 리스본 전략은 경제성장, 사회결속, 지속가능 환경 등 기존 리스본 전략의 3대 목표 중에서 ‘성장과 고용’ 위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회원국과 공동체간의 명확한 행동계획 및 책임을 구분토록 하고 있다. 현재 매년 회원국들은 리스본 전략 이행과정을 보고하고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 리스본 전략은 2007년에도 EU 집행위가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 중 하나에 해당된다.

표. 신 리스본 전략의 목표와 주요 행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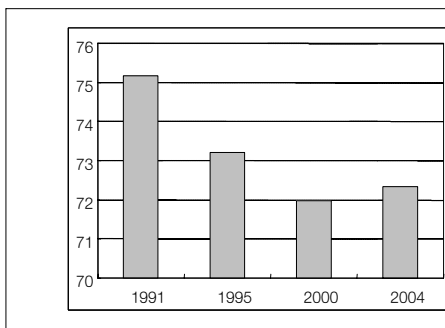
핵심 목표	주요 행동계획
1. 투자 및 고용 지역으로서의 유럽의 매력 증대	- 단일시장 완성 및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 확보 - 행정비용부담 완화 - 인프라 확장 및 개선
2. 성장을 위한 지식과 혁신	- R&D 투자의 GDP 3% 목표 달성 - 에너지 효율 및 낮은 배기가스 배출 등 환경혁신 장려 - 민관협력을 통한 유럽의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
3. 양질의 고용창출 증대	- 청년실업 축소 및 사회보장제도의 현대화 → 취업을 증대 -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 인적자본 투자 증대

신 리스본 전략과 유럽경제개혁

높은 세금부담, 포괄적이고 관대한 사회보험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럽식 사회경제 모델은 그 운영과정에서 비효율이 지적되어왔고 특히 세계화의 추세 속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럽경제가 밀리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1980년대 들어 EU 경제는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노동생산성 등이 미국을 밑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그림 참고). 이렇듯 유럽경제가 변하지 않으면 2등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리스본 전략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들에게 개혁 추진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2006년 신 리스본 전략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6년부터 유럽경제는 독일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 그림. EU15의 1인당 GDP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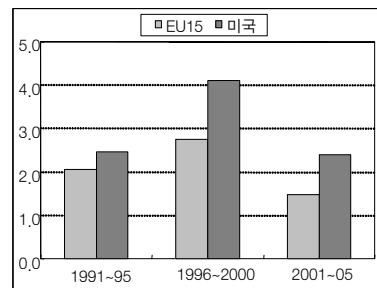
(미국=100)



주: 미국 달러, 경상가격, PPP 기준
자료: OECD, OECD Factbook 2006

■ 그림. EU15 및 미국의 경제성장률 ■

(단위: %)



주: 5년간 연평균 기준
자료: Global Insight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가 관건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개혁정책을 강조하는 인물로, 성장과 고용 중심의 신 리스본 전략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각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행에 달려 있는 만큼, 현재 사회보장제도 등 개혁 추진과정에서 이미 진통을 겪고 있는 개별국들이 지속적으로 이 전략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04

주요국 대선 및 정치 현황과 전망

프랑스 대선 임박

오는 4월 1일 치러질 프랑스의 대선이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와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Ségolène Royal)의 2파전 양상을 보이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둘은 모두 좌우 진영의 아웃사이더로 출발하여 대선후보가 된 점과, 기존 정치의 개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주요 정책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집행에 있어서 단호함과 저돌적인 언행으로 유명한 우익성향의 사르코지는 이민 2세대로 예산장관 및 내무장관을 역임하는 등 행정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우파인사답게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침체되어 있는 프랑스를 개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미국식 경제정책 도입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강화를 제안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의 35시간에서 더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프랑스경제의 침체원인 중의 하나인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며, 공공주택 처분, 공무원 축소, 감세정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성장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그의 정책을 두고 프랑스판 레이저노믹스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르코지의 이런 정책적 특성은 집권당과 좌파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시라크 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라크의 측근들은 여전히 사르코지를 견제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첫 여성대통령에 도전하는 루아얄은 환경장관과 가족장관을 지내면서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남성 위주의 정치문화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초반 루아얄은 사르코지보다 앞선 지지율을 보였다. 그녀는 사회당이 제시한 주당 35시간 근로제, 전력·에너지부문의 국유화, 최저임금 인상, 환경정책 강화, 무주택자와 실업자 등의 주거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새 정책이 부족하고, 캐나다 퀘벡 독립 문제, 중동·중국 방문에서의 잇단 실언 및 경험 부족으로 사회당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표. 기관별 2차 결선투표시 사르코지(S)와 루아얌(R)의 지지도

(단위: %)

시 기	TNS Sofre	CSA	IFOP	IPSOS
2006. 9		R 52 / S 48		S 51 / R 48
2006. 10	R 51 / S 49		S 53 / R 47	R 50 / S 50
2006. 11		R 53 / S 47	S 51 / R 49	
2006. 12		R 51 / S 49		
2007. 1	S 52 / R 48	R 52 / S 48	S 52 / R 48	S 54 / R 46
2007. 2	S 53 / R 47			S 53 / R 47

자료: TNS Sofre; CSA; IFOP; IPSOS.

사임 압력 속의 블레어 영국 총리

2007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블레어 총리는 WTO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과 함께 북아일랜드의 평화협상이 자신의 사임 이전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원한다고 밝힘으로써, 그가 5월 중 사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7월쯤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5월에 치러질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도 블레어 총리가 노동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블레어 총리의 사임 이후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현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은 정책노선에서 블레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유로화 가입 반대와 미국경제의 활력을 중시하는 친미적 성향 등에서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블레어 총리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영국의 국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EU 헌법과 관련하여 국민투표보다 의회결정을 선호하는 브라운은 대외문제보다는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 당과의 경쟁에 더 많은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해진 독일의 리더십

프랑스 대선의 경우 오는 4월 1일 1차 투표, 5월 6일 결선투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영국의 총리 교체는 경찰조사에 의한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프랑스 대선과 영국의 총리 교체가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 국가의 국내정치적 이슈로 인해 2007년 EU의 산적한 과제 해결에서 독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독일은 올해 EU의 순회 의장국일 뿐만 아니라, 선진 8개국(G8) 회의 의장국이기도 하다.

05

유연안전성 정책 강화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1980년대 이후 세계화로 인한 국제경쟁의 심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증대되어왔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는 이러한 상반되는 두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 전략이 추진되었다. EU는 1997년에 채택된 ‘유럽 고용 전략(Europe Employment Strategy: EES)’에서 유연안전성을 주요한 고용전략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2006년 10월 『2006 유럽의 고용(Employment in Europe 2006)』 보고서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평생교육,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유연안전성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6년 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집행위는 올해 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보호 강화를 결합시킨 유망한 정책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연안전성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원칙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위는 EU 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유럽사회 전반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럽시민들에 대해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 평등보장 등에 관한 EU의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EU의 사회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계화에 대한 유럽적 대응방식

EU는 그동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북구형 국가의 유연안전성 접근법이 EU 집행위의 보고서에서도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을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매우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보다 더 우수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북구형 모델과 비슷한 수

준이거나 그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영미식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가 매우 높지만 안정성면에서는 가장 낮다.

즉 노동의 유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이로 인한 고용불안 및 실업에 따른 빈곤문제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다 관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연안전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 강조하는 미국식 경제와는 다른 유럽 특유의 사회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표. 경제모델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및 경제적 성과 비교

국 가	유연성 ¹	안정성 ²	경제적 성과	
			경제성장률 ³	실업률 ³
덴 마 크	1.4	27.6	1.9	5.2
핀 란 드	2.0	22.5	2.8	8.7
독 일	2.2	27.6	0.6	9.3
프 랑 스	3.0	28.7	1.5	9.5
영 국	0.7	20.1	2.6	4.8
미 국	0.2	16.2	3.2	5.5

주: 1. OECD의 2003년 기준 고용보호규제 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icators: EPL Indicators), EPL 지수는 고용보호규제의 정도에 따라 0~6까지 분류됨. 즉 '0'이 고용보호규제의 정도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고, '6'은 유연성이 가장 낮음.

2. 2003년 기준 GDP 대비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지출 비중(%)

3. 2003~05년의 3년간 연평균 수치(%)

자료: OECD(2004), OECD Employment Outlook; OECD(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EU 통계청(Eurostat).

절반의 성공: 독일의 리더십이 관건

유연안정성 접근법은 북구형 국가들의 경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2006년 4월 프랑스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도입이 좌절되기도 하는 등 대륙형 국가들은 아직 이 정책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학계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경제개혁정책 Agenda 2010에서도 점진적인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독일은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사회보장과 연결시키는 유연안정성 모델의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 정책의 추진이 보다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06

이민정책의 재정립

불법이민은 유럽의 골칫거리

EU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이민¹⁾이 유럽사회의 치안과 정체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인 Hague Program을 2004년 10월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EU 공동의 이민·불법체류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망명 절차를 공동 관리함으로써 EU 회원국간 상이한 정책을 수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비회원국으로부터 양질의 노동력을 유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민정책을 주요 경제정책의 하나로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제시되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11월, 노동시장 애로요인 해소에는 기여하되 불법이민은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해 EU 정상회의에서도 포괄적인 유럽 이민정책을 위해 제3국과의 국제적 협력과 대화 강화, 불법이민 척결 협력 및 EU의 대외국경 관리능력 제고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7년 EU 집행위는 특히 고숙련 이민자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green card)제도와 유사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의 법적 신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처벌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사회적 덤핑 우려 확산

EU의 이민정책은 고령사회의 가속화에 따른 경제적 이민자 유입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EU 신규가입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존 EU 회원국으로의 이동과 이에 따른 회원국간 갈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중·동구로의 EU 확대로 신규회원국의 값싼 노동력이 기존 회원국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기존 회원국 근로자들의 해고,

1) 2005년 한 해 동안 3,000~4,000명의 아프리카인이 해안을 통하여 유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삭감 등 근로여건 악화라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소위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2005년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부결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만큼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EU는 기존 15개 회원국으로 하여금 신규가입국 근로자의 자국으로의 이동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기존 15개 회원국들이 기존 국내법 또는 양자조약에 의한 ‘노동허가증’ 발급제도를 통해 신규 회원국 국민들의 자국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12개 EU 기존 회원국들은 [표]와 같이 신규 EU 회원국 근로자의 자국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조치는 최장 2010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는 신규가입국 국민이 자동적으로 기존 15개 회원국내 취업에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 표. 신규 EU 가입국 인력이동에 대한 기존 EU 회원국들의 정책 ■

국 가	정 책
독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예외적으로만 취업을 허가: 자국민 또는 15개 기존 EU 회원국 국민으로 총당할 수 없는 직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노동허가증을 발급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신규 EU 회원국에 대한 노동허가 quota를 설정하여 취업을 허가
영국, 아일랜드	신규 EU 회원국 국민의 자국내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규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취업제한은 없으나 실적이 될 경우 거주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음.
스웨덴	근로자 이동을 전혀 제한하지 않음.

EU 통합과 확대에 걸림돌 될 가능성 커

현재 EU는 이민정책과 신규가입국 근로자들의 취업이민 정책을 놓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및 신규가입국들과 이를 반대하는 프랑스, 독일 등 나머지 회원국들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단 잠정조치가 끝나는 시기가 2010년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민감한 부문까지 이민정책이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안을 둘러싼 EU 회원국내 갈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EU의 통합 및 확대와 관련한 여론 형성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07

EU 가입 이후 신규회원국의 경제변화 추이

신규회원국, EU 가입 3년

2004년 5월 중·동구 8개국과 지중해 연안 2개국 등 10개국이 EU에 가입하였는바, 이들 신규회원국은 올해 들어 EU 가입 만 3년을 맞이하게 된다.²⁾ EU 신규회원국들은 EU 가입을 계기로 자국경제가 기존 EU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수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EU 가입을 전후로 많은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규회원국들은 EU 가입으로 거대 EU 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비즈니스위험이 감소함은 물론 대규모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율성 제고 등의 편익을 기대하고 있다. 신규회원국들이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FDI 유입 급증과 교역 증대 등과 같은 편익들은 이미 실현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WIIW는 2004년 EU 확대를 앞두고 폴란드, 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중부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득수준이 EU15의 평균에 수렴하는 데 어느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하였다.³⁾ 이에 따르면 상기 5개국이 매년 3%의 1인당 GDP 증가를 기록할 경우, EU15의 75% 수준까지는 50년, 100% 수준까지는 무려 80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연간 1인당 GDP 성장률이 4%와 5%라는 보다 낙관적인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EU15의 75% 수준까지 경제가 수렴하는 데에는 각각 27년과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EU 가입 이후 서비스산업 중심 고성장 시현

신규회원국 경제가 EU 가입 이후 상기와 같은 전망과 비슷한 속도로 EU15 수준에 수

2) 상기 신규회원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중·동구 8개국과 키프로스, 몰타 등 지중해 연안 2개국을 포함하여 총 10개국이다.

3) WIIW(2003. 4), "EU membership and income level convergence: the Experience of the Cohesion Countries," *Monthly report*.

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규회원국들이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2000년대 초 저성장을 경험하였던 폴란드와 체코는 EU 가입 이후 4~6%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헝가리도 3~5%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트 3국은 최근 10% 내외의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34.5%에 머물렀던 폴란드의 서비스부문 생산비중은 최근 67%에 이르고 있으며, 헝가리와 체코도 63%에서 69%, 60.8%에서 63%로 서비스부문 생산비중이 확대되었다.

EU 가입 이후 신규회원국들의 무역구조에 커다란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급격한 교역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FDI 유입 증가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높은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미 심화된 EU 역내교역 비중은 최근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며, 체코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무역수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영화에 의한 FDI 유입은 잠시 주춤하는 가운데 신규투자, 재투자를 중심으로 FDI 유입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고도성장과 경쟁력 향상 지속 전망

속도나 국별 상황에 따른 다소의 이견은 있으나, 신규회원국 경제가 기존회원국 수준으로 점차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신규회원국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 등도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수렴해갈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회원국들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고도성장과 경쟁력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로 EU의 정식회원국이 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 후발 신규회원국의 경제도 향후 상기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이후 경제변화 추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표. 중부유럽 5개국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2000~08)

(단위: 실질 GDP 증가율, %)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폴 란 드	4.2	1.1	1.4	3.8	5.3	3.5	5.6	5.9	5.3
헝 가 리	6.0	4.3	3.8	3.4	5.2	4.1	3.9	2.1	2.5
체 코	3.6	2.5	1.9	3.6	4.2	6.1	6.0	5.0	4.8
슬로바키아	0.7	3.2	4.1	4.2	5.4	6.0	7.5	7.1	6.0
슬로베니아	4.1	2.7	3.5	2.7	4.4	4.0	5.1	4.2	3.8

자료: Global Insight(2007. 1), Online Service(<http://www.globalinsight.com>).

08

유럽경제 · 통화동맹(EMU)의 확대 추이 및 전망

슬로베니아, EMU 가입

2007년 1월 1일부로 슬로베니아가 유럽경제 · 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에 가입함으로써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euro-zone)은 13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10개 신규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가 처음으로 유로화를 공식통화로 도입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미 지난 2006년 5월 16일 슬로베니아의 유로존 가입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슬로베니아는 1991년 구 유고연방으로부터 처음으로 독립을 선언, 연방 해체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중 · 동구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인구 약 190만 명의 소국인 슬로베니아는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1만 7,284달러에 달하는 부국이며, 중 · 동구지역에서 전통적인 상공업 중심지인 류블랴나(Ljubljana)가 수도이다. 슬로베니아는 발칸반도와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인 코퍼(Koper)항을 보유하고 있어 무역 및 운송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알프스 남단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양호한 자연환경 보존 등으로 관광산업의 개발 잠재력 또한 막대하다.

1999년 EMU 출범과 확대 과정

EU 15개국 가운데 11개국은 1999년 1월 1일부로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사용하고 ECB를 통해 단일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제 · 통화동맹(EMU)을 결성, 유로존을 출범시켰다. EU 15개국 가운데 영국, 덴마크, 스웨덴이 EMU 가입을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그리스는 수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였다.

2001년 1월 그리스는 만 2년 동안 수렴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EMU의 1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스는 수렴조건 가운데 가장 괴리가 심했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재정, 간접세 감면, 임금 억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기금리의 하락

도 자연스럽게 유도되었다. 또한 그리스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삭감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탈세를 줄여 재정수입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ERM II 체제하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그리스의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조건 충족 현황

(단위: %)

구 분	1998년 3월		충족 여부	2000년 3월		충족 여부
	기준치	그리스 실적	X	기준치	그리스 실적	O
물가	2.7	5.2	X	2.4	2.0	O
금리	7.8	9.8	X	7.2	6.4	O
재정	재정수지	-3.0	X	-3.0	-1.6	△
	정부부채	60.0	X	60.0	104.4	
환율	ERM 가입	ERM 미가입	X	ERM 가입	ERM 가입	O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0), Convergence Report 2000.

향후 EMU 확대 전망

기존 EU15 가운데 아직 EMU에 가입하지 않은 3개국과 신규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MU 확대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발트 3국의 가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04년 6월 신규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처음으로 유로존 가입 전단계인 ERM II에 가입한 바 있으며, 그 후 라트비아, 키프로스, 몰타, 슬로바키아 등이 ERM II에 가입하였다. 특히 슬로베니아와 함께 유로존 가입을 신청한 리투아니아는 물가부문에서 수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입이 거부되었지만, 2008년 EMU 가입이 유력하다.

표. 리투아니아와 슬로베니아의 경제수렴조건 충족 현황

구 분	물가 (HICP ¹⁾)	정부재정		환율 (ERM2 가입)	장기이자율 (%)
		재정적자 (GDP 대비 %)	정부부채 (GDP 대비 %)		
수렴기준	2.6% 이내 (2005. 4~ 2006. 3)	3% 이내 (2005년)	60% 이내 (2005년)	만 2년 이상 (2006. 5 현재)	5.9% 이내 (2006. 5 현재)
리투아니아	2.7	-0.5	18.7	2004. 6 가입	3.7
슬로베니아	2.3	-1.8	29.1	2004. 6 가입	3.8

주: 1) 통합소비자물가지수(HICP)의 연간 변화율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2006), Convergence Report May 2006.

09

EU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한 · EU FTA

EU의 새 통상정책안, Global Europe

EU 집행위원회의 피터 만델슨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2006년 12월 6일 기존의 통상방어수단이 개방의 효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즉 글로벌 경제에 맞춰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등의 무역보호수단이 불공정한(unfair) 교역을 차단함과 동시에 개방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정책은 수출업자가 아닌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무역보호수단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이 없는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역내 기업들에게 산업피해구제조치로서 보호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관세부과도 관련기업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수준으로 완화시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과 관련하여 EU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은 EU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올바른 역내정책과 해외시장 개방을 강조했다. 역내정책은 경쟁적인 단일시장을 통해 EU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EU는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시장개방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내정책은 해외시장의 개방 및 해외시장에서의 올바른 경쟁을 위한 것으로, 비관세장벽의 제거,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조 등과 관련이 있다.

신통상정책에 대한 저항과 갈등 고조

EU 통상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Global Europe은 32개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EU 기관, 기업, 연구소, 민간단체 등에 2007년 3월 31일까지 질의응답식의 자문을 구하기로 예

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역내 보호주의자들이 개방적 통상정책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안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 통상정책은 무역협상에서 노동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도록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FTA를 추진하는 협상파트너 국가들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예전에도 WTO 회의에서 무역과 환경·노동기준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

신통상정책과 한·EU FTA

새 통상정책에서 만델스 집행위원은 WTO 정책, FTA 정책, 시장접근전략 등도 발표했다. 그는 양자적인 FTA와 다자적인 WTO의 양립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WTO DDA 협상의 재개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 EU는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FTA 우선 협상국으로 EU는 ASEAN, 한국, MERCOSUR를 지목하고, 다음으로 인도, 러시아, GCC를 언급했다.⁴⁾ FTA 협상국 선정 기준에 관해 EU는 시장잠재성(경제규모와 성장률), EU의 수출품에 대한 무역장벽의 수준, FTA 협상 대상국의 EU와의 교섭의지 및 EU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EU 시장에서의 접근 등을 제시했다. EU는 FTA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한 규제,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EU의 주요 교역파트너의 시장잠재성과 주요 경제지표

국가/지역	시장잠재성 2005~25년 (십억 유로)	GDP 2005년 (십억 유로)	연평균성장률 2005~25년 (%)	EU와의 교역액 및 비중 2005년 (십억 유로, %)	
미국	449	10,144	3.2	412.7	18.5
중국	204	1,573	6.6	209.4	9.4
일본	74	3,920	1.6	116.4	5.2
인도	58	607	5.5	40.0	1.8
ASEAN	57	714	4.9	115.1	5.2
한국	45	598	4.7	53.5	2.4
MERCOSUR	35	677	3.6	51.0	2.3
캐나다	28	849	2.6	40.8	1.8
GCC	27	412	4.3	87.6	3.9
러시아	21	526	3.0	163.0	7.3

주: 시장잠재성은 경제규모(economic size)×성장(growth)을 의미함

자료: EU Trade Commission(2006),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4) EU는 EFTA, 이스라엘, 레바논,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터키, 칠레, 남아공, 이집트 등과 FTA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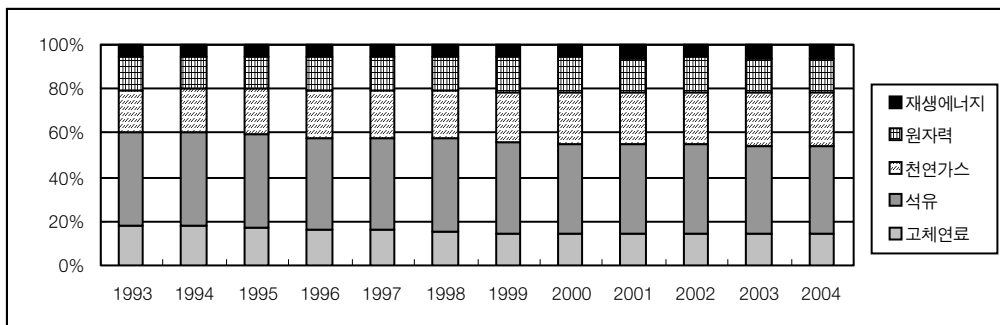
10

EU의 새 에너지정책과 전망

해외 에너지의존도 높은 EU의 새 에너지정책

대부분의 에너지를 역외에 의존하고 있는 EU는 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 주권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EU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요 감소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공급 증가에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1월 10일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경쟁 및 기술혁신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정책이 담긴 “Strategic European Energy Review(SEER)”의 유럽 에너지정책(An Energy Policy for Europe)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EU 집행위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50%에서 2030년 65%로, 또한 가스 수입의존도는 57%에서 84%로, 석유 수입의존도는 82%에서 93%로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림. EU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



자료: Eurostat(2006, 9)

새 에너지정책의 방향: 소비효율성 제고, 경쟁 강화, 청정에너지 개발

새 에너지정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조달 다원화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기존 7%에서 20%까지 끌어올린

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평균 23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면 2010년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의 바이오연료 사용 비율도 최소 1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역내 에너지 소비효율을 20%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반가정, 산업제품, 빌딩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절약 조치안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자유화를 지향하여 거대 에너지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가스·전력 생산과 공급을 분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스·전력 생산에서 가스관·송전망에 이르는 에너지공급 독점이 새로운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에너지관련 감독기관의 독립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 산업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저탄소(low carbon) 에너지원 개발에의 투자를 통한 온실효과의 방지를 주장한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토의정서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해 20%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착 및 저장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전력생산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자력에너지의 기술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더 구체화된 공동 에너지정책 나올 듯

2007년 3월 EU 정상회의에서 새 에너지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며, 에너지시장 개방과 온실가스 일방 감축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적 상황이 다른 27개 회원국에게 단일 에너지정책안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폴란드의 경우는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화석연료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독일은 에너지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에는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분리를 담고 있는 법안수립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철강, 항공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비용 증대로 이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에너지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EU에 있어서 에너지문제는 회원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회원국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러시아/CIS



KIEP

01

국제유가 변동과 러시아경제

지나친 에너지 의존의 러시아경제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부총리는 2007년 1월 하순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포럼에서 2005년 러시아경제의 GDP 규모가 세계 10위에 랭크된 이래, 2006년 그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다고 밝히면서, 조만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에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러시아는 2000~05년 연평균 6.8%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2006년에도 6.9%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무역증대와 폭발적인 소비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때 배럴당 70달러까지 치솟았던 우랄(Urals) 유가가 하락하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2006년 상반기 러시아의 총수출액에서 석유가스의 비중이 68%를 차지하고, 정부예산의 60%가 석유수출 수입으로 충당될 정도로 러시아경제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유가폭락은 없을 듯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기에 대폭적인 유가하락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유가하락 현상은 중동정세가 안정되면서 배럴당 약 15달러로 평가되는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에 불과하고, OPEC이 추가감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와 중국의 석유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폭의 국제유가 하락은 루블화 강세 및 인플레이션 촉진 요인을 완화하여 침체된 제조업을 회복시키고 증권시장의 자본을 비에너지부문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산업다각화를 촉진하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3년간 연평균 GDP 상승률 6% 예상

최근 러시아은행과 경제발전통상부는 당분간 국제유가가 경제발전의 토대라는 전제하에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우랄 유가가 적절한 수준에서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한 향후 3년간 러시아 경제발전 전망을 살펴보면, 연간 6%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러시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각화와 첨단기술기업의 설립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러시아 경제발전 전망

(단위: %)

항목	2007년	2008년	2009년
우랄 유가(\$/bd)	61	54	48
GDP 성장률	6.0	5.8	5.9
소비자물가 상승률	6.5~8.0	4.5~6.0	4.0~5.5
공업생산 증가율	4.2	4.5	4.7
고정투자 증가율	10.4	9.7	9.8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10.2	8.9	8.2
실질임금 상승률	11.0	8.6	7.4
소매거래 증가율	10.5	9.5	8.5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및 경제발전통상부

2007년 러시아 정부예산은 배럴당 61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재정수지 흑자가 예상 GDP의 4%로 되어 있고, 만약의 경우 2007년 1월 1일 현재 891억 달러인 석유안정화기금으로 재정지출 보전이 가능할 것이다. 2007년에도 내수와 서비스 부문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 붐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당분간 국제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경제의 유가 의존도가 점차 조금씩 줄어들면서, 석유가스 산업과 더불어 식료품 및 자동차산업이 러시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러시아경제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02

다가오는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12월 총선-러시아 최대의 관심사

2007년 12월에 예정된 러시아의 국가두마(하원)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총선에서는 집권당이자 푸틴을 지지하는 통합러시아당이 압승한 반면, 공산당을 비롯한 야당세가 크게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통합러시아당은 37.57%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친 223석으로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였고, 1999년 총선에서 114석을 차지하면서 기염을 토했던 공산당은 13.61% 득표에 거쳐 총 52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자유개혁 진영에 속했던 야블로코(Yabloko)와 우파연합이 5%인 비례대표 하한선도 넘지 못한 이변을 낳아, 각각 4석, 3석을 차지하여 거의 몰락하였다.

표. 2003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결과

정당 및 선거블록 명	정당 비례대표제		지역선거구	총계	2005. 4. 25 기준
	%	인원			
통합러시아	37.57	120	103	223	304(67.56%)
러시아연방공산당	12.61	40	12	52	47(10.44%)
자유민주당	11.45	36		36	35(7.78%)
조국-인민애국연합	9.02	29	8	37	40(8.89%)
야블로코	4.30		4	4	
우파연합	3.79		3	3	
농업당	3.64		2	2	
연금수령자·사회정의당	3.09				
러시아부흥·생활당	1.88		3	3	
러시아인민당	1.18		17	17	
무소속			67	67	21(4.67%)
기타 군소정당			3		
모두 다 반대*	4.70		(3)	(3)	
계		225	222(3)	447(3)	447

주: 3개 지역구는 무효 처리

자료: 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동주(2005), 「푸틴정부하 러시아 권력구조 개편과 정당정치」,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p. 126에서 재인용.

선거법 개정으로 군소정당은 위기 상태

이번 12월 총선은 푸틴 행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포스트 푸틴 정권 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방향이 수정될 수 있으며, 특히 2008년 3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선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 즉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가 폐지되어, 정당 비례대표제로만 전체 450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며, 정당 비례대표제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하한선도 기존의 유효투표율 5%에서 7%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군소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번 국가두마 선거에서는 친여당 성향의 정당과 블록이 더욱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친여정당 압승 예상

현재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승리가 예상된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인기도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친여정당인 통합러시아당, 자유민주당 등 불과 몇 개의 정당만 7%인 비례대표 하한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푸틴정부의 언론 및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있어, 이번에는 야블로코 등 자유개혁 진영이 지난 총선에 비해 의석을 조금 더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통합러시아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재 푸틴정부가 ‘강한 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추진 중인 국내외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차기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지지하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력한 차기대선 주자로는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부총리,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 블라디미르 야쿠닌 철도공사 사장,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03

러시아, WTO 연내 가입

가장 큰 걸림돌이던 미국의 WTO 가입동의 도출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동의를 2006년 11월 19일에 이끌어냄으로써, 13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금년 중에 WTO 가입을 바라보게 됐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에 코스타리카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러시아는 그루지야를 제외한 148개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그루지야는 2004년에 이미 러시아의 WTO 가입에 동의했으나, 지난해 그루지야에 있는 러시아군 장교의 스파이 혐의 사건으로 러시아와 그루지야간에 외교분쟁이 발생하여 러시아에 대한 WTO 가입동의를 철회한 바 있다.

■ WTO 체제 및 가입절차 ■

- WTO
 - WTO는 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 1월 1일 출범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감시를 통해 세계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함
 - 2006년말 기준으로 회원국 수는 149개국
- 가입절차
 - 가입신청
 - 가입신청 검토를 위한 실무협상단(working parity) 구성
 - 신청국의 무역제도 등에 관한 현황 조사
 - 신청국과 다자간 협상(WTO 회원국 모두와 협상을 마쳐야 함)
 - 신청국과 양자간 협상
 - 실무협상단 협상 보고서 작성 및 심사
 - 가입의정서 채택
 - 가입승인

자료: WTO Homepage(www.wto.org)

러시아의 국제경제 편입

러시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소련방 붕괴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 CIS)에 속한 국가들과 연대하여 자급자족적 경제활동을 형성하여 왔었고, 서방국가 등 선진국가와의 통상협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동유럽의 탈소련화와 구소련국가들간의 경제협력 와해로 국제경제에 편입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1993년 러시아는 GATT 가입(WTO 전신)을 신청하였고 회원국이 되기 위해 13년간 오랜 준비를 해온 것이다.

중국 이후 첫 대국의 WTO 가입

전체 수출의 60% 이상이 에너지자원 수출로 구성된 러시아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에는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함께 소득이 급증하고 있는 1억 4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지닌 러시아의 WTO 가입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래 첫 대국의 가입으로서 세계경제의 시장확대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자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러시아의 WTO 가입과 동시에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등 강대국들의 대(對)러시아 무역 및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러시아는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WTO가 러시아에 7년간의 가입요구조건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환경이 단기에 급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연내 WTO 가입과 이후의 행보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그루지야의 동의를 다시 받아내는 것이다. 러시아는 1월 말부터 그루지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어 조만간 WTO 회원국들의 가입동의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러시아의 WTO 가입은 다자간 협상과 일반이사회 승인절차 등을 거쳐 연내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FTA 협정 체결 의지를 지난해 가을에 발표한 후 준비하고 있다. EU는 안정된 에너지 수급망을 확보하고 활발해지고 있는 러시아의 국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WTO 가입 이후 유럽과의 FTA 협정 체결을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연내에 EU와 러시아간의 FTA 체결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04

러시아정부, 환율 절상과 인플레이션 해결 노력

실질환율 절상과 인플레이션 압력의 가속화

최근 에너지 수출 중심 경제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환율 절상과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가 러시아 거시경제의 두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절하되었던 루블화의 실질환율은 최근 오일머니의 대량 유입으로 2005년 8.1%, 2006년 전반기 10% 등 높은 절상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의 내수탄력성이 상승하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실질소득이 매년 10% 이상 상승하면서 내수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은 전체 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05년 12.7%, 2006년 9~10%를 기록하며 1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원인은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높아진 임금이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산업 전반의 임금과 실질소득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며, 오일머니가 대량 유입되고 경상수지가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긴축재정과 산업다각화가 관건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인플레이션 해소를 통화정책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인플레이션과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는 환율의 절상을 적정 수준 용인하는 이중 표적화정책(Dual Targeting)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안정 효과는 미약한 반면, 오히려 실질환율의 절상을 자극하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러시아 루블화 환율의 가격전가효과(Pass-through)가 낮기 때문이다. CBR은 명목실효환율을 10% 절상하여 얻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하락효과가 1~2%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에 의한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긴축재정과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러시아의 2005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7.7%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에너지부문 재정수입을 제외하면 오히려 -1.5% 적자였다. 이에 석유수출소득의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적립(2006년 말 현재 890억 달러)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안정화기금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는 대신, IMF 채무의 일부 및 파리클럽 채무의 전액을 상환하였고, 산업다각화 지원 및 해외 유망자산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IT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산업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IT 산업의 GDP 비중을 2005년 1.5%에서 2010년 5%로 늘리기 위해 2010년까지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해 신경제특구(SEZ)를 지정하고, 투자기업들에게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05년 8월에 발표된 신경제특구는 현재 기술발전특구와 산업생산특구로 총 6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2007년 초 관광휴양특구로 몇 개의 도시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표. 러시아 신경제특구 지정 현황

구분	도시	지역	육성산업	지정시기
기술발전특구	젤레노그라드	모스크바	극소 전자공학, 전자제품	2005년 8월
	두브나	모스크바주	핵물리학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IT 기술 및 산업	
산업생산특구	토스크	토스크주	신소재 개발	2005년 8월
	리페츠크	리페츠크주	가전 및 가구 생산	
	엘라부가	타타르스탄 공화국	항공, 자동차 부품, 화학	
관광휴양특구	2~3개 도시 선정 예정		관광, 레저	2007년 예정

자료: 러시아 경제발전통상상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총선 및 대선 전후 선심성 사업이 문제

최근 러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러시아정부가 높은 경제성장의 이면에 자리한 거시경제의 불안요소를 얼마나 안정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 기조와 산업다각화 노력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 예정된 러시아 하원 선거와 2008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선심성 사업은 정부의 지출을 급증시켜 긴축재정 기조의 연속성에 타격을 주며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9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안정화기금에 대한 지출이 논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2007년 러시아정부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는 긴축재정과 산업다각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5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강화와 국영기업의 에너지자산 독점

가즈프롬 중심의 에너지질서 재편

현재 러시아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주요 에너지자산에 대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자국 국영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자원민족주의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1990년대 초반에 체결된 생산물분배조약(PSA)으로 인해 개발 및 소유권이 해외 석유 메이저에 귀속되어 있는 개발자산에 러시아 국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 석유 메이저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PSA가 불평등조약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할린-II의 대주주인 Shell과 코빅타 가스전의 TNK-BP에 대해 개발과정에서의 환경문제를 이슈화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력을 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즈프롬(Gazprom)은 국내외 전략적 석유·가스 자산을 획득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통제를 주도하고 있다. 가즈프롬은 2006년 12월 Shell이 대주주이던 사할린-II 지분 51%를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로 인해 Shell의 지분은 55%에서 방어지분 수준인 27.5%로 감소하였다. TNK-BP는 러시아정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2007년 중반까지 코빅타 가스전의 지분 일부를 가즈프롬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표. 2006년 Fortune지 선정 'Global 500' 을 통해 본 가즈프롬

가즈프롬 경영실적			산업별 Global 500: 에너지 기업 Top 5				
순위	2006년 102위	2005년 139위	순위	기업	국적	Global 500	총수입 (백만 달러)
	2005년 실적 (백만 \$)	증가율 (전년대비, %)	1	E.ON	독일	64	66,313
총수입	50,824.4	44.8	2	Suez	프랑스	96	52,743
이윤	14,865.2	113.4	3	Gazprom	러시아	102	50,824
자산	168,807.7	-	4	RWE	독일	105	50,346
주주자본	124,374.3	-	5	Plains All Amer. Pipeline	미국	186	31,177

자료: Fortune Global 500

있다. 가즈프롬의 자회사 가즈프롬네프트는 미국 ShevronTexaco와 2007년 1월 서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이 회사의 가즈프롬네프트의 지분은 30%이나 추후 5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러시아정부는 또한 2대 에너지 국영기업인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Rosneft)에게 대륙붕 유전 개발자산 100%를 양도하고, 두 기업이 각 자산별 지분을 50%씩 분할 소유하도록 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천연가스 카르텔, 과연 현실화되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07년 2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유사한 형태의 가스 카르텔을 구축할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러시아, 이란, 알제리 3국만 카르텔에 참여하더라도 전 세계 가스의 50%가 카르텔로 묶이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푸틴 대통령은 가스 카르텔은 가격 카르텔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카르텔을 구성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스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자존심을 되찾은 러시아가 PSA로 해외 석유 메이저들에게 빼앗긴 자국의 유망 자산을 되찾고, 에너지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에너지를 무기화하여 구소련 이후 실추되었던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열망도 엿볼 수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석유·가스 수입국들에게 커다란 안보적 위협이자 경제적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해외 자주개발 석유·가스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들은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민관 합동의 대러 에너지 투자전략 수립 절실

한국은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에너지정책으로 피해를 본 주요국 중 하나이다. 코빅타 가스전 가스 공급계약은 러시아정부가 국내용으로 전환하면서 무산되었고, 2006년 한국이 참여를 타진했던 동시베리아 송유관 1단계 건설공사는 러시아 단독 자본과 기술로 건설이 결정되면서 헛수고로 끝났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강대국들과 자원확보 경쟁을 벌이다보니,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파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러시아에서의 자원확보는 러시아 정부의 자원민족주의 정책에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과의 경쟁까지 한국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러시아 국회에 계류 중인 「신(新)지하자원법」이 통과되면 러시아 핵심 에너지 자산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대러 에너지 투자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06

러시아/CIS 천연가스 공급가격 갈등

러시아, CIS로의 천연가스 공급가격 인상

러시아 천연가스 독점기업 가즈프롬이 CIS 국가로의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유럽공급가격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하면서 러시아와 CIS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의 유럽공급가격은 230~250\$/tcm이나, CIS 공급가격은 과거 구소련 공화국에 대한 특혜 성격으로 50~100\$/tcm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EU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CIS 국가들은 가격인상 조치가 자신들의 친서방정책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격인상협상이 결렬되거나 자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CIS 국가들에게 보복조치를 가하여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2006년 1월에는 우크라이나와 가격협상이 결렬되자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수출되는 천연가스의 공급을 중지했다. 이로 인해 전 유럽은 심각한 가스난을 겪었다. 2006년 11월에는 그루지야가 러시아 군 장교 4명을 간첩혐의로 체포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스가격의 2배 인상을 통보하였다. 그루지야는 이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의 WTO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2007년 2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과거 구소련국가들에게 천연가스를 원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가스 공급가격의 인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것이 외교적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의 결합

2007년 가즈프롬은 CIS 국가들과의 협상 끝에 가스 공급가를 전년대비 최대 114.1%까지 인상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CIS 국가의 가스 및 가스관 회사의 지분까지 인수함으로써 가스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CIS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러시아의 CIS 공급 가스가격 인상은 경제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CIS 국가로의 낮은 공급가는 미국, EU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

아왔으며,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내재적 보조금으로 작용하여 러시아정부 및 가스프롬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공급가 인상조치는 경제적인 원칙에 충실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치적인 논리로 확장된다. 구소련 시절 러시아와 CIS 국가들의 경제는 소련정부의 지역별·공화국별 산업특화로 인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CIS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왔다. 특히 국가 에너지의 대부분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국 수요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CIS 국가들에 있어 러시아의 가스 공급가 인상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밖에 없다.

표. 2007년 러시아와 CIS 국가간 천연가스 공급가격 협상 내용

	2006년 수입가 (\$/tcm)	2007년 수입가 (\$/tcm)	2007년 인상률 (%)	기타 조건
벨로루시	46.7	100.0	114.1	- 2011년까지 가격자유화 - 가스프롬, BelTransGaz 지분 50% 인수 - 가스관 통과료 인상
몰도바	110.0	170.0	54.5	- 가스프롬, Moldovagaz 지분 63.4% 인수
우크라이나	95.0	130.0	36.8	- RosUkrEnergo가 가스공급 중개 역할 (가스프롬이 지분 50% 소유)
그루지야	110.0	235.0	113.6	없음
아제르바이잔	110.0	235.0	113.6	없음
아르메니아	56.0	110.0	96.4	- 2009년 이후 가격자유화 - 가스프롬, ArmRosGazprom 지분 58% 인수

자료: Oxford Analytica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에 대한 대비 필요

가스 공급가 인상은 러시아로서는 국제시장가격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당한 경제적 논리이나, CIS 국가로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CIS 국가간 천연가스 공급가격 갈등은 상호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가스 카르텔 결성 움직임과 맞물려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는 CIS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국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07

중앙아시아, New Great Game 증폭

치열한 자원외교 경쟁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확보를 놓고 치열한 자원외교 경쟁을 펼쳐오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6회 방문, 중앙아시아국가 정상들의 러시아 방문 3회 유치,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견제 등 자원외교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은 체니 부통령의 2006년 5월 중앙아시아 방문,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2006년 10월 미국방문 유치, 중국과 러시아의 제휴를 깨기 위한 인도와의 협력 등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활동을 펼쳐 왔다. 중국은 2006년 7월 후진타오 주석의 중앙아시아 방문, 중앙아시아국가 정상들의 중국방문 유치, 그리고 러시아와 제휴를 통한 미국의 진출 견제 등의 자원외교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요국의 에너지자원 개발 참여 현황

중국은 카자흐스탄 석유시장의 30%를 장악하고 카자흐스탄 아타수에서 자국의 두산 쓰까지 총연장 1,000km에 달하는 송유관을 건설하여 2006년 4월부터 송유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 대형유전을 가지고 있는 ‘페트로카자흐스탄’의 인수를 예상시가의 2배가 넘는 41억 8,000억 달러를 제시하여 차지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에너지 확보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2005년에 단일 파이프라인으로는 세계 최장(1,770 km)인 BTC(바쿠-트빌리시-제이한) 송유관을 완공하여 러시아를 우회하는 안정된 에너지 공급망을 설치하는 등 자원개발뿐만 아닌 송유관 건설사업도 매우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중 석유와 우라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석유와 우즈베키스탄의 우라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있

어서 일본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세 국가를 경유하는 원유수송 루트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러시아를 경유하는 원유수급망 구축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수급망 구축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양아시아의 에너지자원 현황

중양아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특히 카스피해에 주로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세계 부존량 대비 각각 4%, 5%로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 중양아시아의 전략적 중요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또한 중양아시아는 막대한 미탐사·개발 매장지를 가지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큰 장점이 있으며, 해외개발권자 다원화 정책을 펴고 있어 주요국들의 자원개발 및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카스피해지역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

국가	석유(단위: 십억 배럴)			천연가스(1조 입방 피트)		
	확인량	추정량	총매장량	확인량	추정량	총매장량
아제르바이잔	7	32	39	30	35	65
이란	0.1	15	15.1	0	11	11
카자흐스탄	9~40	92	101~132	65	88	153
러시아	0.3	7	7.3	N/A		
투르크메니스탄	0.55~1.7	38	38.55~39.7	71	159	230
우즈베키스탄	0.3~0.59	2	2.3~2.59	66	35	101
합계	17.2~49.3	186	203.2~235.7	232	328	560

자료: U.S. Department of Energy(2006, 7)

더욱 치열해지는 자원확보 경쟁

EU, 일본, 인도가 중양아시아 에너지자원 확보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된 중양아시아 에너지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우즈베키스탄 이랄해 가스전 탐사 등 기존합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라늄 500톤 확보와 중양아시아 산업다각화 관련산업 진출 계획을 세우고 금년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08

아제르바이잔, 신(新) 실크로드 물류 허브로 부상

신(新) 실크로드 물류 허브 관심 증가

에너지자원 수출로 유래없는 세계 최고의 고속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산업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일환으로 2000년부터 항공, 철도, 도로, 항만 등에서 수송인프라 정비와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U는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와 국가사업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운송부문의 발전을 도와 동방과 서방의 운송회랑을 범유럽 고속통신망(Trans-European Networks)에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철도공사는 이미 1998년에서 1999년까지 TRACECA 사업에 근거하여 1차로 철로운영 시스템을 복구·개선하였으며,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가로 200만 달러를 TRACECA로부터 지원받은 상태이다.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 TRACECA는 코카서스지역, 중앙아시아지역, 흑해지역의 국제운송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임.
- 1993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EU,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의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TRACECA 프로그램이 발표됨.
- 1996년과 1998년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각각 신규 회원국으로 참여함.
- 2000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가 공식등록을 신청하였고 이후 회원국이 됨.

자료: TRACECA(www.traceca-org.org)

이밖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TRACECA와 연계하여 아제르바이잔의 항구, 고속도로, 도로 사업에 자본투자를 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바쿠시(市)를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해운 수송을 연결하는 국제물류센터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인터모달적 운송역할 기대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러시아를 잇는 남북교차,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등의 명성을 바탕으로 주요 국제운송로에서 동서양의 교차로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터모달(intermodal)¹⁾적 운송역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를 위한 운송회랑 건설사업인 TRACECA에서 중심국가가 되어 중앙아시아의 물류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교통망 구축과 고속철도 건설 계획

아제르바이잔의 인프라 개발은 노후된 철로·도로 보수와 교통망 구축에 있다. 이 중 철도개발 사업은 이란-아제르바이잔-러시아를 잇는 철도망 복구사업, 바쿠-그루지야-터키를 잇는 철도망 구축사업, 그리고 노후된 철로 보수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바쿠-그루지야-터키 철도망 구축사업은 터키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며, 관련국인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 이외에 중국과 카자흐스탄도 이 사업에 참여한다. 공사는 2007년 봄에 시작하여 2008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총 공사비용은 4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2억 2,000만 달러는 그루지야가 부담할 예정이며, 그루지야가 부담하는 사업금액은 아제르바이잔이 무이자·장기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바쿠-그루지야-터키 철도망이 구축되면 아제르바이잔은 중국·중앙아시아의 대(對)유럽수출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란-아제르바이잔-러시아를 잇는 철도망 복구사업은 아제르바이잔정부의 ‘국가 프로그램 2004~2008’에 명시된 철도사업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단계로 아제르바이잔 남단에 위치한 아스타라(Astara)시와 이란 라쉬트(Rasht)시 간 250km 철로망 확장사업이 2004년에 시작되어 2008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남북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아제르바이잔은 바쿠와 그루지야간 503km 노선의 고속철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2006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기점으로 아제르바이잔은 개발 및 시험운행 중에 있는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1) 각종 수송기관을 통합·이용하는 국제복합운송

09

우크라이나, 정치혼란으로 대내외 경제정책 난항

친서방 유슈첸코 정권의 총선 참패와 친러 야누코비치 총리 등장

2006년 3월 총선에서 여당인 ‘우리 우크라이나당’이 의회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지역당, 사회당, 공산당 등의 야당들이 연정을 구성하여 의회에서 제 1야당인 지역당의 당수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2006년 8월에 총리에 임명하였다.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총리는 예전부터 친러 대외정책을 표방해왔기 때문에 친서방 정책을 지양하고 있는 유슈첸코정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2006년 초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총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헌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유슈첸코 대통령의 친서방 정책은 더욱 힘을 잃게 되었다.

표. 2006년 우크라이나 총선 결과

정 당 명	득 표 율(%)	의 석 수(석)
지 역 당	32.1	186
티모센코 블록	22.3	129
우리 우크라이나당	14.0	81
사 회 당	5.7	33
공 산 당	3.7	21
기 타	22.2	0
총 계	100.0	450

자료: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참패의 원인: 경기침체, 러시아의 압박

오렌지 혁명의 주역인 유슈첸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05년 3월 취임한 후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척결과 친서방 정책을 국정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유슈첸코정부의 집권 1년 동안 대외경제환경 악화와 러시아와의 불화로 우크라이

나 경제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더욱 불거지면서 경제성장률이 2% 대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급기야 2006년 1월 1일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일방적으로 3일간 중단되면서 유슈첸코정부의 친서방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하였다. 집권여당의 패배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 악화, 오렌지혁명의 주역인 여권세력의 분열,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 그리고 친러시아 성향을 지닌 동부·남부지역과 반러시아 성향을 지닌 서부지역의 고질적 지역감정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무시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제1교역국, 러시아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양국간 정치적 관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1의 수출·수입국로서 전체 수출입에서 각각 21.9%,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체 에너지 수입량의 85%를 공급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철강산업과 금속산업 등 에너지집약산업이 주력산업인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산 소고기와 유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와 천연가스 공급가격 인상으로 우크라이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대외경제정책은 러시아를 무시한 채 서방으로의 편입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7년에도 대내외 경제정책 혼란 계속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EU와 NATO 가입을 추진하던 외무장관이 2006년 12월 초 국회에서 해임되었고, 2007년도 우크라이나 정부예산안의 통과가 지연되었으며,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지연되는 등 우크라이나 국내외 경제정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누코비치 총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친러성향의 내각을 구성하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및 NATO 회원국 가입을 반대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고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려는 미국과 EU와의 관계는 소원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유슈첸코정부가 지향해온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은 야누코비치 총리의 친러성향 내각구축으로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은 2006년 12월 WTO 가입을 위한 법안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예정대로 순조롭게 금년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투르크메니스탄의 니야조프 사후(死後) 정치 · 경제 전망

엽기적인 독재자 니야조프 사망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독재자로 군림하던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이 2006년 12월 21일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하였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직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니야조프는 1993년 자신의 이름을 ‘투르크멘바시(투르크멘인의 아버지)’로 개명하고, 1999년 헌법을 개정하여 종신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니야조프는 독재를 넘어서 엽기적인 개인 우상화로 유명했다. 달력의 4월과 5월 명칭을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가수들의 립싱크와 발레, 오페라 등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본인이 직접 집필한 『루흐라마(Ruhrama, 영혼의 책)』라는 책을 이슬람 코란과 동격화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교과서로 채택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90%를 여기서 출제하도록 하였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ères)가 발표한 200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언론자유지수는 북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니야조프는 엽기적인 독재 행각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경제로 만들었다.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체제전환시 IMF 처방을 따르지 않았으며, 세계 3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얻은 소득으로 수입 대체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하며, 정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고 있어 투자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이 높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양아버지, 베르디무하메도프

지난 2007년 2월 11일에 새로운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체 유권자의 98.65%가 참가한 이날 대통령 선거에서 89.23%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투르크메니스탄 선거 사상 최초로 복수 후보가 나선 가운데 직접·비밀투표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철저히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후보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6명을 지명하는 방식이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베르디무하메도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정부는 해외 망명 인사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국경을 차단하였으며,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누르베르디 누르마메도프를 가택 연금하는 등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치참여 방해로 자행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2007년 2월 14일 선거결과 공포와 동시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투르크멘바시(투르크멘인의 ‘아버지’)였던 니야조프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투르크멘인의 ‘양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다만 니야조프보다는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khammedov) 대통령 약력

- 1957년 수도 아쉬하바트 근교 바바라프(Babarap)에서 출생
 - 치과의사
 - 1997년 보건부 장관으로 입각
 - 2001년 부총리 임명
 - 2006년 12월 21일 니야조프 사후 니야조프 장례위원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
-

베르디무하메도프 정권, 점진적 경제개혁 가능성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접근 확대, 해외 유학 허용, 학제 개혁 등을 제시하며 개혁적인 자세를 취해 투르크메니스탄의 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투자 부족으로 에너지 및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이를 대처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카자흐스탄식 경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니야조프 대통령의 사망은 한국의 대(對)투르크메니스탄 자원외교에 돌발변수로 작용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원유와 가스의 자주개발 확대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최근 구체화 단계에서 니야조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협력업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니야조프보다 합리적인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대통령이 된 것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점진적인 경제개혁과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막대한 천연가스 공급처이자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KIEP 연구보고서

-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이홍식 · 강성진

-
-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곽재성

-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Chang Jae Lee ed.

-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 on East Asian Economies

Doo Yong Yang ed.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2007년에도 세계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인가?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향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본 자료는 일반 독자들이 2007년 세계경제의 향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 · 집필되었다. 복잡다기한 세계 각 지역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별 이슈를 망라하여 주요 지역 · 국가별로 10대 중점이슈를 선정하였고, 평이한 서술을 통해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종 표와 그림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이 부담 없이 세계경제 이슈에 접근하도록 각별히 노력하였다.